

2010.2.8(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요약)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목 차>

< 논의의 배경 >	1
I.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	5
1.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5
2. 금융환경의 변화 및 전망	6
가. 글로벌 규제 및 감독의 변화	6
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10
다. 글로벌 금융산업의 변화	13
라.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	17
3. 향후 과제	20
II. 우리나라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23
1. 금융의 역할 및 평가	23
가. 비전 수립 관련 고려사항	23
나.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	33
다. 한국금융의 SWOT 분석	38
2. 국내금융의 비전 및 발전 방향	40
가. 금융강국의 발전 및 시사점	40
나. 금융비전과 정책목표	46
다.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본 비전의 기능적 체계	54

Ⅲ. 정책과제 59

1. 금융시스템의 안정 59

가. 건전성 규제 및 감독	59
나. 외환부문 건전성	66
다. 가계부채 및 기업구조조정	70
라. 예금보호제도	79
마. 금융감독	83
바. 지급결제제도	89
사. 정책금융시스템	91

2.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95

가.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95
나. 금융소비자 보호	100
다. 고령화 대비 금융의 역할 제고	105
라.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	111
마. 녹색금융	117
바.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120
사. 금융산업의 공익성	123
아.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125
자. 금융지주회사 체제	129

3. 금융글로벌화 정책	134
가. 기존전략의 평가와 과제	134
나. 금융중심지 정책	146
다. 금융회사 및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149
 4. 금융산업의 경쟁력	 158
가. 은행산업	158
나. 금융투자산업	177
다. 보험산업	210
라. 비은행산업 및 서민금융	229
 5. 금융시장의 효율화	 241
가. 단기금융시장	241
나. 주식시장	245
다. 채권시장	249
라. 파생상품시장	253
마.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증권시장	259
바. 퇴직연금시장	262

< 논의의 배경 >

-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금융은 위기극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위기 이후 국내금융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는 퇴출전략(exit plan)을 적절히 시행하여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소프트랜딩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또한 위기 이후에 재편되는 세계 금융질서를 염두에 두고 한국금융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비전을 제시하고 발전과제를 실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 이번 위기 과정에서 한국금융은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취약요인을 재점검하여 대내적 안정성과 대외적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
 - 국내시장에 나타난 쏠림현상과 과당경쟁에 따른 원화유동성 문제와 외환시장에 나타난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외화유동성 문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
 - 또한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추진되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선진금융과는 상당한 경쟁력 격차가 있음.
 - 이에 따라 국내금융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실물부문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선진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과정에서 시작된 국제적 공조체제는 G-20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FSB 및 BCBS 등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금융의 국제규범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원리가 퇴조하는 가운데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건전성 규제 및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과도한 대형화와 겸업화를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중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규제 개편 논의의 국내 수용 가능성 수준과 우리 금융의 개편 과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또한 각국은 금융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 선점과 금융부문의 역할을 새로이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

- 이번 위기 이후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새로운 규율과 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은 경쟁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들은 금융위기로 발생한 금융산업 및 시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견실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음.
- 각국의 금융제도 개선 노력은 궁극적으로 각국의 금융경쟁력 제고와 성장기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금융의 경우, 이번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선진금융과 수준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에서 규제일변도 및 축소지향형인 새로운 선진금융의 움직임과는 다소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선진금융은 실물부문에 비해 금융이 과다하여 버블을 유발하였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초래된 반면, 국내금융은 실물부문에 비해 오히려 취약하여 추가적 발전과 개혁이 요구됨.
-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파생 및 구조화 상품을 널리 취급하는 선진금융과 달리 국내금융은 자본시장의 발전과 수준이 낮고 대외적 차원의 국제화도 초기단계에 불과함.
- 더욱이 금융제도와 관행 등 관련 소프트웨어와 금융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금융은 그동안 당면한 위기극복에 주력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함.

□ 특히 이번 위기를 통해 선진금융이 상당기간동안 구조조정과 안정적 성장을 지향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금융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와 발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진국의 가계부문 및 금융회사가 정상화되려면 상당기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고 동 기간중 이들은 안정적 또는 긴축적 성장을 지향할 수밖에 없음.
- 반면 외화유동성의 조기 극복을 통해 이번 위기 과정에서 직접적인 손실을 크게 입지 않았고 금융개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국내 금융부문은 안정성을 전제로 한 금융부문의 체질개선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실물부문과의 동반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글로벌 위기 이후 전개될 금융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금융정책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국내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는 한국금융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금융시장의 효율화,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씩 논의함.
- 우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 변화를 전망한 뒤, 국내금융의 SWOT 분석과 선진 금융강국의 발전 모습을 통해 한국금융의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함.
- 실물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한국금융의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비은행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 과제도 도출함.
- 또한 금융산업 발전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의 변화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구축 과제들을 살펴봄.
- 끝으로 금융시장 및 인프라는 선진금융과의 격차가 크고 선진화를 위한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이므로 이들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하고자 함.

I.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

1.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

-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금융위기는 과잉유동성과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거시금융의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규제 및 감독 미비라는 미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
- 이번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산출량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이며 잠재성장률 또한 상당 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증가한 재정적자로 인하여 금융위기 이후 당분간 각국의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복리후생 정책 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번 금융위기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나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진행중
 - 이미 미국, 영국, 유로 등에서는 향후 금융감독 개혁의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도 향후 글로벌 금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 최근 중앙은행이 실시한 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이는 향후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시하였던 비상조치적 성격을 지닌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은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향후 경기회복에 맞추어 시장자율로 점차 환원시킬 필요
 - 또한 향후 재정건전성의 회복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

2. 금융환경의 변화 및 전망

가. 글로벌 규제 및 감독의 변화

1)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 및 운용체계의 철학적 근간을 이루었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의 한계점이 노정되면서 경제 및 금융시장 흐름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0여년 동안 금융시장은 시장참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
 - 영국과 미국 등 금융선진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및 시장관행이 국제규범(global standard)으로 정착
 -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후발국들도 이러한 국제규범에 따라 규제완화와 금융회사 대형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
 -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금융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시장 폭과 깊이의 증가 등 금융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
 - 그러나 기존의 금융규제 체계는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증가, 파생상품의 위험 간과, 금융과 실물의 괴리 등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이번 금융위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실패
-
- 그 결과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케인지안 시장주의의 장점이 부각되었으며, 금융규제 체계 및 시장의 패러다임도 이를 반영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

-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 규제완화 등 기존의 규범은 점차 그 중요성이 약화되는 추세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전통적 건전성 감독강화뿐 아니라 거시전전성 감독 도입 및 회계·신용평가 등 규제·감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수준도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양상
- 금융회사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업 및 투자은행의 경우 도매자금 조달 억제, 유동성 및 자본 확충 등 새로운 감독기조 하에서 전통적인 핵심업무의 중요성이 부각(back to basic)
- 또한 이들 금융회사는 유사한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금융위기시 군집행동을 유발하였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회사별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불가피
- 특히 헤지펀드, PEF 등 대체투자기구는 투자자의 자금이탈, 기존 투자전략의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대신 국부펀드 등 새로운 규제체계로부터 자유로운 투자자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위기는 생보사와 손보사간, 그리고 유럽 보험사와 미국 보험사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연금상품과 위험해징을 위한 기존 보험상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위기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험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맞이할 가능성
- 한편, 금융위기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이 금융위기 책임론으로 이어져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기 책임부담금 징수 논의도 대두

2)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정비

-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는 구체적으로는 주요국 및 국제적 협의기구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감

독체계 개편 작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금융감독 개편 작업 준비중

(건전성기준 강화)

- 대규모 손실이 예상외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한 금융회사들의 충격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자본 기준 등의 상향 조정 논의
 - 특히 필요 핵심자본규모의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탄력적인 자본적립제도의 필요성도 논의
 - 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의 차별화 논의도 병행하여 진행중
 - 한편 유동성 규제와 함께 총레버리지 비율(gross leverage ratio) 등 전체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
 - 나아가 글로벌 유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은행의 대응력을 증가시키고 국가간 유동성 조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유동성리스크 감독의 조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중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강화)

- 이번 금융위기로 인하여 투자자산 위험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투자자산이나 금융회사 부실처리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에서 각종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
 - 개별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
 - 특히 유동화시장 등 그림자금융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표준화 장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 표준화된 상품의 위험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규제 차익의 감소)

- 한 국가내에서 금융권역간 규제 및 감독의 상이함 또는 국가들 상호간에 규제 및 감독의 상이함에서 오는 규제차익이 감소할 전망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역별로 규제 및 감독을 차등 적용하면서 발생하던 권역별 규제차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가능성
 - G20 회의의 정례화와 함께 금융정책의 글로벌 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 및 헤지펀드 등에 대한 감독 및 규제가 강화되고 국가간 규제차익도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

- 그간 기업의 자율적 경영사항으로 인식되던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금번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보상체계가 경영진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야기하여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제기
 - 금번 금융회사 이사회가 과도한 보상만 챙기고 리스크 관리 등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금융소비자보호)

- 서브프라임 고객에 대한 모기지의 불완전판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인식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독립 전담기구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규제측면의 주요 의제로 부각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미국, 홍콩 등 각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도 확산될 전망
 - 미국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를 설립함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기로 하였음.
 - 홍콩은 핵심투자정보 표준화, 은행 고유상품과 금융투자상품간의 방화벽 강화, 고객의 위험성향에 맞는 금융상품 판매, 금융상품 내재위험의 지속적 공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안을 마련

- 금융규제 및 제도 측면에서는 미국의 CFPA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분쟁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다른 나라에도 신설될 가능성이 큼.
 -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와 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
 -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금융회사의 책임강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규제비용 상승
 -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성이 큼.

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차별화(decoupling), 대형화와 겸업화의 약화, 규제 및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등의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1)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차별화

- 미국에서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로 선진국 금융회사의 부실과 구조조정을 유발한 반면 신흥시장국 금융회사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의 정도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신흥시장국 금융회사가 입은 피해는 자력으로 흡수할만한 수준에 머물렀음.
 - 선진국은 경기침체에서 회복되는 속도도 느린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신흥시장국은 예상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자금도 이들 국가로 빠르게 유입되는 양상
 - 아시아 신흥시장국으로의 자금유입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큰 틀에서 볼 때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기존 선진국 경제에서 중국 등 신흥시장국으로 점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동아시아 지역이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3대 경제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보임.

-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경제주도권의 이전(A) 정도, 국가간 금융정책의 공조 수준(B)의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유형을 달리 할 전망
 - A가 빠르게 진행되고 B가 강화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유럽, 동아시아의 3극체제로 이행될 것이며, A는 빠르게 진행되거나 B가 약화되는 경우에는 다극체제가 도래할 가능성
 - 반면 A의 진행이 더디고 B가 강화된다면 현행 선진국 주도의 경제·금융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2) 금융부문의 성장세 둔화

- 가계 및 금융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디레버리지 과정을 통해 점차 축소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강화된 규제·감독, 위험에 대한 시장의 재인식 등으로 레버리지 증가세가 위기이전보다 둔화될 전망
 - 이번 금융위기가 가계 및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하므로 향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급등이 제한될 가능성
 - 또한 금융 및 자산가격 안정 등을 위한 통화정책 활용이 예상됨에 따라 가계의 경우에도 레버리지 상승폭이 위기이전보다 제약될 전망
 -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성장세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둔화될 것이며, 금융산업의 성장속도가 실물경제의 금융수요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실물경제 성장세와 유사해질 가능성

3)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 약화

- 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 금융회사는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이종업종간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 및 겸업화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세계적인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이 등장
 - 선진국의 선도금융회사들이 주도하였던 대형화 및 겸업화는 신흥시장국 등 선진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글로벌 추세로 정착
- 그러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화 및 겸업화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향후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는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이번 금융위기사 Citi, Goldman Sachs, Merrill Lynch, AIG, Washington Mutual 등 대형금융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을 추진
- 공적자금 투입은 대형금융회사 도산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도 대형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 농후
- 이에 따라 거대 다국적금융회사(too-big-to-fail cross border institutions)의 축소(wind down), 정리절차 마련(resolution regimes), 자본, 유동성, 예금보험료 등의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부과 등이 FSB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
- 일각에서는 대형금융회사를 분할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제시

4) 장기 · 안정적인 투자 증가

- 금융회사의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장기 안정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의 기초여건을 고려한 장기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 성장성이 높은 신규 산업이나 기업을 선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할 가능성

다. 글로벌 금융산업의 변화

1) 은행

- 향후 유동화 · 구조화상품 시장의 위축과 금융상품 및 금융중개구조의 단순화로 인해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

- 향후 규제강화로 유동화증권시장(자본규제) 및 MMF시장(유동성 규제)이 위축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문의 기능적 분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의 논의 지속
 - 이 경우 정부가 은행의 상업·소매은행 부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것(예금보호 등)이 가능하며, 투자은행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위험에 비례하여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
- 건전성규제 강화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거나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중요해지면서 은행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높이고 예수금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단기자금 조달을 제한하고 예수금과 장기자금 조달의 비중을 높이는 유동성 규제 및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의 차입규모가 제한되고 ROE가 낮아지며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할 전망
 - 금융위기를 통해 안정적인 예수금 기반 확보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은행은 지역영업망 강화를 통해 예수금 기반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 금융위기 과정에서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시장과 신용리스크 구분의 취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부문 간 독립성 유지, 독립적 보고채널 확보, 이사진의 위험관리 정책 평가 의무화 등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될 전망

2) 금융투자업

-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금융 등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나 투자은행 산업의 수익성과 영향력은 감소할 전망
- 향후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와 소비자·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투자은행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강화로 금융상품의 구성 및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성이 저하될 전망

- 기업금융, 세일즈·트레이딩, 리서치 등 각 부문별로 전문화되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투자은행(boutique investment bank)들이 기존 대형투자은행과 경쟁하면서 성장할 가능성
- 헤지펀드 자금 중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헤지펀드는 due diligence 장기화, 투명성 제고 등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와 자산가격 폭락에 따라 시장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은 투자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증대
 -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due diligence 기간이 늘어나는 동시에 투명성 제고와 편입자산 및 펀드구조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임.
 - 헤지펀드가 안정적인 투자자 확보를 위해 역내 등록을 통해 기관 투자자와 함께 개인투자자를 유치하는 가운데, 뮤추얼펀드는 공매도, 다양한 자산투자, 절대수익투자(absolute return investment) 등의 헤지펀드 투자전략을 원용하여 양자의 구조 및 투자전략이 유사해질 가능성
- 사모펀드 산업도 관련 규제강화와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유럽의 관련 규제 강화로 사모펀드의 위험관리·투명성·공시 강화,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
 -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 매입 이외에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 M&A 자문, 자본시장 투자 등으로 업무영역을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
- DB(defined benefit)형 혹은 자유납입형(401(k) 같은) 연금이 한계를 노정함에 따라 이 둘을 혼합한 형태의 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최종임금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DB형은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금융위기를 통해 연금의 자산가치가 급감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 것으로 판단
- 가입자가 자유로이 투자하여 누적된 수익을 가져가는 401(k)형 연금은 가입자의 합리적이지 못한 투자결정으로 인해 한계가 노정
- 따라서 가입자가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을 감안한 투자·납입 결정을 내리게 유도하고 누적된 연금을 퇴직시 지급받는 tailored "default options" 형태의 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

3) 보험

- 향후 보험산업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속도의 성장성 및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의 회복 및 금융시장의 안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보험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도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렵고 주요국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1980~90년대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주요국 보험사의 경우 일부 핵심 주력상품이 금융시장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당 보험사의 전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상품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업무 다각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생보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시장이 위축되면서 성장

세가 크게 둔화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AIG 사태 등 금융위기를 거울삼아 보험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 다각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예를 들어 보험사와 재보험(reinsurance)사가 재난위험 및 장수(長壽)위험을 분산·이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할 것으로 보임.
-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보험사 투자영업의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산운용 수익원 다각화를 추진할 전망

라.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

- 국내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규제 및 감독이 강화될 것이며, 기업자금수요의 변화, 고령화, 녹색 및 연금 수요의 증대에 따른 고객수요의 다양화와 글로벌화 추세가 계속될 것임.
- 다만 국내금융은 글로벌 금융과의 갭으로 인해 대형화, 겸업화 및 규제완화 등 일부 측면에서는 선진금융국들과 향후 추세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1) 건전성 감독 강화

- G-20, FSB 등 국제적으로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금융규제 및 감독 개편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
- 국제적으로 논의중에 있는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 국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할 전망

2) 고객수요의 다양화

- 금융회사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하는 상품도 다양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주 고객군을 위한 상품개발 역량이 금융회사의 장기 생존력을 좌우
 - 소매고객의 경우 다양한 만기의 상품 및 수익성과 위험도가 차별화된 상품의 공급이 필요
 -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자문, 신디케이트 론, M&A 중개 및 자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및 해외 고수익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국내금융시장의 성장률 둔화를 감안하면 고수익채권시장 및 해외투자 활성화로 연결

- 국내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됨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기연금저축과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인해 예금 이외의 자산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임.
 - 특히 고령층의 경우 위험기피 성향이 높고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므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의 순으로 금융상품을 선호하여 장기, 채권형 및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의 녹색금융시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이 불가피할 전망

- 국책금융회사를 통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며, 법·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탄소배출권시장 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서민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임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업적 원리에 따라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는 신용보강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보완·지원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3) 글로벌화

- 국내금융의 글로벌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세분화 방향에 따라 선진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소 달라질 가능성
 -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 형태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금융체제가 유지된다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것임.
 - 그러나 다극체제나 3극체제로 전환된다면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속한 지역 국가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며 개별시장별로 세분화되는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은 크게 약화될 전망
 - 해외금융회사의 국내진출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은 일부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국내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될 전망
 - 각종 연기금과 개인자산 성장 등에 힘입어 국내자본이 빠르게 축적되는 반면 규모면에서 국내자본시장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는 불가피

4) 대형화 및 겸업화

- 국내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 수준은 세계적인 금융회사와 비교할 때 아직도 초기단계에 불과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아직도 추가적인 진전이 예상됨.
- 그동안 M&A를 통해 대형화를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이 세계시장에서 50위권에 들기 힘들며, 비은행의 경우에는 M&A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임.
- 또한 지주회사 방식의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1~2 업종에 집중되면서 자회사 상호간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회사가 대형화 및 겸업화는 국제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당분간 확대될 수밖에 없음.

3. 향후 과제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규제·감독의 강화와 저성장의 지속으로 금융의 규모 축소, 수익성 저하, 건전성 증대 등의 효과와 함께 시스템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이번 위기를 통해 건전성 감독 및 시스템리스크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면서 금융의 건전성 및 유동성과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국제적 차원에서 강화될 것임.
- 대형화 및 겸업화는 시스템리스크와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다소 약화될 것이며,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겸업화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규제·감독 강화의 결과로, 금융산업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일부 축소될 것이며 주요국 금융산업과 금융회사들의 상대적 위치와 구도도 일부 변화할 것으로 예상

- 레버리지, 시스템리스크, 건전성감독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인 규범 재정립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글로벌금융의 외형적 팽창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
- 이번 위기에서 논란이 되었던 IB, 각종 펀드, 그림자금융 등의 상대적 규모는 위축되는 반면,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은행권의 상대적 위치는 상승할 전망
- 한편 위기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수 선진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일부 부실금융회사의 경우 M&A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업계의 순위 변화가 예상됨.

□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모습도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우선 글로벌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의 영향으로 국내금융의 규모 축소와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와 수익성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임.
- 또한 장기성과 중심의 보수체계가 정립되면서 과당경쟁과 미래의 부실 잉태 요인을 제공한 단기성과주의 문화가 후퇴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 기조가 정착될 전망
- 특히 은행권은 일부 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M&A로 시장구조개편이 계속될 것이며, 글로벌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융그룹화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추세는 계속될 전망
- 또한 국내금융회사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동남아, 서남아 등 개도국들은 이번 금융위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현지시장의 판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함께 해외 금융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유치가 확대되는 쌍방향 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이번 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산업 도약을 위해 선제적인 금융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
 - 국내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에 비해 양적 및 질적 수준, 자본시장 발전, 신금융기법 개발, 금융국제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가 나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 다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선진국 금융시장의 문제는 물론 국내 금융시장 고유의 문제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
 - 특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재편될 세계 금융시장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국내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목표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이 중요

Ⅱ. 우리나라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1. 금융의 역할 및 평가

가. 비전수립 관련 고려사항

1) 금융의 독자산업화

- 금융은 여타산업과 달리 자금중개, 지급결제, 위험관리기능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기능이 내재화되어 있는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점차 중요해짐.
 - 자금조달비용의 절감, 금융위험의 분산 및 완화, 금융정보의 창출 등에 의한 금융부문의 고용확대 및 수익창출, 해외시장 진출은 거시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독자산업 위상을 갖추게 함.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금융산업을 단순히 실물을 지원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주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독자적으로 부수적인 서비스 확대에 주력해왔음
 - * 위험관리, 투자역량, 정보창출 등은 본질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부가적 서비스라 할 수 있음.
- 국내금융의 경우에도 금융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요구되는 실물경제의 지원기능을 충분하게 이행하는 한편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고려해야 함.
 - 개방 및 자유화를 통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선진금융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금융부문의 독자산업화를 통한 역량확충이 요구됨.

- 특히 금융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함에 따라 제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융의 실물지원기능과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현재의 우리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될 필요
- 향후 국내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 금융하부구조의 구축, 금융역량의 확충, 금융자산의 심화 및 축적, 글로벌화의 실질적 정착 등이 필요
 - 국내금융은 실물경제의 효과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갖추어야 함.
 - * 실물경제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외 자금조달 및 지급결제 시스템, 실물경제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체계, 원화가치의 안정화를 위한 외화보유고 확보 등이 해당
 - 금융역량의 경우 대내외 금융수요를 발굴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대내 자본력과 금융인력, 네트워크, 금융회사를 육성하여야 함.
 - 금융자산의 지속적인 축적은 금융자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과 장기자금 및 위험자본의 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시장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독립산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2) 대형화

-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른 글로벌화와 종합금융서비스 체계의 구축, IT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금융그룹화를 촉진하였음.

- 특히,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상업은행까지도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 확대 및 파생·자본시장 투자증대 경쟁에 참여하여 가속화되었음.

- 반면 금융회사의 대형화로 인한 대마불사(TBTF), 연계위험 및 복합위험의 증대, 잠재경쟁의 약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외를 확산시킴으로써 금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다만, 국내금융의 경우 글로벌 대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체계 등으로 선진국 금융회사에 비해 레버리지가 낮고 특히 자본·파생상품시장이 상대적으로 미성숙됨에 따라 글로벌 기준 대비 규모가 아직 영세한 상황

-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개혁 방안 중 대형화 규제, 즉 대규모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제한과 관련해서는 우선 글로벌차원에서 각국별 상황 및 입장이 상이함에 따라 공통기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

- 따라서 글로벌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금융의 대형화를 억제하는 정책기조는 현 단계에서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스템안정성 및 소비자효용과 관련된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 국내금융의 글로벌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은 국내외의 현격한 격차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로 인식

- 다만 대형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소비자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형금융그룹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건전성

및 안정성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국내금융의 전문화 여건 강화를 위해서는 진입기준의 세분화와 신속퇴출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장치의 강화를 결합함으로써 안정성 및 역동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3) 겸업화

- 그 동안 국내금융은 자회사, 내부겸영, 업무제휴·위탁 방식으로 금융권역간 겸업화가 진행되어 왔음.
 -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산법상 출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출자 승인을 면제하는 등 자회사 방식의 업종간 상호 진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해 왔음.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방식으로 여러 금융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이러한 자회사 방식 겸업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내부겸영 방식의 경우에는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의 본질업무간 겸영을 제한한다는 원칙하에 부분적으로 겸영을 허용해 왔음.
 - * 금융투자업은 증권(국공채 제외) 인수 및 주식중개업무를 제외하고 타업종에서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겸영이 이루어져 왔으며,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보험판매는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는 허용됨
 - 업무제휴·위탁방식으로도 겸영이 진행될 수 있으나 금융업에서 본질업무의 위탁은 인가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위탁을 통한 겸업화는 내생적인 한계를 보유하게 됨.

<표>

각 업종별 본질업무

은행 산업		예·적금, 대출, 내·외국환, 채무보증·인수, 어음발행·할인·매매 등
금융 투자 산업	투자매매업	계약체결·해지, 인수, 가치분석, 매매관련 업무 등
	투자중개업	계약체결·해지, 일일정산, 증거금관리, 거래 종결, 매매관련 업무 등
	집합투자업	펀드 설립, 운용 및 평가 등 관련 업무
	투자자문·일임업	계약 체결·해지, 운용업무 등
	신탁업	계약 체결·해지, 보관·관리·운용업무 등
보험 산업	보험계약업	인수·체결, 보험금 지급 심사 등

□ 그 동안 추진된 금융권역간 겸업 허용은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겸업화의 진전이 주로 업종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업종간 지나친 과열 경쟁이나 대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측면도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현재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도한 겸업화는 이해상충 발생이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이러한 겸업화의 부작용은 자회사 방식 또는 업무제휴·위탁 방식의 겸업화보다는 내부겸영 방식의 겸업화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금번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규제 흐름도 과도한 겸업화를 경계하고 있는 상황임.

-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감독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금 및 건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는 추가적인 겸업화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개혁방안과 관련, 상업은행기능과 투자은행기능간 분리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

- 현재까지 대형은행의 위험투자를 어느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각국별 입장차이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

□ 이러한 국제적 논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겸업화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겸업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선별적(scrutinized)인 방식으로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음

- * 업종별 특성뿐만 개별금융회사의 수준 및 규모,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함
- * 주요 금융권역 고유업무의 내부겸영은 권역 고유의 경쟁력 저하 및 조직문화의 희석, 리스크 전이 및 시스템리스크 유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를 유도

-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영 등 내부겸영 방식의 경우에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와 자금운용 측면에서 유가증권 투자 한도(자기자본의 60%)를 통해 상업은행의 투자은행화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할 필요

4) 규제완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특히 국제기준의 도입과 수용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그 영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국내금융은 제도적 측면이나 글로벌 위상, 발전단계 측면에서 아직까지 선진시장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에서 대내적 발전단계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금융은 금융산업의 규모, 금융자산의 축적, 해외진출 등에 있어서 실물부문이나 선진 금융시장에 비해 아직까지 발전의 여지가 높은 상황임.
 - 자본시장의 경우 글로벌 투자은행과 달리 레버리지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익구조 및 글로벌화 측면에서 심화와 발전이 요구됨.

-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되는 국제적인 금융규제의 방향과 국내금융과 글로벌금융의 갭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국내금융에 대한 규율체계는 강화 또는 완화 일변도의 방향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규제 강화의 움직임과 글로벌 관행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필요로 함.

- 향후 국내금융에 대한 규제정책은 시스템안정성과 거시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율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발전 및 심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하는 양 방향 정책을 유지해야 함.
 - 글로벌 금융규율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

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율체계의 정비와 강화는 향후 금융 정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음.

- 주로 시스템안정성, 거시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 감독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업무의 내부검영,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확대, 집중위험의 확대, 기회주의적 자본조달, 고객예탁금의 보호 등이 해당됨.

- 반면 시스템안정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화 추이를 감안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음.

<별첨> 미 금융개혁방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제안 배경

- ☐ 미국에서는 금번 금융위기가 대형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와 외형확장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부터 초래되었다는 인식 하에 이를 억제하는 차원의 금융개혁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어 파산될 경우 경제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실화되더라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TBTF))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 특히, 위기이후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대규모 공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대형 금융회사들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저항하면서 아직도 예금보험과 같은 공적 안전장치를 바탕으로 과다한 위험에 투자하는 과거의 잘못된 금융관행(old practices)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주요내용

- ☐ 최근 오바마 美 대통령이 제안한 금융개혁방안은 크게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와 규모에 대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음

- ☐ 우선 업무범위 규제(Limit the Scope)와 관련하여서는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헤지펀드, PEF 및 고객과 무관한 自社 이익을 위한 자기자본투자(proprietary trading operation) 부문을 소유·투자 또는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

- ☐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규모에 대한 규제(Limit the Size)와 관련하여서는

- 대규모 금융회사의 인수·합병(consolidation)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

3. 시사점

□ 우선 영업범위(Scope)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은행권의 고위험 투자행위 자체는 미미한 수준임

○ 헤지펀드의 경우 설립실적이 없고, PEF의 경우도 '04년 제도도입 12건 7,450억원으로 총자산(1,899조원)의 0.04% 수준에 불과

○ 또한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60%), 자회사 출자 한도(자기자본의 15%) 등 직접적인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은행권의 트레이딩 자산비중은 총자산의 5.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총자산 대비 트레이딩자산 비중 :

국내은행 5.2%, 씨티 19.5%, JP모건체이스 23.4%

⇒ 국내은행권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하에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미국 방 안대로 국제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영업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다음으로 규모(Size) 제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각국별로 시장집중도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며 우리의 경우 규모 면에서도 세계 100대 은행은 3개 밖에 없는 수준**

* 은행권 시장 집중도(CR3, World Bank('07)) : 한국(0.53), 미국(0.34), 일본(0.46), 영국(0.60), 독일(0.71), 프랑스(0.58), 싱가포르(0.94)

** 세계 100위 은행권 내 국내은행은 3개에 불과, 1위인 국민은행도 74위 수준

⇒ 각국별로 처한 현실에 따라 입장차이가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규모제한 규제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나.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

- 국내금융이 금융 고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물부문 지원 기능, 신성장동력 기능, 금융소비자의 효용 만족,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 측면에서 평가해 봄.

1) 금융의 실물부문 지원 기능

- 국내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확대 노력이 요구됨.

*** GDP대비 금융자산 비중(직접금융/간접금융, 07년) : 일본 3.54(2.87/0.67), 영국 5.55(3.63/1.92), 스페인 3.02(2.41/0.61), 이탈리아 3.02(2.43/0.59), 한국 1.70(1.56/0.14)**

- 또한 국내의 자금중개기능은 간접금융 중심이므로 향후 장기자금 및 신설·벤처기업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직접금융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음.

*** 2000년~2008년간 민간부문의 자금조달비중은 금융회사 대출금이 85%(예금은행 70%, 비은행 15%)를 차지하는 반면 회사채발행은 5%, 주식발행이 10%를 차지**

- 특히 고수익채권시장 위축 및 증권시장의 신규상장 정체 등으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 체계 미확립
- 또한 자본시장 미발달로 시장 규율을 통한 경영투명성 및 주주 책임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이와 같은 자금중개기능의 구조는 개발경제시대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자금 동원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나 향후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자율화된 시장에서는 취약점으로 등장
-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접금융이 크게 발전했다고 이야기 하

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간접금융마저도 아직 취약한 상태임.

*** GDP 대비 간접금융의 비중은 0.14로서 여타 선진국의 10~50% 수준이며, 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중은 2007년말 OECD 국가중 16위에 불과함.**

□ 국내의 지급결제 및 위험관리기능도 그동안 실물부문 발전과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계속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수준의 제도 운영과 관행 정착에 어려움이 많음.

- 위험관리기능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선진형 모습을 갖추었으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금융회사의 심사역량 부족 및 신용정보시스템 미비 등으로 금융을 통한 위험분산 및 관리기능 미흡
- 더욱이 위험관리에 대한 경영층의 인식 미흡, 위험을 고려한 영업행태 미비, 직군별 전문인력 관리 미도입, 미시적 및 거시적 위험 통합 등 측면에서 아직도 취약함.

2) 신성장동력 기능

□ 금융산업은 제조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의 금융부문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

- 국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산출액)은 70% 수준으로서 제조업의 20% 수준, 전체 산업의 40%대에 비해 상당히 높음.
-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국제기관인 IMD, WEF의 평가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부문 경쟁력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금융부문경쟁력(IMD) : 37위('06) → 31위('07) → 40위('08) → 33위('09)**

*** 금융시장성숙도(WEF) : 49위('06) → 27위('07) → 37위('08) → 58위('09)**

□ 국내금융회사의 규모 및 세계화 정도, 금융전문인력 등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

○ 자산·자본 규모 등 국내 금융회사의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아직까지 적은 수준

* 세계 1000대은행(08년, 개) : 미국 159, EU 258, 일본 97, 중국 52, 인도 32, 대만 28, 한국 10

○ 국내은행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TNI지수(Trans National Index)는 4.3%로서 주요 선진국의 1/1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함.

* TNI 지수(%) : 미국 24.7, 영국 40.3, 프랑스 37.5, 독일 42.7

$$(TNI지수 = (해외자산/총자산) + (해외수익/총수익) + (해외인력/총인력) \times 100 \div 3)$$

○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금융전문인력은 경쟁대상인 홍콩·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보조인력에 비해 전문가(10% 수준) 비중이 낮은 등 질적으로 미흡한 수준

* 금융인력 중 비중(보조인력/전문가+관리자, %) : 영국 71.2/28.4, 홍콩 37.0/63.0, 싱가포르 30.8/69.1, 한국 86.7/13.3

□ 수익구조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구조

○ 은행의 경우 순이자마진 하락, 비이자수익원 미흡 등 이익 창출 능력 지속 저하

* 명목 순이자마진 : 2005년말 2.81% → 2009.6월말 1.85%

○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 수수료에 과다하게 의존하며 투자은행업 및 자산관리서비스 부문 등 고부가가치 수익원은 부족

* 순영업수익 중 위탁매매수수료가 약 60%, 자기매매수익이 20%를 차지

○ 보험사의 경우 전통적 보험이외에 종합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의 성과가 미진함에 따라 수익원 다각화가 미흡

□ 아울러 국내시장에서 과당경쟁 및 쏠림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한편, 높은 부가가치 창출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은 미미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 강화를 통해 지나치게 확대된 금융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금융이 실물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선진국처럼 발전의 정도가 지나쳐서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므로 향후 금융감독 강화를 전제로 금융산업의 성장동력화 과제는 지속 추진할 필요

3) 금융소비자의 효용 만족

- 국내 금융소비자의 효용 만족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금융소비자의 교섭력 및 보상, 금융소비자의 역량 측면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도·감독 뿐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관행과 인식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임
 - KIKO사태, 비전문적 판매채널 등에 따른 펀드 및 보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 또한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기회, 금융소비자의 역량 및 서민금융의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도 국내 금융소비자의 효용은 취약한 상태임.
 - 상품설계 역량 부족 및 중장기 위험헤지 시장 미발달 등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공급기능이 미흡
 - 중소기업, 저소득층 및 영세민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확충은 아직까지 정책적 차원이나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특히 저소득층·저신용층을 중심으로 한 무담보 소비자 신용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한 공급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상태
-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소외자가 다수 발생하고 신용불량자 양산 및 가계파산 등으로 어어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심화
- 특히, 서민금융공급 부족 → 사금융이용 증가 → 신용불량자 편입 →경제적 자립기반 붕괴로 이어져 재환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초래
- 이러한 서민금융공급체계의 취약성으로 저신용층의 신용불량자 전락이나 대부업 등 비제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만연

4)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 금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시장 특히 파생 금융시장의 미발달과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확대의 제약 등으로 선진국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

* 부실채권비율(08&07년, %): 한국(1.16), 미국(4.64), 프랑스(2.7), 독일(3.4), 일본(2.5)

- 다만,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위기 과정에서 외화 및 원화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상흑자 및 외환보유고 확충, 중장기 재원 조

달비용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통화 미사용, 높은 대외의존도 등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며 금번 위기시 외환시장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

○ 특히, 자산운용사의 과다 환헛지 관행, 재정거래유인에 따른 외은지점 단기 차입확대 등 실물경제흐름과 무관한 단기외채 급증 등 차입구조의 취약성이 시장불안심리를 확대

□ 또한 자산확대 경쟁 등에 따른 국내은행의 높은 예대율 등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확대되며 리만사태 이후 은행채 스프레드 급등·차환율 하락 등 은행권 원화유동성이 악화

○ 이와 함께 은행권의 자금확보 노력으로 자금이 제2금융권→은행권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무담보 콜시장 위주의 단기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며 은행·회사채·CP 등의 투매 현상 등으로 제2금융권의 원화 유동성 상황도 악화

□ 금융·통화당국의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 대책으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하였으나 우리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다. 한국금융의 SWOT 분석

□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내금융의 SWOT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한국금융의 SWOT 분석

강점(S)	○ 교육수준 높은 인력 ○ 소매금융 역량 및 경쟁력 ○ IT기술 경쟁력 및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금융IT 인프라 수출
약점(W)	○ 금융전문인력의 부족 ○ 간접금융중심의 자금중개기능 ○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수익구조로 인한 과당경쟁 폐해 ○ 금융시장의 인프라 취약 ○ 소규모 개방금융의 구조적 취약성 ○ 국제화 추진 미흡 및 글로벌 네트워크 부재 ○ 조직문화 및 관행 등 소프트웨어의 후진성 ○ 조직 저변에 효율성 중심의 사고방식 결여 ○ 금융상품 설계 능력 취약 및 금융상품의 다양성 부족
기회(O)	○ 금융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율과 자체고용유발계수 ○ 노후대비 금융수요의 확대 추세 ○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금융수요 급성장 가능성 ○ 위기이후 선진금융강국 위축 ○ 수출경제에 보완적인 금융의 역할 지속 필요 ○ 금융중심지 추진 등 글로벌화를 통한 발전 가능성
위협(T)	○ 중국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역할 ○ 외환시장을 통한 국제적 금융위기의 파급 가능성 상존

2. 국내금융의 비전 및 발전 방향

가. 금융강국의 발전 및 시사점

- 금융강국이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금융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및 거시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금융선진국의 성장모델은 크게 글로벌주도형, 지역주도형, 단독국가형, 위기극복형, 위기취약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글로벌주도형은 G5 이상의 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영국, 미국, 독일, 홍콩 등 주요 통화권 경제를 들 수 있음.
 - 지역주도형은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토대로 인접시장 또는 글로벌시장과의 연계성을 확대하는 형태로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음.
 - 단독국가형(또는 offshore형)은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과 같이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형 금융산업을 유치한 형태라 할 수 있음.
 - 위기극복형은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제고한 사례로서 북구3국, 남미 일부 국가(칠레 및 브라질)등이 해당됨.
 - 위기취약형의 경우 금융서비스의 확대에 의한 경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취약성이 노정된 바 있는 아이슬란드 및 아일랜드 등이 해당됨.

□ 주요 금융선진국들의 성장모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홍콩)

□ 홍콩은 영국 금융시장과의 연계성과 건실한 하부구조, 무역경제 중심의 산업구조, 중국경제의 연계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런던 금융시장과 유사한 금융시스템, 법률기반, 거주여건(언어 등) 등은 아시아 금융시장 내에서 타 지역 금융시장 대비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중국 및 인도,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지역과의 지역적 인접성은 지역본부 혹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유치에 유리한 위치라 할 수 있음.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1990년대 들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큰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금융허브로 추진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본부의 유치, 파생금융상품 중심의 역외 금융시장 육성, 금융투자 확대를 통한 아시아 성장전략을 추진하였음.
-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 Hub & Spoke 방식의 쌍방향 전략, 지역경제권에 대한 중장기 투자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 서브프라임 위기이전까지 싱가포르는 국부펀드 또는 국가투자기구를 통해 아시아 및 중국 등에 초점을 둔 글로벌 은행(예: SCB, China Construction Bank, Bank of China)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음.
- 싱가포르의 금융회사(예: DBS)는 홍콩 및 인도, 중국 등에 대한 현지화를 추진하여 아시아 금융네트워크를 강화한 바 있음.

(스위스)

- 스위스의 금융산업 육성은 지정학적 및 역사적 특성, PB업무의 차별성, 대형은행을 통한 적극적 글로벌화 등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스위스의 금융시장은 대내자산 뿐만 아니라 역외자산을 유치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
- 또한 PB업무의 경우 인접 EU국가에 비해 사적정보의 존중과 이를 활용한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자산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음.
- 또한 지역은행 또는 프라이빗은행(private bank) 이외에 2개의 대형은행을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양대 은행의 적극적인 육성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음.

(호주)

- 호주의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통해 아시아의 주요 금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호주는 1990년대 후반 금융제도와 법률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혁을 지속한 바 있음.
- 호주의 금융개혁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추진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유치와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을 촉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호주의 금융회사들은 금융개혁에 따른 구조조정과 맞물려 아시아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금융부문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특히 호주의 금융시장은 2000년대 들어 자원경제의 대두에 따른 국가인지도 개선, 안정적인 거시정책과 선제적 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영국)

- 영국은 런던의 지역적 입지와 영미형 규율체계, 개방중심의 경제체제를 활용하여 유럽과 미국시장을 연계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육성하였음.
 - 영국의 글로벌 금융허브 형성은 영미자본의 활용과 주요통화로서의 역할, 유럽대륙과의 규율 차별화, 선제적인 금융개혁을 통한 시장매력도의 제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개방형 경제정책은 금융서비스의 글로벌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회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 **Big Bang**은 대형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출과 자본시장 업무, 글로벌 자금 업무, IB업무의 활성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영국은 역사적 및 정치적 연계성을 토대로 영미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타 유럽국가와 차별화할 수 있었음.
 - 영국은 유럽대륙 국가에 비해 통합감독기구의 구축이나 통합금융법의 제정 등 선제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인접시장 대비 매력도를 높일 수 있었음.

(아일랜드)

- 아일랜드의 금융허브 정책은 IT와 금융부문의 연계성, 지원업무 중심의 특화,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아일랜드는 지리적 측면의 제약과 대내 금융시장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핵심 금융부문의 유치에 비해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구축에 초점을 두었음.
 - 영국 및 프랑스 등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IT기반과 시설기반을 중심으로 한 역외시장의 특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형태라 볼 수 있음.
 - 서브프라임 이후 위축된 금융부문의 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공학 관련된 글로벌 리서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 아일랜드는 해외투자의 유치에 초점을 둔 정책 강화를 위해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08-2013)의 일부로서 금융부문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스페인)

- 스페인은 Santander은행(Banco Santander)의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로 최근 금융강국으로 부상한 경우로서 여타 금융선진국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남.
 - Santander은행의 주요 진출지인 남미는 언어·관습 등 문화적 요인에서 시장침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은 높으나 금융산업의 발달이 늦어 잠재적 성장성이 풍부하였음.
 - 첫 단계로 현지의 중소은행들을 인수하여 현지 인력을 흡수하고 현지 영업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시장에 침투함으로써 해외의 대형은행 인수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

- 현지에 소매금융의 전문성과 자금력을 이전하는 한편 경영진의 현지화와 국가간 유연한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하여 시장지배력을 제고
- 그 다음 단계로 대형은행 인수(2000년 브라질의 Benespa, 2002년 칠레의 Banco de Santiago, 2004년 영국의 Abbey National)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립함.

(시사점)

- 주요 금융선진국의 공통된 특징은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 금융개혁을 통한 국내금융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수준의 금융하부구조 구축,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한 글로벌 전략의 추진 등임.
 - 우선 금융산업을 국가의 전략적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함.
 - 금융산업이 전략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또한 금융시장과 금융하부구조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만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의 유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 대부분 글로벌 Hub & Spoke 전략을 장기에 걸쳐 꾸준히 동시에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 우리나라도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구조, 국내 금융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성장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국내 거시경제 구조는 실물부문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개방경제의 성장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모델을 구축해야 함.
 - 지난 40~50년 동안 정부지원이 동반된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온 실물부문에 비해 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독자

적으로 발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 금융경쟁력은 글로벌 주도형 금융강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이에 따라 향후 국내금융은 국내 금융허브로의 발전과 함께 해외지역에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지역형 글로벌화를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글로벌 금융경쟁력이 단기간 내에 형성되지 않으므로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강국들과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실물부문의 발전을 기반으로 지역형 글로벌화를 중장기적으로 모색
- 즉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수출형 전략(naked approach)보다도 국내 실물부문의 금융수요를 국내외시장에서 동시에 충족하는 연계형 전략(linked approach)을 추진
- 이 경우 국내의 금융허브와 해외진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글로벌 Hub & Spoke 전략이 바람직

나. 금융비전과 정책목표

1) 금융비전 설정

- 국내금융의 비전은 금융환경 변화, 국내금융의 현주소, 금융선진국 발전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 “아시아의 금융리더로 도약”으로 설정
- 향후 국제적 규제·감독 강화, 해외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증권화 축소 등으로 금융선진국과의 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금융개도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도래
- 금융개도국의 입장에서 금융선진국의 발전모습을 참고하여 국내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한 적절한 발전경로를 선택하면 금융선진화의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과 함께 선도그룹에 속하는 금융리더로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또한 그에 걸맞는 위상 확립을 목표로 하여 한국의 금융비전을 설정함.

□ 따라서 국내금융은 시스템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실물부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실물지원에서 출발하여 영역을 넓혀가며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하는 단계적 전략 필요

□ 금융비전의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 10년을 대상으로 금융발전의 양적,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정책목표의 지표들을 선정하여 실행 가능한 목표치 부여 필요

- 정책목표를 위한 지표로서 국제기관들의 경쟁력 평가지표, GDP 대비 금융업 비중, 글로벌 자산시장 점유율, 아시아 top 10에 속한 은행의 수, TNI지수 등을 고려
- 현재 IMD, WEF가 평가하는 한국의 금융부문 국제경쟁력은 평균 30위권인데, 향후 이를 10위권으로 끌어올려 금융선진국에 진입할 필요
- 2007년 OECD 기준으로 한국의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21%인데, 향후 이를 끌어올려 선진국 중에서 금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 수준에 근접해야 함.

***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임대, 연구·조사, 법률, 회계, 컨설팅, 시설관리업 등 포함**

- 글로벌 자산시장 점유율은 현재 1.2%이나 국내 자산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자산의 축적 등에 감안할 때 향후 약 3%이상 수준(예: 캐나다)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아시아 Top10 은행(Tier I 기준)은 없으나, 향후 국내시장의 구조개선과 심화, 국내외 M&A 등을 통해 향후 2~3개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국내은행의 TNI지수는 4.3%인데,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화와 지점개설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15%(외환은행의 경우 2007년 11%)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금융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예시)

목표 지표	현재	2015년	2020년
• 국제기관의 경쟁력 지표 ¹⁾	30위권	20위권	10위권 이내
• 금융 및 관련서비스업 비중 ²⁾	21%	23%	25%
• 글로벌자산시장 점유율 ³⁾	1.2%	2%이상	3%이상
• 아시아 top10 은행의 수 ⁴⁾	0	1개이상	2개이상
• TNI지수	4.3%	8%이상	15%이상

주: 1) IMD, WEF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기준

2) 2007년 기준 OECD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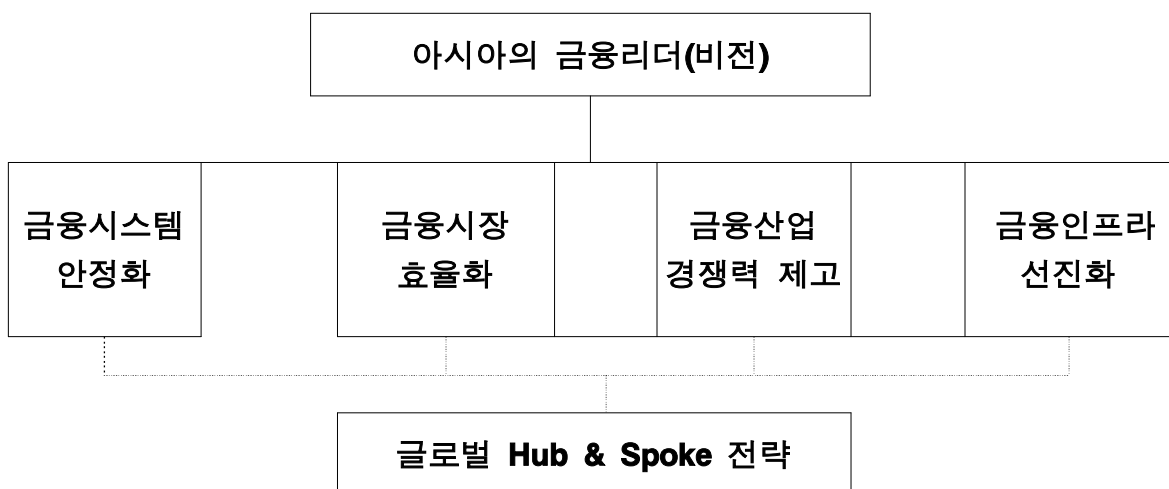
3) 펀드 순자산(2008),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4) Tier I 기준(2008), The Banker(2009)

2)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 향후 국내금융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금융시장 효율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인프라 선진화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hub & spoke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금융으로 도약이 가능

<그림> 금융비전 및 정책목표



(금융시스템 안정화)

- 향후 국내 금융부문은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국내외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외부의 금융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의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 조달·운용상의 문제점,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자본 유출입과 과도한 단기 차입에 따른 외환유동성 문제 등을 우선 해소할 필요
 - 금융시스템 개편관련 글로벌 논의 동향을 감안하여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시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기능을 효율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 향후 국내금융은 금융인프라를 개선하여 산업과 시장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회계제도, 금융인력 양성 등 여건 마련이 시급함.
 - 간접금융기관들의 내부신용평가 역량 확충을 위한 조직 체계 및 관행 조성과 함께 직접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사의 평가 능력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제 및 감독의 강화 필요성
 - 특히 금융회사의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의 의사결정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기업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감시·견제하는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함
 - IFRS의 조기정착을 통해 결합기준에 의한 선진 회계관행을 확립해 나갈 필요
 - 금융경쟁력의 원천은 금융산업의 종사자이며 이들의 전문성 및 교육·훈련은 금융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

- 또한 금융인프라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금융교육 강화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시제도 확충, 금융소비자의 차별화 금지, 개별 금융상품의 책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부가가치가 큰 금융분야에서 녹색금융과 같은 신성장동력의 발굴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주체에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함.
 - 향후 녹색금융은 단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심사능력이 제고되면 점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여 민간 주도의 녹색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

(글로벌 Hub & Spoke전략 추진)

- 향후 국내금융이 선진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금융중심지 전략과 함께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등 글로벌 Hub & spoke전략을 추구해야 함.
 - 금융강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국내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글로벌 spoke전략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하는 국제금융시장의 공백기에 국내 금융회사들은 M&A를 통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 특히 국내 금융부문은 고령화에 대비하여 금융자산을 적극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금융시장을 널리 활용하는 금융자산의 글로벌화의 추진도 필요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향후 금융산업은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확보,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금융 규제·감독의 개편에 발맞추어 자본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을 항상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은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의 선진화, 대형화 및 겸업화 전략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
 - 특히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고객군별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산업별 계층체계 및 다양한 상품과 공급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금융시장의 효율화)

- 향후 금융시장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시장의 안정성 확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시장발전 등을 추구해야 함.
 - 우선 국내 금융시장은 투자자본의 분배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깊이와 폭 확대 및 변동성 축소,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
 - 또한 금융시장은 투자자가 엄격히 보호되어 이들의 신뢰가 확보되는 공정성을 가져야하며, 정보차단벽 강화,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 내부자거래 금지, 재무제표의 국제정합성 등이 뒤따라야 함.
 - 금융시장은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통해 시장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성을 가져야 함.

3) 단계별 발전과제

- 향후 발전과정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우선 5년 이내에 regional player로서의 위상을 마련하고 10년 이내에 global player 출현을 목표로 함.
- 제 1단계(단기 및 중기과제): 향후 5년 후 아시아지역의 regional player 출현을 목표로 우선 국내금융의 안정성·효율성·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금융시장과 글로벌시장의 갭을 축소하여 선진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태세 확립
 - 금융시스템 안정화: 국내금융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 금융시장의 효율화: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한 시장제도 개선과 함께 직간접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
 - 경쟁력 제고: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대형화·겸업화 및 중소형금융의 양립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구축
 - 금융인프라 선진화: 신용평가, 금융인력 양성, 금융소비자보호 등 낙후된 국내금융시장의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국내금융의 성장동력으로서 녹색금융을 집중 육성함.
 - 글로벌화 준비 및 추진: 금융의 경쟁력있는 글로벌화를 위해 inbound 국제화(금융중심지)와 outbound 국제화(해외진출)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
- 제 2단계(장기과제): 10년 후 한국 금융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주요 금융강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글로벌 spoke전략 추진
 -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글로벌 platform 구축의 일환으로 양적 측면에서의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속

-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국내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자산의 대내외적 균형(global balance)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¹⁾

<표> 금융의 발전과제

제 1단계(중단기과제) : 금융안정 및 인프라 구축	○ 금융시스템 안정화 · 국내 금융시장의 쏠림현상 해소 ·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 금융시장의 효율화 · 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 ·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자산 건전성 제고 · 대형화·겸업화 및 중소형금융 양립 구조 형성 ○ 선진인프라 구축 · 신용평가·회계제도 선진화 및 금융인력 양성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 신성장동력인 녹색금융정책 추진 ○ 글로벌 Hub & Spoke 전략 추진 · 금융중심지 축진을 위한 제도 개편 및 시행 · 글로벌 금융회사 진출 전략 마련 및 시행 · 글로벌 금융자산의 관리체계 마련
제 2단계(장기과제) : 글로벌 Hub & Spoke 전략 추진	○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 글로벌리더 육성 및 인접지역 중심의 국제화 · 아시아 리딩 은행·투자은행 육성 · 글로벌 자산운용사 육성 ○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 국내 금융자산의 해외투자 확대 · 역외위험 감독 및 협력체계 마련

1)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해외자본 유치에 초점을 둔 수용적 형태의 글로벌화 전략(금융허브 정책)과 더불어 국내 금융자산의 해외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을 병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양 방향 국제화를 통해 금융자본의 유출입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신인도 및 위상을 높이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이는 금융 글로벌화의 균형 회복과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교두보(platform) 형성을 촉진할 것임.

다.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본 비전의 기능별 체계

- 금융비전은 중장기 금융수요의 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공급체계 마련이라 측면에서 볼 수 있음
 - 즉 금융선진화는 금융의 최종 소비자인 가계 및 기업의 중장기 금융수요를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이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비전을 가계금융부문, 기업금융부문으로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 및 당면과제를 재분류하여 분석할 필요

1) 가계금융부문

- 가계금융부문의 경우 가계대출 수요의 안정적 제공,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관리 및 연금서비스 서민금융 수요의 확충이 긴요할 것임.
- 먼저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대출이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정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
 -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LTV 및 DTI 등 금융감독 및 규제를 강화해 나가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 또한 금번위기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
 - 또한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여 현재의 단기·일시상환·변동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시켜 나갈 필요
-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저신용·중산서민층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서민금융공급의 위축으로 서민층의 금융소외 심화 및 신용불량자 증가·가계파산 증가 등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심화
 - 앞으로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권 서민금융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신용층 문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해소
 - 또한 국제기준에 맞는 사전적·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마련, 민간자율기관(예:투자자보호재단 등)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감독기능 확충 및 통합적 규율체제 마련 등 그간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
- 아울러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
- 특히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가계부문의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반이 심화되어야 함.
 - '05.12월 도입된 이후 보수적 자산운용 규제 등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퇴직연금의 경우 규제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

2) 기업금융부문

- 기업금융은 기업규모별로 차별화·다양화된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대기업 및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금과 장기자금 조달 수요를 대내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도매금융 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무담보 콜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금변과 같이 외부충격 발생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불안정성이 심화된 만큼 앞으로 RP 시장 활성화, 단기금융시장 지표 금리 개발, CP 수요를 단기사채수요로 전환 유도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
- 또한 채권 수요확대 및 발행시장 활성화, 효율적인 채권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채권시장을 통한 장기 안정적 기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미흡하고 투자은행업 비중이 낮아 자금중개 역할 미흡한 만큼 대형화 및 전문화·특화를 통해 모험자본 원활한 공급 및 다양한 자금 조달요구를 충족

□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시스템 개선,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

- 그간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효율성 및 민간영역과의 마찰 문제 등 개선과제가 대두
- 특히 위기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보증을 점차 정상화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
- 따라서 앞으로 한시적·예외적 보증확대 조치의 점진적 정상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공백 최소화 및 정책금융 역할·지원방식 등 정책금융시스템을 효율화
- 아울러 우량기업상장 확대,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중개 기능을 확립

□ 이와 함께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제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제를 마련하고 체계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야 함

<표>

기능적 체계와 업종별 금융서비스 기반

	은행	금융 투자	보험	자산 운용	저축 은행	신용 카드	여신 전문	상호 금융	대부 업
가계금융									
예수금(지급결제)	●	■				●			
주택담보대출	●		●		●	●	●	●	●
신용대출	●		●		●	●	●	●	●
자산관리 (연금, 펀드, 방카슈랑스)	■	■	■	■	■			■	
신용카드	●				●	●			
소비자금융 (서민금융)	■				■		■		●
기업금융									
여신	●				●				
단기채	■	■		●			■		
장기채	●	■		■			■		
주식	●	■		■			■		
AI(자산유동화·구조조정 등)	●	■		■					
국제금융 (IB·자산관리)	■	■		■					

주: ■ : 확대 · 성장 ●: 현재 수준 또는 안정화

3) 기능적 체계와 금융규율 체계

- 국내 금융서비스의 기능적 체계는 기능별 법률체계와 기능적 감독체계의 구축을 통한 감독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할 것임.
- 기능적 체계는 업종간 건전성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종간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필요로 할 것임.
 - 따라서 감독체계를 감독·검사 조직 및 프로세스 등을 기능별로 통합 관리하는 기능적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업법 체계도 업종간 공통기능을 중심의 기능별 법률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표> 기능적 체계와 금융정책 과제

가계금융		기업·도매금융	
-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 서민금융체계 정립 -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정비 및 조직 강화 - 고령화, 자산관리, 연금 관련 서비스의 확대		- 대기업 금융: 단기시장, 회사채·장기채권 활성화 - 중소기업 금융: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 고수익채권시장 육성, 우량기업 및 핵심산업 지원 확대 - 도매금융 및 IB역량 제고 - 파생상품시장 감독 강화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정 지원	
금융산업	금융시스템	금융인프라	
- 금융글로벌화 - 은행부문의 경쟁력 제고 - 증권사/자산운용사/보험사의 대형화/전문화/글로벌화 촉진	- 건전성 규제 강화 - 거시건전성/기능별감독체계/감독역량 강화 - 지급결제/예금보험제도 개선	- 금융업법 체계 개편 -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개편 -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 신용평가·정보/녹색금융/금융인력/금융산업공익성/금융지주회사체제의 정비	

Ⅲ. 정책과제

1. 금융시스템의 안정

가. 건전성 규제 및 감독

1) 국제적 논의동향

(자본건전성 강화)

- ☐ 보통주자본비율 > x%, Tier 1 자본비율 > y%, BIS자기자본비율 > z% 등으로 자본규제 비율을 다변화하고 강화시킴
- ☐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해 Tier 1 자본의 주요부분(predominant form)을 보통주와 이익잉여금으로 구성토록 함.
 -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을 새로이 구분하면서 각 자본별 인정기준 제시
 - Tier 1 자본을 보통주 중심 자본으로 명확히 하여 자본요건을 강화하고, Tier 2 자본의 상위/하위 보완자본의 구분을 없앴.
 - * 기본자본(Tier1) : 계속기업(going concern basis)하에 손실흐수능력이 있음
보완자본(Tier2) : 기업청산(gone concern basis)시 손실흐수능력이 있음
 - 자본금 요건중에 조건부 자본(contingent capital) 등의 보완적 장치 마련 검토
- ☐ 규제수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행된 자본조달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간동안 예외인정(grandfathering)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본

수준에 관한 공시 요건을 강화함.

- ① 규제자본의 주요 내용을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 ② 홈페이지에 자본구성 요소의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공시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 BIS비율 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호황기에 최저자본요구량 이상의 완충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고, 불황기에 적립된 자본을 소진하여 자금공급 능력 유지
- 목표 버퍼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성과급지급 등의 자본배분을 제한하여 자본 축적을 유도

<(예시) 개별은행의 완충자본 적립기준>

완충자본(100%) 목표	내부유보 비율
25% 미달	100% 이상
25~50%	80% 이상
50~75%	60% 이상
75~100%	40% 이상
완충자본 목표 초과	0%

- (예상손실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적립) 대손충당금 제도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예상손실에 기반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과소적립시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하는 등 유인체계 마련

* (호황기) 실제 손실률<장기 예상손실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대출 축소→ 경기순응성 완화

(불황기) 실제 손실률>장기 예상손실률→ 대손충당금 적게 적립→ 대출 확대→ 경기순응성 완화

(유동성 규제 및 감독)

- 현재 BCBS에서는 유동성규제 강화방안으로 단기지표로서 30일간 유

동성커버리지 비율과 장기지표로서 순안정자본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이 논의되고 있음.

□ 단기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고유동성 자산/30일간 순현금유출)은 심각한 위기상황(acute stress scenario)에서도 1개월 동안을 견딜수 있도록 고유동성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감독 기준임.

○ 「고유동성 자산」은 현금, 중앙은행 예치금, 시장성있는 국채 등의 엄격한 의미의 유동성 자산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회사채, 커버드본드 등을 확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 논의

- 회사채, 커버드본드를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hair cut을 적용하고, 반영 상한을 정함.

○ 「현금유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채 항목별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금의 이탈율(run-off rate)을 통일되게 정할 계획

□ 장기지표인 순안정자본조달비용(=사용가능한(available) 안정자본/필요한(required) 안정자본>1.0)은 일반적인 위기상황(general stress scenario)에서 1년 기간동안 필요한 유동성을 보유토록 하는 감독지표임.

○ 분자 「사용가능한 안정자본」으로는 유효만기 1년 이상 부채 및 자본과 만기 1년 미만 부채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자금조달 인정율(예; 소매예금 85%, 금융기관 예금: 0%)을 설정하여 계산

○ 분모 「필요한 안정자본」은 위기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자산 및 난외항목이 회수 또는 매각되지 않고 고정화되어 있는 정도를 감안하여 계산함. 예를 들어 대출자산은 거래상대방이 소매인 경우 고정화율이 높고, 유가증권은 신용도가 낮을수록 고정화율이

높게 설정됨.

- 이밖에 유동성 모니터링의 강화를 위해 계약만기 불일치, 자금조달 집중도, 담보차입 여력, 기타 시장관련 지표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함.
 - 금융회사는 기간별 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계획을 제출하고 계약만기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를 제시
 - 또한 중요고객, 상품, 통화별로 자금 조달의 집중도를 모니터링하고 CDS 프리미엄, 주가 등 시장지표도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

(레버리지 규제 및 감독)

- 자본규제에 대한 보조적인 규제로 레버리지 규제의 명시적 도입방안이 논의 중이며 다양한 옵션이 제시되고 있음.
- 자본은 Tier 1 자본 또는 보통주 자본을 기준으로 하여 협의의 자본 개념을 사용하고 자산은 가급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유도
 - 자산의 익스포저를 산출할 때 회계기준 금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나 상계 등은 불인정하고 난외항목에 대해서도 익스포저 산출에 포함토록 함.

(거래상대방 위험 등 위험커버리지 감독 강화)

- 이미 09년 7월에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트레이딩 계정의 자본요구량 증가규모가 전체자본의 11.5% 증가함.
 - 내부모형 사용시 재유동화증권에 대해 기존 유동화증권보다 2

배~3.5배 이상 높은 가중치 부여하고, 유동화 익스포저의 외부 신용등급 활용시 기초자산 실사(due diligence)요건 부과

- 금융위기를 상정한 stressed VaR도입하여 12개월 동안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한 기간을 이용한 내부모형 사용토록 함.

□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였으나 현행 바젤Ⅱ는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트레이딩 거래, 복잡한 유동화거래에 대해 충분한 자본 적립을 유도

- 파생상품 거래, Repo, 유동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위험에 대해 추가자본 부과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부과로 중앙청산소(CCP)로 파생상품 거래이전 유도

□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격 외부신용 평가기관의 독립성 및 이해상충을 방지토록 하는 IOSCO의 권고사항을 반영함.

(시스템적 리스크 대응)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식별여부 및 규제방법론 등은 아직 논의의 초기단계임.

- 차별화된 자본금(capital surcharge) 및 유동성 규제를 통해서 동 금융회사의 도산 확률을 낮추고 또한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감소

- 자체적인 도산계획(living will) 제출케 함으로서 거대 금융그룹의 법률적 단순화(legal simplification)효과와 향후 실제로 도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도산 옵션의 다양화 등을 도모
- 다국적 은행의 국가적 자회사화(national subsidiarisation)는 다국적 은행을 지점이 아닌 지역적 자회사를 보유하는 지주회사 형태로 조직화함으로써 해당 금융그룹이 부실화되었을 때 자회사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 등을 해당 진출국 감독당국 및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임.
- 협의의 상업은행업무(narrow banking)과 투자은행업무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시스템적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며 동 방안이 채택될 경우 유럽의 유니버설 बैं킹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
- 공동 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을 통한 다국적 은행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강화 실시

2) 정책과제 (현안과제)

- 우선 금변위기과정에서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은행에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일정 유예기간 부여후 예대율을 100%로 유지토록 의무화
- 아울러 이상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건전성 관련 규제는 BCBS/FSB 등의 논의와 각국의 영향분석(Quantitative Impact Study: QIS)를 통해서 국제적인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
 - 현재 BCBS의 제안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동시에 각국의 감독당국에 의한 영향분석이 실시 중에 있음.
 - 영향분석의 결과를 통해 top-down, bottom-up 양방향 규제변수 설정작업(calibration)이 완료된 후 최종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될 전망

- 현재 우리나라의 감독당국도 이상의 영향분석 및 직급별 회원국 회의에 참여하여 아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임.
 - 각국별로 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국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
- 현재 제시된 향후 시간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중에 영향분석(QIS), 최종적 규제변수 설정작업 등을 마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되면 2011년부터 수년간 각 정책 사안별로 정책이행 기간(implementation period)으로 구체화될 전망
 - 그러나 QIS의 작업이 방대하고 각국별로 이해관계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상의 작업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에서 거론된 대부분의 건전성 규제 강화의 이행이 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접적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 및 유럽의 금융회사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규제강화의 영향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조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적절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급격한 충격이 없이 시행할 필요

나. 외환부문 건전성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은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입과 변동성 심화, 경기순응적 자본유출입, 해외요인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 외채관리의 취약성 증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대외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 실물경기가 좋아지고 자산가격이 상승할 때 대량의 단기 외화차입이 발생하고 유입된 자본이 자산매입에 사용되면서 금융시장의 버블을 초래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급속히 유출되면서 외화건전성 문제 발생
 - 따라서 외화자산운용과 관련된 위험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 시장개방과 더불어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자금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 금번 위기과정에서 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 증폭 및 대외신인도 하락 등 외환부문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
 -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국제통화 미사용 등 근본적인 취약요인이 있기는 하나 실물흐름에 벗어난 과도한 단기차입금 증가도 금번 외환유동성 부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 ※ 지난 10년간 경상수지 흑자국임에도 단기외채가 05년이후 급증한 데는 선박선수금 등 실물요인도 있으나 급격한 외화자금 유입(주식·채권) 및 펀드 해외투자급증(환헤지수요 급증) 등 非실물적 요인

도 작용

-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09.11월)하고 금년부터 시행중

2) 정책과제

(단기과제)

①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 확대

- ☐ 외환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국내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도입 검토
 - 국내은행에 적용하는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의 성과를 고려하여 여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도입 검토
 - 기관의 특성 및 시스템리스크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규제 적용 범위, 강도를 결정할 필요
- * FSB 및 BCBS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시스템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건전성 감독장치 강화(국제공조를 통해 대응)

②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

- ☐ 은행의 외화대출 증가율이나 자산가격 상승률이 추세(trend) 이상으로 상승할 때 은행이 원화 자본을 확충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 과도한 외화자산 확대 및 차입으로 인한 차환·외화유동성 리스크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외화대출 증가율이 추세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적절한 규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③ 외화차입금 운용 모니터링 강화

- 은행의 외화차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외화차입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를 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
 - 은행의 외화차입이 원화자산 매입에 사용되면 자산시장의 버블 문제도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증가

(중·장기과제)

① 외화유동성 규제의 개선

-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를 말잔기준에서 평잔기준으로 바꿔 은행의 상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
 - 현재의 말잔기준 규제는 월말에 갭비율·외화유동성 비율을 맞추면서 은행의 실질적인 외화유동성 위험을 모니터링하는데 한계

② 시장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외환시장의 동향 파악과 향후 예상흐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시장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모니터링의 시장간 연계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선물, 역외선도거래(NDF) 및 스왑시장 모니터링 및 외환시장과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간 연계감독 강화

③ 환율의 쏠림현상 완화

- 현재 소수의 참가자들이 외환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들의 경우 환헷지 방식 다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자본유출입시 환율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수출업체들의 경우 선물환 이외의 다양한 방식을 통한 환헷지를 적극 유도하여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
- 수출기업 및 수입기업간 netting방식을 통해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④ 스왑시장의 불균형 해소

□ 스왑시장의 불균형 해소

- 통화스왑 시장에서의 재정거래 차익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증가로 인해 외채증가 및 채권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시안정화정책을 통해 기초경제여건을 건실하게 유지하고 일부 투자자에 의한 스왑시장 왜곡 및 가격기능 제고를 위해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⑤ 원화의 국제화 노력

□ 외환시장의 개장직후 및 폐장직전의 거래량 집중 및 변동성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적인 거래를 허용하여 국내외 다양한 시장참가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원화 국제화에 따른 투기적 거래의 증대 가능성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증가로 인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원화유동성에 대한 관리가 보다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

다. 가계부채 및 기업구조조정

1) 가계부채

가)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3/4분기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712.8조원이며 이 중 가계대출이 94.8%인 675.6조원을 차지
 - 2009년 3/4분기말 현재 전체 가계신용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8% 수준이고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6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가계신용 증가율은 2006년 1/4분기부터 2008년 3/4분기까지 평균 10.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2009년 3/4분기말 현재 5.4%까지 하락
- 특히 2008년 이후 가계대출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졌는데 동 기간중 수도권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상승과 맞물려 증가한 것으로 평가
 -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의 91%가 주택담보대출이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77%가 수도권에서 발생
 - 특히 2008년 10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91%가 수도권에 집중
 - * **2007년 3월말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정도는 71.5%**
- 이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여타 주요국보다 높게 유지
 - * **한국(50.9%), 미국(34.6%), 독일(34.0%), 호주(61.0%), 일본(27.0%) : 2008년말 기준**
 -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한국(156.7%), 미국(141.1%), 프랑스(99.9%), 일본(138.9%), 스페인(140.5%), 영국(168.0%) : 한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은 2007년말기준, 그 외 2006년말 기준**

- 다만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으나 여타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 또한 우리나라 가계는 보유 금융자산 중 유동성이 높은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득, 주택경기 등의 부정적인 변화에도 상당기간 대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중 예금 및 현금 비중은 44.3% 수준으로 미국(16.8%), 영국(26.3%) 등을 크게 상회

- 한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중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 제10차 노동패널자료에서 부채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산의 76%를 보유하고 있는 4, 5분위 계층에 전체 부채의 69%가 집중

- 다만 DTI나 DSR 등은 저소득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무부담은 저소득층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DTI(2007년 기준) : 1분위(3.22), 2분위(1.64), 3분위(1.33), 4분위(1.21), 5분위(1.19)**

DSR(2007년 기준) : 1분위(28%), 2분위(14%), 3분위(12%), 4분위(11%), 5분위(11%)

- 특히 기준금리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비은행권의 대출금리 하락 폭이 작아 이들 기관에서 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의 이자비용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소득분위 및 신용등급별 분석결과 저소득층보다는 중·고소득층에 대출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어 총량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는 부실 확대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제10차 노동패널자료에서 부채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산의 76%를 보유하고 있는 4, 5분위 계층에 전체 부채의 69%가 집중

○ 또한 가계의 현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경기, 소득 등의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buffer)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가계의 현금·예금보유비중(2008.6월 기준) : 한국(44.3%), 미국(16.8%), 영국(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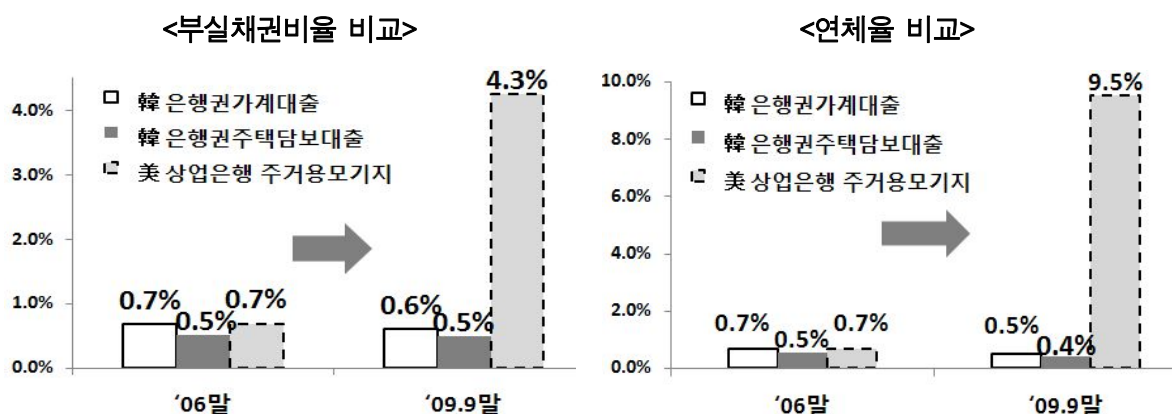
* 우량등급(1~4등급) 대출 비중(은행+비은행, %) : (05년) 55, (08년) 61, (09.7월) 66

(미국의 경우 비우량 차입자 대상의 서브프라임대출 비중 확대(01년 8.6% → 06년 20%))

* 08.9월이후 가계대출 증가분 중 66.2%는 소득 5분위(상위 20%)에서 발생

* 주요국 LTV 비율(09.7월) : 韓 47.1%, 美 74.9%, 英 85.2%(07.12월)

○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이 미국 등에 비해 양호



□ 다만 가계부채가 대부분 실물자산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가격의 급락시 가계부실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거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중고소득층도 금융비용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은 잠재된 상황

○ 2005년 이후 가계신용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계속해서

상회하였는데 2007년 축소되던 그 폭이 최근 다시 확대

- 또한 올해 들어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비임금근로자의 가계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

나) 정책과제

(단기과제)

- 향후 정책방향은 저소득층의 경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상환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자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 이를 위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안정적인 이자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
 - 한편 향후 정책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시 이를 점진적으로 진행시킴으로 대출자의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유인
- 가계의 부채가 소득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점진적인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
 - 주택가격 안정목적이 아니더라도 DTI 규제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필요

(중장기과제)

- 필요시 가계대출규모를 금융안정기의 DTI 추세수준에 입각한 상한등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검토
-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

요

- 우선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대출에 대한 MBS 발행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강화
- 예컨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지속 확대하여 모기지 채권 매입여력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MBS발행을 활성화
- 아울러 모기지 조기상환모형을 개발하여 MBS 발행가격 결정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2) 기업구조조정

가) 현황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는 채권단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채권은행은 상시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하고, 주채권은행은 (B) 및 (C) 등급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결정
 - 이에 따라 2009년 중 기업규모별(주채무계열, 대기업, 중소기업) 및 업종별(건설업, 조선업, 해운업)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대기업 9개 그룹, 개별대기업 33개, 건설/조선/해운사 46개, 그리고 중소기업 512개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 금번 구조조정은 과거 외환위기시와는 달리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의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구조조정이라는 특성을 보유
 -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동의 및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춘 것으로 평가
 - 특히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이외에도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 자산관리공사법 개정(5.13시행)으로 「구조조정기금」 신설, 구조조정기업 자산매각시 양도차익의 법인세 분할 과세, 금융회사 채권포기 손실 손금산입 등 세제지원 방안 제공
- 다만, 만성적으로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기업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 08년말 기준 상장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이 289개이며, 7년 연속 1미만 기업도 82개 정도가 존재
- 이자보상배율이 만성적으로 낮은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 등이 퇴출기업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부실하나 부동산담보대출이나 빈번한 증자 등을 통하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나) 정책과제

(단기과제)

- 기업부실이 불안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기대로 구조조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에 따라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지속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수시로 제시할 필요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생산적 기업들에 따른 경제내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제공
 -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대출 자동 재연장 등 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점진적인 정상화를 통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 제공
-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강화하여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하여 채권자간의 원활한 이견 조정을 유도
 - 또한 워크아웃기업의 채권 재조정후 손실규모 정도, 향후 구조조정 효과 등을 감안하여 '부도'로의 분류기준을 단계화함으로써 워크아웃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 완화를 도모

- 아울러 주채권은행이 대기업그룹과 체결하는 채무구조개선약정이 효과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주채권은행의 채무기업에 대한 자구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을 강화
- 채권은행 소속 점포장을 평가하는 평가요소(KPI: Key Performance Index)가 단기수익성만을 강조할 경우 기업신용위험 평가시 워크아웃이나 퇴출등급 부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KPI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성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

(중장기과제)

- 현행 기업구조조정의 다양한 추진방식(기촉법, 대주단 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체계화할 필요
 - 구조조정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존속기한(2010년말 종료 예정)을 연장함과 더불어 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법규를 개정
 - 반면 대주단협약 등은 시한 완료시점에 폐기함으로써 구조조정 체계를 일원화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하고, 비업무용 부동산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
 - 감독당국은 은행의 기업신용평가 전문가 확보 및 신용위험평가, 여신심사의 전문성·독립성 등 신용대출 활성화에 필요한 간접여건을 개선하도록 감독을 강화
 - 특히 감독당국은 은행으로 하여금 철저한 대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주의 자금유용 여부(대출 목적외 비업무용 부동산투자 등)를 점검토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자금이 생산부문에 활용되도록 적극 지도

-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그룹의 자산매각 활성화, 지분 인수를 위한 펀드 활성화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에 노력
- 한편 금융회사들의 신용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시장의 M&A를 활성화시키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병행

라. 예금보호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 ☐ 예금보호제도 도입 당시의 기본틀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금융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 현행 통합예금보험기구 및 제도는 예금보호 필요성 보다는 감독기구의 통합과정에서 보호대상 권역이 결정되는 등 공적예금보호대상 금융권 선정에 문제가 있어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
 - 또한 현재 예금보호법상에 예금보호대상 및 비보호대상 상품이 나열되어 있어 신상품 또는 복합금융상품 도입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 예금수취기관과 비예금수취기관에 대해 동일한 보호방법을 적용하여 금융업권별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예금자의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또는 보험금 지급시까지 생활자금을 포함한 예금인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음.
 - 또한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경우 지급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단순보험금지급(pay-box)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상당액이 회수되지 못하였음.
 - 또한 예금보험기금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위험시정조치가 제한적임.

- 예금보험료율의 경우 기금에 대한 위험도에 관계없이 금융권별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예금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우려
 - 예금보호대상 금융권역의 금융회사가 자동적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편입됨에 따라 잠재부실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도 예금보호대상에 편입되어 기금손실을 발생시킬 우려
- 예금보험기금내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손실이 2조원 이상에 달하나 연간 보험료 수입은 2,400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전반적 건전성 우려로 기금손실 확대 우려 제기
- 2009년 6월부터 상호저축은행 계정이 은행, 보험계정 등 타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보험료율을 0.30%에서 0.35%로 인상하였으나 계정 건전화 달성에 어려움

2) 정책과제

(단기과제)

-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상품 및 복합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 상품의 경우 다양한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금등'의 명칭보다는 해당 금융상품 유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호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유사 금융상품에 대해 유사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예금자보호제도가 예금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정리시 소액예금에 대한 충분한 보장과 신속한 예금대지급 또는 계약이전을 통해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

-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 및 기금건전성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절차에 조기 참여하여 신속한 부실정리를 도모하고 부실심화를 방지하여야 함.
 - 가지급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지급금 지급규정을 정비하여뱅크런의 예방 및 예금자의 재정곤란을 완화시킴.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기금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위험시정조치 기능을 강화함.
- 기금손실 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차등보험료 제도 시행(2014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업계의 준비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검토
 -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공동검사 등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기금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금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예금자, 금융회사 및 감독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함.
- 저축은행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계약이전된 고객예금에 대해 파산저축은행의 높은 금리를 계속 적용하는 대신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기금손실을 축소하는 한편 예금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
 - 대형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기금부실화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임점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적자해소를 위해 예금보험료를 인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금보험기금이 확대됨에 따라 단순히 기금을 관리하는 외에 기금 운용수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여타 공사의 기금운용 체계를 참고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용방법 다각화 등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장기 과제)

- 예금보호 방법에 있어서도 금융업종별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 보험회사 파산시 장기보험 계약자와의 신뢰유지 및 재가입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계약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고객예탁금 보호 외에도 자본시장법 실시 이후 중요성이 높아지는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 가입 승인 및 적용 종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금융권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예금보험한도를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마. 금융감독

1) 거시건전성 감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조기경보시스템은 미시건전성 감독 중심으로서 부문간 상호관계를 고려한 시스템 리스크가 충분히 감안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한 판단, 이를 근거로 한 미래의 중장기 모습에 대한 예측, 그리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익숙하지 않음.
-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정보의 집적 및 분석 역량이 취약하고 관련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화된 모형 미비
 - 특히 거시적 환경변수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체계적 모형 정립 및 신상품, 신금융기법 도입시 활용 등이 취약한 상태임.
- 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하여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독자원의 배분도 시스템리스크라는 거시건전성 감독 개념에 입각하지 않고 있음.
 - 비정상적인 대출 흐름, 특정한 펀드로의 과도한 쏠림현상은 감독기관의 경고발동이나 창구지도 등 moral suasion을 통해 완화하고 있으나 필요시 규정에 의거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됨.

나) 정책과제

(단기과제)

- 거시건전성 감독은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하므로 미시건전성 감독과 달리 물보다도 재량적 판단이, 과거의 평균적 통계개념보다도 비정상적 미래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함.
 - 이에 따라 향후 금융감독은 위규사항 적발 중심의 미시감독과 시스템리스크에 대처하는 거시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리스크감독(comprehensive financial supervision)으로 발전될 필요

- 거시건전성 감독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거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상황을 추정하고, 그 결과 리스크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있으므로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가 중요함.
 - 관련 부처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인식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거시적 환경변화가 정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의와 함께 미래의 나쁜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대응조치가 신속히 강구되어야 함.
 - 이와 같은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내에 정보의 집중 및 분석을 전담할 부서와 함께 조직 내부의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내부적 체계도 갖추어야 함.

- 거시적 환경변수와 개별금융기관의 재무변수간의 관계를 체계화한 통계적 모형을 수립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꾸준히 수정,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함.
 - 또한 신상품, 신금융기법,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도입될 때는 반드시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

행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야 함.

(중장기과제)

- 쏠림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의거하여 쏠림현상으로 판명될 경우 불건전 및 부적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도입이 필요함
 - 우선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구속력이 약한 MOU 대신 해당 금융기관과 ‘공식약정’(formal agreement)을 맺고 일정범위 내에서 감독검사권을 발휘하여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공식약정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
 - 쏠림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의거하여 쏠림현상으로 판명될 경우 불건전, 부적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강구
- 개별금융기관들도 전통적 형태인 미시적 수준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까지 고려한 광의의 리스크관리 방식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기능별 금융감독 및 규율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감독은 감독목표, 기능, 감독 대상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개념적·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감독상의 시너지효과 창출 필요
 - 금융감독은 인허가, 건전성 감독, 검사 및 제재, 위기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과정
 - 금융감독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경우 금융감독은 시스템 감독,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등 영업행위 감독으로 구분
 - 감독의 대상에 따라 금융회사 감독(기관 감독)과 금융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시장 감독(시장 감독)으로 구분

나) 정책과제(중장기과제)

- 권역에 상관없이 리스크에 대한 일관된 감독정책을 견지하고 권역간 리스크 전염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기능별 접근 필요
 - 통합감독기구가 금융권역별 고유 특성에만 몰입하여 유기적 연결감독시스템 구축이 미흡할 경우 피상적인 통합에 머무를 위험
 - 이런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 복합금융그룹 감독, 소비자보호 등의 영역부터 기능별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점차 이를 확대
 - 증권시장감시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증권시장 감시기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운영하는 방안 검토
- * 예: 일본금융청의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호주 ASIC 등

- 중장기적으로 현행 권역별 및 기능별 혼합체계를 기능별 감독체계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당분간 개별 금융업법 체계를 유지하되, 업권간 규제차익 제거를 위해 업권별 공통적인 기능별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
 - 투자자보호 장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외이사 적격성 요건, 임원 자격 요건, 제재관련 규제 등을 업권별로 통일적으로 규정
 - 예컨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칭)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 현행 권역별 규제·감독체계를 기능별 규제·감독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 검토
 - 예를 들어 기능별 감독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업무에 대해 인·허가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되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를 차별적으로 규정
 - * 아울러 금융업권의 차이를 불문하고 금융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해서도 고객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

3) 감독제도 및 역량 제고

- 규제 완화로 증진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위법·부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과징금제도 전면 도입, 제재 절차 투명성 강화, 제재 관련 제도 통일성 도모, 및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 등의 시행 방안 강구
 - 특히, 개인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기 위해 불완전 판매, 한도의무 위반,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임직원 또는 해당금융회사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방

안도 강구

-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되는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감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이중감독을 방지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의 규제 감독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규제 수단, 규제 체계 등을 확립
 - 대형 금융그룹 및 금융복합그룹의 위기 시 too-big-too-fail보다 too-difficult-to-resolve가 핵심문제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기반을 마련

- 금융감독 및 검사 행태의 책임성 및 대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금융감독검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정부,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
 - 감독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체계에 더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시평가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 및 검사 행태의 개선과 감독 및 검사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

- 리스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한 감독 역량 강화
 - 직무교육 강화 및 외부 리스크 전문가 채용 확대
 - 종합검사 → 취약부문 중점검사, 현장 검사 → 서면검사, 위규 적발중심 → 리스크 중심의 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 특히 검사 인력의 전사적 활용체계(공동 Pool제)를 확립하고 각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필요 부문에, 적기에, 필요 인력만을 투입하는 효율적 검사체제 구축

바. 지급결제제도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내 지급결제 관련 법체계는 각 개별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여부 결정 및 결제위험에 대한 관리기준 설정
 - 또한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및 지정지급결제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에서 규정
- BIS가 제시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지급결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지급수단 및 참가자 적격성 기준 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
 - 감시·감독업무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 명확한 업무배분체계 및 시스템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
 - 이에 따라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

<표> BIS의 핵심원칙에 비추어 본 국내 제도 평가

기 준	국 내 현 황
①법적 기초 완비	지급결제 법률적 정의, 참가자 적격성 기준 규정 미비
②참가규정 및 절차	개별법에 의해 결정되어 일관성 상실
③위험관리체계	순채무한도, 담보, 분담금제도가 개별법에 의해 규제되고 일관성 상실 ※캐나다는 Canadian Payment Act에 규정
④시스템위험 대비	정부, 금감원, 한은 등 관련 기관 간 규제 및 감독에 관한 배분체계 확립 미비
⑤보안과 신뢰성	전자적 지급기능 확대에 의한 운영위험 가능성
⑥참가기준	개별법의 의해 규제되고 일관성 상실. 일부 개별법의 경우 “원하면” 허용하는 처지
⑦투명한 지배구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청산기관의 지배구조 복잡성과 위험인수 능력 관련성 검증 필요

2) 정책과제

(중장기과제)

□ BIS 핵심원칙이 반영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및 감독체계를 확립해야 함.

① 지급결제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시하고 감시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지급결제에 대한 정의는 참가자, 지급수단, 자금이체(소액, 거액, 증권, 외환)시스템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

② 통일된 결제 참가자 적격성 기준 정립 통해 현행 개별법 상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

* 공통의 지급결제 준수기준 마련, 지급결제 운영기관의 세부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 심사, 필요시 변경 명령 등 지급결제 관련 정책 및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③ 지급결제관련 기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함

* 비영리기구인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 관련 기본인프라를 운영하고 공인인증 등 업무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규율장치는 사실상 전무

④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지급결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최적 책임배분체계 및 시스템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응방안 확보

□ 국제적 스탠더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확립하고 CPSS(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가입을 추진

○ G10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그룹인 CPSS가입을 통해 선진적인 금융 인프라의 구축뿐 아니라 금융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사. 정책금융시스템

1) 현황 및 문제점

- 정책금융기관은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역할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지면서 하드웨어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 국면에 진입
 - 특히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금융시스템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
- 현행 정책금융시스템은 정부실패, 정체성, 시장마찰, 자율·책임경영 및 경쟁력, 비효율적 지원체계 등의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을 노정
 - 시장이 실패한다고 하여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 정보 등의 측면에서 뛰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야기할 가능성
 - 경제 및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책금융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고 소유·지배구조와 기능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
 - 일부 정책금융기관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함에 따라 일정 부분 상업금융기관과의 경합이나 불공정경쟁 시비에 노출
 - 정책금융기관이 본체에서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경우 순수한 정책목적의 달성도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수한 상업성 추구도 어려워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경쟁력 제고에 한계
 - 특히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우 정책금융 관련부처간 연계가 미흡하고 유사한 종류의 정책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2) 정책과제

가) 바람직한 정책금융시스템의 구축

☐ 정책금융의 위상과 역할

- 향후 정책금융기관은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시장 기능을 보완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체제를 통합·정비하여 정책금융 집행상의 제반 비효율성을 시정할 필요

☐ 정책금융의 적정 규모 및 영역

- 정책금융기관은 상업베이스로 운영될 수 있는 부문은 가능한 한 민영화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재편될 필요
- 향후의 정책금융은 공공성과 리스크가 동시에 높은 영역(협회의 정책금융)이나 둘 가운데 하나가 높은 영역(광의의 정책금융)에 제한할 필요

☐ 정책금융 지원방식

- 정책금융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연계지원이 필요
-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접금융·간접금융·신용보증의 복합지원이 필요

나) 성공적 정책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과제

(1) 단기과제

- 당분간 현상유지(Stand-still) 원칙하에 KoFC, 기은, 신·기보,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간 역할 분담 내지 협력 방안을 마련
 - 정책금융기관은 협의 및 광의의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여 산은 지주회사 민영화에 따른 정책금융의 공백을 보완
 - 또한, 공공성과 리스크가 높은 영역을 위주로 새로운 정책금융 영역을 발굴하여 정책금융기관 상호간 및 정책금융기관-상업금융기관간 업무중복과 마찰을 최소화
-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금융회사간 유기적 지원 체계 마련
 - 관계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상업금융기관에 대해 전대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조건 우대
 - 관치금융 소지를 줄이고 상업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Covenant Banking 시스템 활성화
 -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지원자금의 성격 및 규모를 차별화하고 새로운 네트워크금융을 모색
- 보증연계투자, 투자(출자)전환옵션부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효과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현행 보증연계투자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주요국의 보증관련 투자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할 필요
 - 또한 투자(출자)전환옵션부 보증 등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추어 지원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2) 중장기과제

- 정책금융공사(KoFC), 각종 기금 등 금융위, 기획재정부, 중기청 소관 정책금융기관의 순수정책금융 기능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개선·정비하여 보증 부실을 축소하고 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관리 현황 및 시스템을 진단하고 신용보증 리스크관리 선진사례를 분석한 후 효율적인 보증리스크 관리기법 및 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할 필요
 - 신용보증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방안(예 : 전담기구 설치 또는 아웃소싱 등) 강구

2.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가.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1) 지배구조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제도 등 외환위기 직후 설계된 지배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제도 등 영미식 주주중심주의 지배구조가 국내 금융회사에 자리잡게 되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주주가치 증진 및 경영진 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과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FSB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는 주체인 OECD가 2009년 2월과 6월에 걸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영국 또한 FSA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해당되는 Walker review를 2009년 11월 발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 OECD와 Walker 보고서는 이사회역의 역할과 책임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격성 요건 강화, 리스크 관리 개선 등에 대한 권고안들을 제시
 - 특히 OECD는 권고안을 통해 이사들의 대한 적격성 심사(fit & proper test) 강화, 공시 강화, '원칙준수·예외공시(Comply or explain)' 원칙에 입각한 모범규준 추진,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

- 영국의 Walker 보고서에서는 비집행이사에 대한 FSA의 선임승인 면접 절차 강화, 사외이사의 활동 시간 증가, 이사회 평가 강화 등의 권고안을 제시

□ 국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 개선 필요성

- 우리나라 금융회사 이사회의 경우 경영진의 선임 과정 등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이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주주 또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기존 금융회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이 떨어지며 기존 전문성과 관련된 적극적 자격요건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저하에 기여
- 현재 은행권에서 새로이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

□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보상체계가 경영진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야기하여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보상체계 개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

- G-20은 금융기관의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금융기관이 위험부담을 과도하게 취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
- 국내 은행들의 경우에도 경영진의 평가항목이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성과에 주로 연계되어 있어 경영진들이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추구할 유인이 높은 실정임.
- 국내 금융투자회사 또한 이익성과에 치중한 성과보상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평가가 미흡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9개 항에 이르는 ‘건전한 보상체계의 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를 발표한 바, 우리나라도 FSB가 발표한 국제기준에 맞는 업권별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시행 중

나) 정책과제

(단기과제)

① 비은행권에 대한 사외이사 제도 개선

- ☐ 은행권에 이어 증권·보험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강구

②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개선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개선)

- ☐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인의 실효성 제고
 - 준법감시인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분담에 불분명한 면이 존재하므로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감사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 리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 단순한 경영지원 기능이 아닌 리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적 의사 결정과 참여 기능 강화
 - 리스크 관리 조직의 여신 업무 등 업무 공유를 배제하도록 명시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현재 제한적인 역할 수행이 그치고 있으며 지위가 불분명한 금융회사 리스크 전담 임원의 법적·실질적 역할 및 지위 강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개선)

- ☐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fit and proper test)을 강화하고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이사진의 독립적 임명 강화
- ☐ 선임계리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와 편제를 조정하여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증장기과제)

① 임원 등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 강화

- ☐ 임원 등 적격성 요건에 대한 주기적 심사제도 강화
 - 은행법상의 적격성 요건을 재점검하여 객관성을 강화
 - 저축은행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되 업권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
- ☐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및 소유구조와 연계한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확립
 - 연기금·공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로서의 감시(monitoring)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의 정비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
 - 소유가 크게 분산된 금융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② 보상체계 개선

- 최근 감독당국·업계 공동 T/F 등을 통해 업권별(은행, 증권, 보험, 금융지주회사)로 『보상원칙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상체계 설계 및 운영 등을 위해 이사회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 제고를 위해 보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상체계 설계시 리스크 관리 측면이 반영되도록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 이상 참여를 의무화
 -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담당 부서장 등에 대해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보수체계 및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
 -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보상 중 상당부분을 변동보상으로 지급하는데, 이 중 상당부분은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이연지급할 뿐만 아니라 주식·주식연계상품 등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는 형태로 지급하며,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래 지급할 변동보상을 축소하여 지급
 - 각 금융회사의 보상위원회는 보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공시

- 전 업권은 FSB 추가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나갈 필요

나. 금융소비자 보호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재인식고 있음
 - 그간 선진국은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에 주력하였으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 미국에서는 연방기구로 금융소비자 보호청(CFPA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중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경쟁력강화에 주력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음
 - * KIKO 문제, 펀드 불완전 판매, 보험상품 부실판매 등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
- 우선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측면에서는 정보공시, 판매행위, 광고, 약관제도 등이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업권별로 규제수준이 상이함
 - 자본시장법의 경우 법률제정시 국제적 추세와 자본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강화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은행법·보험업법 등은 적절한 규율체계가 미도입된 상황
 - 특히, 판매채널의 중요성이 커져감에도 판매채널의 진입, 인력의 자격요건, 교육, 보수, 책임 등에 대한 규율의 체계성이 부족함
-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제재 및 민원·분쟁조정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

-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 금융관련 협회, 민간기구 등이 자율적·개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금융교육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
 - 금융교육 정책 전담·총괄할 부서가 부재하여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미 등에 비해 예산 및 인력이 상당히 부족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자원 배분측면에서는 ‘금융위설치법’상 금융위의 업무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부서가 없어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며, 금감원 및 민간자율로 추진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도 전체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는 상황
 - 금감원은 금융민원,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 배분 등이 미약하고 조직내 관심이 크지 않음
 - 금융관련협회 등 자율규제기관, 민간기구에서 분쟁조정 및 금융교육 등을 수행 중이나, 그 역할은 아직까지 크지 않음

-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관행 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차별취급 소지가 상존하고, 금융회사의 혁신성 및 창의성 부족으로 광범위한 금융소외지대 및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시장이 존재할 가능성

2) 정책과제

(단기과제)

- ☐ 사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일관적·체계적 규제체계를 마련
 - 업종마다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법규체계의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과 감독규정 등에 산재해 있는 공시, 약관, 광고, 판매채널의 진입, 인력의 자격요건, 교육, 보수, 책임 등 관련규제를 일괄하여 정비
 - 금융회사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금융회사의 의무 명시(예: 금지행위 유형 구체화 등), 관련법령 준수의무 부과, 이해상충 예방, 선진수준의 상품설명과 권유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
 - 이를 위해 은행법·보험업법 등에서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율을 도입하여 소비자 보호제도의 일관성·체계성 제고
- ☐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제재 및 민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금융소비자의 불만 및 민원이 주로 제기되는 펀드 및 보험판매 등에 대한 테마검사(미스터리 쇼핑 등)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
 - 또한 민원 및 분쟁조정이 자주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 검사하는 등 민원·분쟁조정과 검사·제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과징금) 도입
- ☐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확충
 -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정규교육 이후에도 상시적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과 역량을 강화

-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한국투자자 보호재단 등 민간자율기구의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
- 금융기관들이 협회 및 민간자율기구와 협력하여 자율규제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
 - 비교공시제도 등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기능의 실효성 강화
 -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등 민간자율기구의 소비자보호감시활동 (consumer report 등)을 적극 지원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활동의 계획 및 집행에 반영
 - 금융기관들이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나가는 전통을 확립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역량 확충
 - 금융위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
 - 금감원의 경우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전담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역량을 강화

(중장기과제)

-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 영업행위 등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진입, 판매인력의 자격요건, 보수, 책임, 정보공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장치 마련
 -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경쟁촉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고 금융회사 퇴직자 등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력의 창업 및 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해 금융자영업자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취급 및 소외현상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서비스 심사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 배제하는 등 금융혜택의 기회균등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신용심사 및 평가요소에서 차별, 담보위주의 신용체계, 과거의 통계수치에 의존한 심사평가방법, 상환자원 및 상환능력 평가방법에 있어서 차별

○ 금융소외지역을 정의하고 금융평등배분지수를 개발·공표하는 등 금융소외로부터 소비자의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소매시장(미답시장)을 적극 발굴하여 금융 소비자의 시장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우선 아직까지 관련시장이 발굴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미답시장의 개발을 위한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방안 강구

○ 또한 미답시장에서의 높은 신용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과거의 공급자중심의 감독체제에서 소비자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상호신뢰구축에 의한 시장질서의 확립

○ 보호되어야 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충분히 보장

○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금융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의 형성

다. 고령화 대비 금융의 역할 제고

1) 고령화 현황 및 전망

-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선진국의 고령화 속도를 상회할 전망
 -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보건·영양 개선에 따라 평균 수명은 1970년 61.93세에서 78.63세로 증가하였고 2050년에는 83.5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
 - 14세미만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20년에 125.9로 상승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회하고 2050년에는 429.3이 되어 일본(337.5)과 독일(258.4)을 추월할 전망

<표> 고령화 및 부양비의 국제비교

(단위: %)

	고령인구비중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05	2010	2015	2020	2005	2010	2015	2020	2005	2010	2015	2020
한 국	9.1	11.0	12.9	15.6	12.6	15.0	17.6	21.7	47.3	67.7	94.8	125.9
일 본	19.9	22.6	26.3	28.5	30.0	35.1	42.9	47.7	144.4	171.1	211.7	246.3
독 일	18.9	20.5	21.3	22.9	28.2	30.9	32.3	35.5	131.7	153.3	168.9	185.9
프랑스	16.5	17.0	19.1	20.9	25.3	26.2	30.3	33.9	89.3	92.3	105.2	119.9
영 국	16.1	16.6	17.9	18.5	24.4	25.1	27.5	28.9	89.6	95.5	103.8	106.3
미 국	12.4	13.0	14.3	16.1	18.5	19.4	21.7	24.9	59.4	64.1	72.4	83.5

주: 1) 고령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임.

2)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임.

3)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100)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결과; UN(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 반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자산 확보 및 금융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08년 기준 공적연금 수급 비율은 20%를 넘지 않으며, 가구당 개인연금가입 및 퇴직연금 가입율도 각각 30%,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또한 2009년 6월 기준 부동산의 가계 자산 비중이 76.8%에 달하여 노후에 대비한 금융자산 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장기금융자산의 축적도 미흡한 상황*

* 2009. 9월 기준 개인연금, 연금보험,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각각 46조원, 80조원, 9조원에 불과

2) 고령화와 금융서비스 니즈

- 금융산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으로 인해 연금 및 장기저축 관련 금융수요 증가할 것에 대비할 필요
 -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55~60세)에 이르는 2008~2013년부터 향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수요가 확대될 전망
 -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수급자격 강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연금수요 확대에 따른 연금자산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확충도 필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 비율은 2010년 33.5%에서 2030년 56.9%, 2043년 46.4%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퇴직연금시장의 경우에도 세제 및 관련 제도의 개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에 따른 건강, 간병 및 의료 관련 보장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비한 보험시장의 육성도 필요한 상황
 -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수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비용의 충당, 고급의료 서비스, 비보장급여의 충당 등을 위한 민간 차원의 보장수요도 확대될 전망

-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관리 혹은 은퇴설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
 - 고령화에 대비한 은퇴설계 혹은 재무관리(financial planning)에 대한 금융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전망
 - 반면 은퇴비용이나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에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

- 고령화로 인한 자산축적은 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을 위한 해외투자자와 분산투자를 확대시킴에 따라 투자서비스의 다양화를 촉진할 필요
 - 고령화에 따른 금융자산 축적은 국내시장의 수익률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전망
 - 또한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자산관리에 대한 자산관리서비스 수요도 확대될 전망

3) 정책과제 (중장기 과제)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증가되는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령화 관련상품을 다양화할 필요
 - 주택연금(역모기지), 퇴직연금, 개인연금보험, 보장형 신탁제도,

장기펀드, 건강보험 및 보장성보험 등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중장기적으로 신탁, 보험 등이 연계된 복합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율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

□ 금융회사가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 적극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고령화 관련 상품이 장기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의 자산·부채간 만기구조 차이에서 오는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자산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장을 확충하는 것이 긴급요
- 이를 위해 장기국채시장, MBS시장, 물가연동채 등 장기자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

□ 고령화 관련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선진화

- 현재의 판매채널 하에서는 소비자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등 각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방문·상담하여 구입하게 되어 있어 소득, 생애주기, 투자성향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를 받기가 곤란
-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은행권의 프라이빗 बैं킹의 경우도 고액자산가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금융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금융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판매채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거쳐 종합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이 경우 소매금융상품 판매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

택권이 확대되고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금융권 퇴직자의 재취업 및 전문인력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자문서비스의 경우 단순집행판매(execution-only)나 설명판매(guided sale)에 비해 고도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 도입시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높은 진입요건을 부과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관련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가 피해를 입을 경우는 바로 노후대비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계약자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 연금 및 장기보험, 보장상품의 경우 수급권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투자자 및 계약자의 수급권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 관련상품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등 엄격히 제재하고, 필요한 경우 불완전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도 마련

□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는 조기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관련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선택역량을 확충

□ 개인들이 노후생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이는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반적인 세제 관련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은퇴 이전(pre-retirement)에 충분한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 혹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방안을 고려

- 은퇴 시점 이후에는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갖출 수 있도록 수급기간의 장기화를 도모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라.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

1) 신용평가

가) 문제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 논의가 추진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의 방만한 신용평가 및 이해상충 문제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도 금융환경의 변화 및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에 따라 국내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외국의 신용평가 규제체계 변화

- 국제기구와 주요선진국들은 시장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
 - 2008년 11월 G20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공시강화 및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미국 SEC는 2009년 4월 NRSRO 규정을 개정
 - * **NRSRO의 정보공개 강화, 이해상충 방지, 기록·보관의무 등 IOSCO 행동강령 일부 조항을 반영하여 NRSRO 규정을 공포**
 - 미국 재무부 신용평가 개혁법안
 - * **신용평가 고객에 대한 컨설팅 금지**
 - * **이해 상충의 공시 및 관리 강화**

* 평가보고서에 평가 수수료 공개 등

- EU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EU Committee를 통과하였음

□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대응전략

- S&P, Moody's 및 Fitch등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조직구조의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S&P, Moody's 및 Fitch는 IOSCO의 기준에 부합하는 **Code of Conduct**의 개정 및 행동강령 등을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Fitch의 경우 Fitch Group내에 신용평가부문과 정보제공 부문을 구분하여 신용평가는 Fitch Ratings가 전담하고 정보제공 및 컨설팅업무 등은 Fitch Solution이 담당하도록 분사하였음

* 이와 더불어 Fitch의 경우에는 구조화증권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등급과 동시에 손실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체계를 변경하였음

다) 정책과제

(중장기과제)

□ 신용평가회사의 진입요건에 대한 검토에 있어 신용평가의 경쟁과 신용평가의 질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

- 적절한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할만한 적절한 관리 자원의 요건을 적용하여 진입기준을 정비
- 주주에 대한 제한은 장기적으로 완화하되, 신용평가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인력, 전산설비, 자본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문성 등에 대한 요건과 인적·물적인 요건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청기관의 신용평가와

관련한 업무 경험 및 향후 능력을 위주로 한 질적 심사 도입

□ 규제체계의 개선

- 규제기관의 신용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혼선 방지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조회업자가 신용평가사와 동일한 등급체계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부수업무에 대한 정책 방향

- 신용평가와 부수업무 간에 차단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차단벽의 작동 여부를 규제기관이 감독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기관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독 지침을 설정

- 신용평가기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감독당국은 그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실시
- 내부통제기준은 IOSCO의 주요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설정함
- 영업조직과 평가부문의 분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피평가 고객의 인식 제고

□ 신용평가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방안 검토

- 신용평가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 업무에 대한 규제 검토
 - * 신용평가회사와 자회사 및 관계회사 간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화벽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검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

(중장기과제)

① 바람직한 시장구조 정립

- CB, 신용평가, 추심, ATM/VAN 등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겸업CB 업체와 개인 또는 기업 부문에 특화된 전업CB 업체가 혼재된 상황
 -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추심을 제외한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분야간 겸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
- 300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사업체 가운데 직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이 8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감안할 때 전업CB와 겸업CB의 정책적 방향 결정이 중요
 - 특히 SOHO 금융의 경우 개인정보의 평가 비중이 높아 기업CB 보다는 개인CB가 접근하기 수월
 - 가계, 기업, SOHO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에 RC산출을 통합하는 형태가 금융기관들의 인프라 구축 추세
 - KED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구조, 시장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겸업 및 전업의 장단점, 신용 인프라 시장의 지배 및 의사결정 구조의 공정성 이슈 등을 고려하여 매각 추진
- 우리나라 신용정보시장의 규모는 주요 글로벌 CB업체에 비해 매우 영세한 실정으로 글로벌 업체의 진입에 대비해 경쟁력 배양이 필요
 - 2008년 신용정보업의 전체 매출액은 9,737억원이며, 이 중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업의 매출이 7,111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협의의 CB 시장규모는 1,633억원 수준

- 이는 Experian 매출의 4%, Equifax 매출의 9%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 하에서 국내 CB업체의 지속성장 가능 여부 불투명

② 정보수집 채널 확대 및 분석 능력 제고

- 신용조회 업무의 활성화를 통해 신용정보시장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기반 확대와 분석 능력 제고가 선결 과제
 - 우량정보 공유 유인 제고
 - 공공 정보 수집 및 활용 제한 개선
 - 신용도 분석 도구 개선
 - 해외기업정보 확대
- 현재 기업CB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참여 유도 및 데이터 입수 원천의 확대를 통하여 DB Pooling 확충
 - 정보량과 대표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기관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은행 등 핵심업권부터 신용카드업권, 신용보증업권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와의 제휴를 통해 참여기관 확대
- 부정확한 정보의 생산, 정보의 외부 유출, 필요 목적 외 정보의 사용 등에 따른 소비자의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 공유정보를 사전 동의된 업무목적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목적 외로 이용한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
 - 정보의 이용 목적을 신규여신고객의 발굴, 신규여신의 실행, 기존여신의 유지, 부실여신의 채권추심 등으로 투명하게 명시하고 이용 목적의 추가는 협의체에서 결정

□ 정보 분석 능력의 제고

- 금융기관의 여신포트폴리오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CB 등급 분포를 전 산업 특성과 회원사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차주의 여신금액, 지역 특성, 규모 등 기준으로 유의한 포트폴리오 분석 필요
- 벤치마크 모형과 금융기관 내부평가모형의 validation 기능의 강화

□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신용정보 축적 확대

- 해외기업 신용정보는 상위 4개 글로벌 신용정보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 선진국 기업들은 자국의 수준 높은 정보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조사보고서를 사거나 수출보험 가입 등의 소극적인 위험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는 수준
- 현재 수출보험공사(신용정보업 겸영 업체)가 해외기업신용정보를 해외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거래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보유한 신용정보는 수출보험 인수지원 용도로만 사용하는 제약
- 따라서 선진국형 비즈니스 해외기업 신용정보가 조속히 정착될 필요

③ 신용정보법/신용평가법 분리

□ 신용정보와 신용평가는 보호대상, 정보제공 방법·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신용정보법과 신용평가법으로 분리

- 보호대상을 보면, 신용평가는 투자자인 반면 신용정보는 정보주체이며,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신용평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시인 반면 신용정보는 제한적 공개에 해당

마. 녹색금융

1) 현황 및 문제점

- ☐ 정책금융회사를 통해 총 6.1조원이 녹색산업에 지원되었으나 아직 지원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2009년중 현재 정책금융회사를 통한 지원은 대출 1.9조원, 보증 4.2조원 규모
 - 아직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는 등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
- ☐ 녹색과 무관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포장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버블 가능성도 존재
- ☐ 녹색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 부실 발생에 따른 감독소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2) 정책과제

(단기과제)

① 녹색금융 통계기준 및 지원기준, 리스크관리기준 마련

- ☐ 녹색산업 지원 근거 등을 산정하기 위해 녹색금융 통계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금융의 규모 산정 등을 동 통계에 의거하여 발표할 필요
 - 현재 금융회사들이 녹색금융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효과 등을 반영하여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녹색금융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녹색기술·프로젝트 인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인증제 및 확인제는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 기업의 범위가 정책금융의 기준으로 설정하기에 협소한 측면이 존재
 - 따라서 세제지원과 무관하게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별도의 녹색기업 선별기준을 마련할 필요
- 다만,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제정, 테마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녹색 금융부문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② 민간자금의 녹색부문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속 발굴

- 금융회사 특별출연에 대해 보증기관의 보증우대 등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대출 규모를 확대할 필요
- 녹색산업 주가지수를 개발하여 이와 관련된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을 촉진할 필요
 - 상장종목 중 우수한 종목을 선정하여 상품성 지수로 개발하고 관련 ETF 등의 상장을 유도
- 민간자금의 녹색부문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고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2020년 기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산업별 감축의무 할당에 따른 탄소저감시설 투자자금, 친환경 건물·도시 건축자금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

(중장기과제)

- 해외사례, 자본시장법 상 파생상품 규정, 거래소 설립 관련 비용,

시장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주체를 조속히
확정하여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

- 범아시아지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소와 주요 개도국 탄소배출권거래소
를 연계한 범아시아지역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추진
 - 배출권거래 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여 아시아지역 탄소금융허브 기반을 구축

바.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가) 금융인력현황

-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인력이 부족하거나 그 수준이 떨어짐.
 - 2002년 IMD의 국제경쟁력평가보고서에서 국제금융중심지운영에 필요한 금융인력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분석 결과도 금융전문인력이 부족함을 시사('09.8, 서울대)
- ☐ 한편,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향후 인력부족 예상
 - 금융전문인력은 2012년까지 6,600명('07.12, Mercer의 용역보고서), 약 6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09.8, 서울대용역보고서)

나) 금융전문인력 양성 추진 경과

- ☐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를 지향하면서 금융전문인력양성을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적으로 요소로서 상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 금융전문대학원을 신설(카이스트금융전문대학원) 재정적 지원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 자격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 ☐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지원
 - 재정경제부와 KAIST간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금융전문대학원」을 개원('06.2.28) 하였으며 정부는 교육비 지원

- 탄력적 학사운영 및 혁신적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의 선도적 역할(Role Model) 수행

* 금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함에 따라 국제경쟁력 제고

* 우수 외국학생 유치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지원

- 정부는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실무금융전문인력 1,300명, 금융리더(금융MBA) 1,500명을 양성할 예정

2) 정책 과제

(단기과제)

□ 향후 정부가 금융전문인력양성계획의 추진시 고려할 네 가지 방향

- 녹색금융 등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
- 청년들에게 국제적 금융 중심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
-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금융, 연금, 보험 및 노후소득설계 시장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기업 및 금융이 국제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 양성

①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수급전망 활성화

□ 기존 금융전문인력 수급조사는 체계적 인력관리를 하는데 미흡

- 향후 인력과부족 현황조사 및 직무별 인력수요조사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연구가 요망됨.
- 더불어 성장전망이 기대되는 녹색금융 분야 등에서도 수급전망

조사 필요

② 금융전문인력의 교육

☐ 금융전문대학원 지원 대상 확대

- KAIST 설립지원과 달리 현재 자발적인 MBA가 운영되고 있어, 설립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지원 등 정부지원의 차별화 필요
- 자산운용에 특화한 싱가포르의 금융전문대학원인 WMI (Wealth Management Institute)을 벤치마크할 필요

☐ 녹색금융 등 미래 금융산업에 적극대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력 양성

- 신성장동력이 될 미래금융산업을 발굴·선점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분야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
- 현재 녹색성장전망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바 이의 양성을 위한 녹색금융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사. 금융산업의 공익성

1)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 기준 은행의 사회공헌 투자금액은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투자금액(2006년 기준 약 1조8천억원)의 20%를 상회하여 은행의 공익사업 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
- 은행의 사회공헌 투자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 활동의 이벤트성, 일회성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
 - 은행의 사회공헌 투자금액이 크지만 일회성 성격을 지님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가 불가능
 - 이는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
 - 최근 은행이 공익법인 설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헌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일시적인 기부활동에 한정되어 있어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
 - 내부정책 또는 중장기적인 플랜없이 일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비용만 높아지고 평판제고 효과는 제한적
- 또한 현재에는 아직 SRI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으로 투자대상 선정시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인식변화가 필요
 - CSR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향후 SRI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SRI 펀드 출시가 활성화되어 투자문화의 변화를 촉진시킬 필요

2) 정책과제

(중장기과제)

①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 국내 금융회사들은 선진 금융회사들의 지속가능성 위원회와 같은 내부위원회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일상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
- ☐ 정책적으로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중을 상향조정하여 금융회사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위험에 대한 고려가 금융회사의 일상 업무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검토

아.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을 이용하는 공적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사적제도로 대별
 -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이용자는 2004년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적제도 이용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적제도 이용자는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
- 현행 채무자구제제도, 도산법개정안의 채무자친화적(debtor-friendly) 요소들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채권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
 - 채권금융회사간 자율협약 형태로 운영되는 사적제도는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제도에 비해 이용유인이 떨어지는 등 제도간 정합성 측면의 문제가 존재
 - 공적제도(특히 개인파산)에 대한 쏠림현상은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채권-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케 하여 사적자치를 구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 개인회생 절차신청시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별제권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할 경우 도산법개정안은 정상적 채무자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
 - 개인회생 절차신청시 채무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사적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

-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자동중지(automatic stay) 제도는 도산절차 신청의 남용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

2) 정책과제

가) 정책의 기본방향

- 합리적인 채무자구제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신의성실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권리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신용질서 및 공정한 거래관행 유지, 채무자구제제도의 유인부합성 제고, 채무자구제제도와 사회안전망간 정합성 제고라는 세부 목표를 수립할 필요
 - 신용질서 및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구제제도의 유인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조속히 퇴출시키거나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가 청산절차로 신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회생형제도와 청산형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공적제도와 사적제도간 정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단기과제

-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선의의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 면제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3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 맞는 회생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채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
 - 이를 위해 법원은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시 채무자들이 사전에 채무변제를 위해 성실하게 자구노력을 했는지, 신용상담 및 신용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는 상기 과정을 거친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신용상담이나 채무조정을 담당할 중재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도산법에 중재기관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개인회생/파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신용상담·교육을 받도록 하여 과채무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
- 사전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적제도 비참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자에 대한 진입 및 행위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부업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
 -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 주야간 과잉추심 금지, 원리금부담액 사전설명 의무화,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위임장 취득 금지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필요

○ 대부업협회에 광고빈도 등에 관한 자율규제권을 부여하되, 금감원의 건전성감독 및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편입할 필요

□ 개인채무자의 건전한 회생을 돕고 선의의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기보다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따라 법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다) 중장기과제

□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파산과 개인워크아웃간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상호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 개인채무자를 생활고형과 과다소비형으로 구분하여 과다소비형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에 의한 건전한 갱생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생절차(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를 이용하도록 유도

○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일몰규정을 두고, 동 규정을 초과한 생활고형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신청 없이 면책을 주목적으로 하는 청산형 절차(개인파산)로 신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

자. 금융지주회사 체제

1) 현황 및 문제점

- '09년말 현재 6개의 은행지주회사(우리, 신한, 하나, KB,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산은)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7개 금융지주회사가 운영 중이며, '08년말 현재(한국스탠다드차타드 및 산은금융지주 제외) 연결기준 총자산은 983조, 당기순이익은 3.6조원 수준
 - '08년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주회사 소속 은행들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006, 2007년 50% 수준)
- 주력 금융회사의 사업부문이었거나 자회사였던 사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비주력 부문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촉진되고, 은행에 대한 위험 전가의 개연성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자회사(legal entity) 중심의 기업문화와 법적·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그 간 뚜렷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없었음
-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수익원도 이자부문과 주력 자회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선진국 주요 금융그룹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이자부문 이익의 비중이 50% 내외인데 비해 국내 은행지주그룹의 이자부문 이익은 평균 70% 이상²⁾
 - 국내 시장에 대한 편중과 단기성과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다각화해야 할 것임

2) 2008년 기준 HSBC그룹의 이자부문 이익 비중은 48%, JP Morgan Chase 58%, Bank of America가 62% 수준이며, 우리금융지주가 96%, KB금융지주 88%, 신한금융지주 88%, 하나금융지주 70% 수준

- 한편,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따라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화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어 1999년 Joint Forum은 복합금융그룹³⁾에 대한 감독 가이드라인을 제시
 - 최근 Turner Review에서는 국제적인 대형복합금융그룹(complex cross-border institution)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국제적인 감독협의체(college of supervisors)의 활용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재무부의 금융개혁안에서도 향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피력
- 복합금융그룹은 크게 금융지주회사그룹, 모·자회사금융그룹, 외국계 금융그룹 및 금산복합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이들 중 금융지주회사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감독체계는 취약한 편
 - 복합금융그룹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
- 특히 금번 위기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체자금을 통한 은행 자회사 증자에 애로가 발생

2) 정책과제

(중장기과제)

- ①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시너지 및 업무효율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금융지주회사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정보 공유에 대한 「포괄적 사전승인」을 허용

3) '은행, 증권, 보험 중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 수행하거나 주된 사업이 금융업인 경우'로 정의

- 실시간 고객정보 공유가 불가능하여 고객정보의 수정, 대출 및 신용 카드 한도 변경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정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유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 시너지를 제고

□ 금융지주회사 내 비용절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복업무 통합 목적의 자회사 설립요건은 완화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되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금융회사에 대한 IT 용역 회사,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의 관리회사, 조사·연구 기관 등에 한정하고 있어, 공동구매 자회사 등의 설립은 제한되고 있음
- 중복비용 축소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자회사를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지주회사의 사업’으로 인정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위한 활동을 지원

□ 2010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의 경우, 지주회사 사업연도가 자회사의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내 연결 대상 회사 간 거래에 대해 면세 폭도 확대할 필요

- 법인세법 제76조의8②항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결산기가 상이한 자회사들을 연결납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황
- 또한, 연결납세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의 기준이 되는 지분율도 현행 100%에서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임(예: 미국 80%, 독일 50%)
-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그룹내 회사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내부거래가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내부거래에 대해서

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② 통합리스크 관리 강화

-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관리·통제 가능하도록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체계 선진화를 조기에 유도해야 함
 -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
 - 리스크 유형별(유동성·신용·거래상대방·시장·보험·비재무 리스크 등), 조직별, 상품별로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 설계
 - 그룹 차원에서 산출되는 경제적 자본, 손익, 예상손실, 자본비용 등을 이용하여 성과지표들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성과평가, 한도관리, 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모범기준 제시할 필요

- 또한, 극단적 상황에서 복합금융그룹이 받게 될 충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금융그룹이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경영층,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보고하며,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이를 통해 긴급한 시장상황 발생시에도 자회사 증자 지원 등 충분한 자금여력을 확보토록 함
 - 감독당국은 금융그룹이 자체 개발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 및 결과물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전체 금융회사의 결과를 취합하여 거시감독정책에 반영

③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우선 모·자회사금융그룹, 외국계금융그룹 등 금융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즉, 금융회사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및 독점적 경영을 강화시키는데 부당하게 이용되는지, 비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쉽게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지, 주요 주주가 금융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순환구조로 인해 금융회사에 가공의 자본이 계상되는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율을 체계화하기 위해 법적 정비 추진
-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기반의 Global Player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를 핵심 성장모델로 활용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지향하면서도, 유럽식 전업주의에 비해 방화벽이 강하고 투명성도 높아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
 - 향후 중국, BRICs, 동남아, 자원보유국에 대한 금융수요가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가들의 금융시장 및 금융인프라를 연구하고, 네트워크 및 정보를 축적하는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
 - 잠재력 있는 지역에 대해 우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금융회사들을 독려할 필요

3. 금융글로벌화 정책

가. 기존전략의 평가와 과제

1) 기존전략의 평가

- 우선 그동안 국내금융은 해외자본 유치에 초점을 맞춘 개방화 전략(inbound)은 급격히 진행된 반면, 현지화를 통한 해외진출(outbound)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자본의 유치는 개방화에 따른 단기차익 유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초래를 우려할 정도로 기대이상 빠르게 진행
 -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은 외환위기 극복이후 인접시장, 신흥시장, 혹은 선진시장(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 노력을 지속해오기는 했으나 국제화로 인한 국내금융회사의 수익성, 성장기반,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가) Inbound 국제화: 금융허브

- 금융중심지 정책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면서 런던, 뉴욕 등 국제금융센터나 역외기장센터보다도 아시아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런던과 뉴욕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금융센터를 목표로 추진해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조달센터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자금운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자산운용부문에 특화된 금융허브 구축방안을 추진해 옴.

- 자산운용부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이 필수적인 바,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지향
- 자산운용부문 참여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은행 및 공적기관의 투자은행업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유도함.
- 또한 2008년 하반기 이후 정부는 서울과 부산을 복수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되 부산은 해양-선박-수산금융 등에 차별화된 특화 금융중심지를 지향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금융허브의 유형 및 특징

국제금융센터	지역금융센터	역외기장센터
· 종합금융서비스 · 금융하부구조의 발달 · 성숙된 국내 금융시장 · 실물경제 기반 · 자금조달센터 · 기축통화	· 특화된 금융서비스 · 금융하부구조의 발달 · 성숙된 국내 금융시장 · 소규모 경제 · 제한적 자금조달센터 · 자금운용·수집센터	· 조세피난처
· 런던 · 뉴욕	· 홍콩 · 싱가포르 · 룩셈부르크 · 더블린 · 바레인	· 케이만 군도 · 라부안 · 버뮤다 · 바하마

□ 다만, 이러한 그간의 노력에 따라 금융중심지 지수 평가(the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에서 서울은 순위가 상승(09.3월 53위 → 09.9월 35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

나) Outbound 국제화: 해외진출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최근 세계화 추세 및 신시장 개척의 필요성 등으로 해외진출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
 -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 정리 및 합병, 부실점포 통폐합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가 급격하게 감소
 - 최근 국내은행은 해외진출 기업 등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GDP 성장률이 높은 해외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사업기회를 잡기 위하여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 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은행 수요가 많은 해외진출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해외펀드 개발을 위해 해외에 진출
-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는 아직 자국시장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현지화를 시작하는 초기단계
 - 2007년말 국내은행의 해외자산 비중은 2.8%로서 동기간 HSBC(49.7%)나 Mitsubishi(24.4%) 등에 비해 매우 작으며,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해외수익 비중도 2.6%에 불과
 - 국내 금융회사는 현지화가 미흡하여 해외시장에서도 국내관련 영업이 주를 이루는데, 가령 2006년말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여신 중에서 84%가 국내기업, 국내거주자, 교포 등으로 구성
- 이렇듯 현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과당경쟁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음.
 - 가령 2008년말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가 34개인데,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7% 수준인 시장에 그토록 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진출하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과당경쟁 소지가 있었음.

- 베트남 펀드의 열풍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가를 너무 올린 나머지 베트남의 주가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고점대비 70% 이상 하락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

□ 반대로 성급한 퇴장으로 해외진출 네트워크가 유실된 사례도 있음.

- 가령 외환위기 직후 중국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핵심시장에서 점포를 철폐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잃어버린 네트워크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 참고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수는 1997년말에 471개에 달했으나, 2009년말 현재 314개에 불과한 실정

□ 다만, 일부 국내 금융회사들은 선택과 집중, 단계적 접근, 현지화 등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향후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포석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가령 신한은행은 일본, 미국, 베트남, 중국 등 4대 핵심지역에서 소매금융 강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법인장과 지점장을 현지인으로 임명하는 등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신한은행은 외국계은행 중에서 두 번째로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일본인 법인장의 임명과 매력적 금리의 제시로 현지 예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엔화예금의 국내운용으로 외화유동성도 개선되는 부수적 효과를 누림.

□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의 합작 및 합자 등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데, 일부 금융회사들은 동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

- 신한은행은 베트남 Vietcom Bank와의 합자(50:50)로 신한비나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했으며, 현지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진 이후에 자체 현지법인을 설립

- 삼성생명은 1997년 태국 현지 SAHA 그룹(50%) 및 SCIB 은행(25%)과 합자하여 Siam Samsung을 설립한 이후 최근 진입장벽이 완화(외자사 지분한도 25%에서 49%로 확대)되면서 지분의 추가인수를 추진
- 미래에셋도 2007년 베트남에 합작법인(49%)을 설립했으며, 2009년에는 현지고객을 대상으로 한 웹트레이딩 시스템을 처음으로 보급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

2) 글로벌화의 전략적 고려사항

- 국내금융의 글로벌화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외취약성 완화 및 해외자금 조달기반의 다양화, 국내시장의 안정성 및 시장구조의 효율화 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 외화차입이나 외화자금 확보를 상당부분 글로벌 금융회사에 의존하는 현재의 관행이 글로벌화의 수준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음.
 - 금융부문의 국제화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대외적 취약성(예: 자본유출)에 의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가계 및 기업의 해외자산 보유 확대는 해외차입으로 인한 미스매치(mismatch)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또한 기업부문의 글로벌화 과정은 중장기적으로 해외차입 및 자금조달의 지역적 다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결국 대외취약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적정 수준의 해외진출은 대내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과잉성장에 따른 시스템위험 또는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글로벌화 확대는 대형화 및 자본력 개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시장구조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금융부문의 국제화는 금융허브 역할이나 해외투자의 촉진을 통해 경제발전이나 고용창출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도 있음.

□ 다만 국내금융의 글로벌화는 역외위험 증대 및 해외시장의 과당경쟁 가능성 등 부작용도 상존

- 글로벌화는 해외시장 불안이나 위기를 해외진출 금융회사를 통해 국내시장으로 전이시키는 역외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특정지역에 집중된 진출이나 해외진출한 국내기업 위주의 서비스, 무역금융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 등은 과잉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역외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종합적으로 국내금융의 글로벌화는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 금융부문의 부가가치에 미칠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그 범위와 형태, 규제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 금융부문의 글로벌화는 실물부문의 글로벌화 과정, 외화유동성의 안정화, 외화차입 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반면 글로벌화 전략은 역외위험의 통제 여부, 국내 금융회사의 역외경쟁 형태, 역외금융의 수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정책이 긴요
-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내 시장구조의 개편이나 정책기조도 고려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국내 금융회사들은 효과적 글로벌화를 위해 비전을 설립한 이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

- 즉 글로벌화를 일회성 이벤트로 인식하거나 가이드라인 없이 아무 곳이나 진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차근차근 진출하는 것이 중요
- 또한 해외시장에서 현지 금융회사 및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경쟁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므로, 비교우위 부문을 발굴하여 특화하는 것이 유효

3)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글로벌화 정책

- 위기 이후의 중장기적인 글로벌 환경 변화를 거시경제적 측면, 규제정책적 측면, 자산운용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적 측면, 글로벌 금융 M&A 시장 및 각국의 금융산업 정책 변화 등으로 대별하여 살펴봄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부문,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심화되고 위기국면이 일단락되면 금리수준도 상향 조정될 전망
 - 지난 수십년간의 저금리 및 신용팽창 기조가 일단락되고 가계 및 금융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심화될 전망
 - 막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중국, 산유국, 신흥국가들의 흑자로부터 발생한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완화되고 미국의 소비에 기반한 글로벌 성장은 한계에 달할 전망
 -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하에서 팽창했던 신용버블이 붕괴되고 위기국면이 일단락되면 각국의 금리수준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
- 규제정책적 측면에서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에 투입된 정부지분의 처분 문제가 부상하고 금융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
 - 지난 수십년간의 민영화, 개방화 기조가 완화되고 위기 국면에서 발생한 금융 및 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분처리가 부상할 전망

- 시장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정책에서 선회하여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protectionism) 정책 부상 가능성
 - G20 등을 통한 금융규제의 공조협력이 구체화되고 구속력이 강화될 전망
-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금융산업과 실물산업간의 균형회복,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금융의 중요성 부각, 자산운용업 고객기반의 변화 등이 예상됨
- 실물산업의 동반성장을 배제한 금융업 일변도의 성장주의가 쇠퇴하여 금융산업과 실물산업간의 균형이 회복되고, 금융업 종사자의 상대적으로 과도한 임금수준도 교정될 전망
 - 투자은행, 헤지펀드, PEF 등 레버리지를 통한 자기자산 투자 및 증권매매가 금융산업의 주요 수익원이던 추세가 완화되고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금융의 중요성이 재부각될 전망
 - 자산운용업 측면에서는 주요 자금원천이었던 미국 기업연금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이머징 국가의 연금자산(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소버린 펀드 등의 중요성이 증가할 전망
- 지역적으로 아시아주변의 자산운용시장은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아시아 자산관리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업무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산증가율이 유럽 및 미국 지역을 상회할 전망이며, 특히 중국과 한국의 연금시장이 연평균 20% 내외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중국 및 한국의 연금시장이 연평균 20% 내외로 급격히 증가하고 아시아 신흥국, 중동지역 등의 국부펀드의 규모도 급성장하는 추세

- 한편 중국, 일본, 호주 등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피해가 적은 국가들은 최근 금융위기를 해외진출의 기회로 보고 해외 M&A를 통한 적극적 해외진출을 도모
 - 중국 공상은행(ICBC)은 2009년 태국의 ACL 은행과 캐나다 East Asia 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며, 동년 중국투자청(CIC)은 미국 Morgan Stanley 지분을 7.68%에서 9.86%로 확대
 -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표적 파산회사인 Lehman Brothers의 아시아 및 중동부문을 인수함으로써 투자은행 역량을 강화했으며, 미쓰비시UFJ의 경우에도 Morgan Stanley의 지분 21%를 인수함으로써 IB 네트워크를 강화
 - 스페인의 싼탄데르 은행은 2008년 하반기 영국의 Alliance and Leicester 은행과 Bradford and Bingley 은행을 인수했으며, 미국에서는 Sovereign 은행을 인수
 - 호주의 ANZ은행은 한 때 세계최대 은행이었던 RBS의 아시아부문을 인수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주요은행으로 떠올랐으며, 자국시장에서는 ING의 호주 및 뉴질랜드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업무의 다각화까지 시도

<표 >

위기이후 각국의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국가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중국	- 외국 상업은행 인수/합병 및 설립을 통한 해외 금융서비스 확대 권고(07. 9. 8) - “금융정책 조치 9개항” 발표; 은행들에게 M&A를 위한 대출 허용(08. 12. 3) - 해외투자업체에게 투자금액의 30%까지 해외융자 허용, 총 \$300억 자금지원 (09. 6. 9) -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의 적극적 해외 진출 * 남아공 최대 Standard Bank 지분 20% 인수(56억불)(07. 10. 25) * 태국 ACL 은행 M&A(14억불) 추진 발표 (09. 6. 3) * 캐나다 Bank of East Asia 지분 70%인수(7200만불) (09. 6. 5) - 중국투자청(CIC)의 해외은행 지분 매입 *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7.68% 인수(56억불) (07. 12. 19) *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9.86%로 확대 (12억불) (09. 6. 3) - 중국초상은행(China Merchant Bank) 해외진출 * 홍콩 Wing Lung Bank 지분 53% 인수 (47억불) (08. 6. 2)
일본	- 미쓰비시 UFJ 그룹 *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21% 인수(96억불) (08. 10. 13) - 노무라 홀딩스 * Lehman Brothers 아시아법인 인수 (2.25억불)(08. 9. 22) * Lehman Brothers 중동법인 인수 (2억불) (08. 9. 26)
스페인	- 싼탄데르 은행 * 영국 Alliance & Leicester 은행 인수(26억불) (08. 7. 11) * 영국 Bradford & Bingley 은행 인수(7.5억불) (08. 9. 29) * 미국 Sovereign 은행 인수 (19억불) (08. 12. 10)
호주	- ANZ * 영국 로얄스코틀랜드 은행(RBS) 아시아네트워크 인수 (5.5억불) (09. 5. 20)

□ 이와 같은 환경변화가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및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표> 환경변화가 금융글로벌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긍정적(positive)	중간적(neutral)	부정적(negative)
거시경제적 환경변화			-금융 및 가계부분 의 디레버리징 -신용버블 붕괴 및 금리상향 조정
규제정책적 환경변화	-국내금융회사의 상 대적 건전성 양호	-금융규제의 국제적 공조 강화	-금융규제 강화 -자국산업 보호주의 강화
금융산업적 환경변화	-이머징 국가 연금 및 소버린펀드의 자산 증 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자산증가로 인한 우리나라의 지역적 메리트 증가	-금융산업과 실물산 업의 균형회복 -수신을 기반으로 한 도소매금융 중요성 증가	-레버리지를 통한 자기투자 쇠퇴
글로벌 금융 M&A 시장 환경	-다량의 값싼 물건 의 등장으로 인한 바이어 마켓 형성		-위기 영향이 상대 적으로 적은 국가 들의 경쟁적 해외 진출 정책

□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지수 및 금융산업 경쟁력지수 등이 외국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및 잠재력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

○ 국내은행의 초국적지수(TNI, transnationality index)는 4.3%로서 국제적인 비교에서 매우 저조한 수준임.

□ 또한 국내금융회사들의 기초 체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외환위기 이후 위험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로 ROE나 부실채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

<표>

각국별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비교

(단위: %)

국 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ROE	8.99	3.3	6.2	9.8	4.7	3.0
부실채권 비율	1.16	4.64	0.9	2.7	3.4	2.5

주 : 한국, 미국, 일본 2008. 12 기준, 영국, 프랑스, 독일: 2007.12 기준(단 독일 부실채권비율 2006. 12 기준)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9. 04,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할 때 기존의 금융 글로벌화 및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을 포기하거나 급격하게 재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정책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추진과제를 강구할 필요
- ☐ 특히 금융중심지 정책으로서 싱가포르, 홍콩 등 기존 아시아 금융중심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징 및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자산운용업 특성화전략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
 - 전 세계적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를 활용하여 파생상품에 특화하는 방안
 - 인덱스펀드 자산운용의 아시아지역 중심지로 특화하는 방안
 -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인터넷 산업 및 IT 기술을 융합하여 개인에 대한 새로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육성
 - 발달한 IT 산업과 능숙한 금융인력을 이용하여 아시아지역 금융산업의 back office 역할을 하는 방안
 - 우리나라에 발달한 조선업 등을 연계한 선박금융, 수출입 관련 무역금융(trade finance) 등의 틈새시장을 개발(부산의 경우)
- ☐ 싱가포르의 경우 기존 inbound 중심의 “금융Hub 전략”에서 2001년 Economic Review Committee 이후 inbound와 outbound를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Hub & Spoke 전략”의 병행을 참조할 필요
 - outbound 측면에서는 테마섹을 해외진출의 도구로 사용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완, 영국 등의 금융산업 투자에 활용

나. 금융중심지 정책

1)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 2008년 하반기부터 확산된 국제금융위기가 주요 금융중심지에 미친 경험을 교훈 삼아 금융중심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런던과 뉴욕은 외환, 상업은행업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바탕으로 세계 1, 2위의 국제 금융중심지 위치를 고수(2009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기준)
 - 두바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 일부 금융중심지의 경우 외국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고, 기존 금융중심지들의 전략도 바뀌고 있는 상황
 - 금융중심지 정책의 후발 주자로서의 약점을 극복하고 국제금융센터 중 하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방향 모색 및 지원 체제를 검토
 - 건실한 실물경제 기반, FTSE 선진국지수 편입 등 선진화된 자본시장, 전자공시시스템 등 세계 수준의 자본시장 인프라, 자산운용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 등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
-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 다른 동북아 금융중심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 중심의 기존 전략과 더불어 우리나라 특징 및 장점에 맞춰 실효성 있는 특성화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모
 - 전 세계적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를 활용하여 파생상품에 특화하는 방안
 - 인덱스펀드 자산운용의 아시아지역 중심지로 특화하는 방안
 -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인터넷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개인에 대한 새로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육성

- 해외 자본 및 금융회사 유치를 통한 국내 금융중심지 육성과 해외 진출을 통한 금융국제화 정책 방향 간의 조화
 - 거시경제 및 국내 금융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금융규제 개혁 등 지속적인 금융체질 개선 및 중장기적 입장에서 국제화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

2) 국내 금융중심지 간 연계 강화

-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간의 보완 및 연계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 서울·부산은 세부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되었고('10.1.6일) 후속 조치 진행중
 -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국내 시장규모와 국제화 경험을 감안할 때, 국제화 수준이나 범위는 단기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 글로벌 금융중심지 평가(the global financial index centres index)에서 서울이 35위(2009.9)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부산의 독립적 경쟁보다는 금융중심지간 연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
- 국가간 금융중심지 경쟁은 zero-sum 내지 negative-sum game 특성이 있지만, 국내 금융중심지 간에는 보완적인 positive-sum game 가능
 - 뉴욕의 경우 시카고, 보스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 지역금융센터들과 연계
 - 런던은 에딘버러, 맨체스터, 더블린 등 지역금융센터들과 상호보완을 통해 발전

3)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 체계 확립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의 국제화 수준이 제고되고 외국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 업종이 유치, 집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지원 추진
 -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의 금융관련 인프라와 외국회사 및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동반 개선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 노력이 중요
 -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외국 금융중심지의 대응 전략을 반영한 금융중심지 조성 및 지원 체계 확립
 -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세부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홍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
 - 금융중심지의 생활·경영환경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출입국, 세무, 법령 개선 등을 위한 범부처적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 추진
 - 금융중심지 경쟁력의 바탕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
 - 세부개발계획 진행 사항의 정기적 점검 및 추진과정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 지속

다. 금융회사 및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1) 금융회사의 글로벌화

가) 글로벌화의 고려사항

-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는 아시아 및 지역경제의 위상, 실물경제의 성장방향, 글로벌화의 기대효과 제고를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는 아시아 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따른 실물 및 금융부문의 성장성을 도모하는 데 있음.
 - 또한 국내 실물부문의 글로벌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관리, 현지화에 따른 자금조달, 환위험 관리 등 전반적인 금융수요의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금융회사는 국내 금융자산의 적절한 운용과 관리에 요구되는 금융역량과 글로벌 확대에 따른 경영위험에 대한 신중한 관리체계를 갖추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금융회사는 규모 및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업종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장기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시아 금융네트워크의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이나 인접시장 대비 규모 및 네트워크, 인지도 측면에 있어서 단기적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진출시장의 특성이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를 통해 시장별 및 업무별 기대효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기존의 시장진입 위주 전략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화와 업무기반 확충, 포트폴리오 투자 등 아시아 금융네트워크의 구축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금융인프라 패키지 수출 및 이와 연계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동반진출 방안을 모색
 - * 매매거래·예탁결제 등 자본시장 시스템(거래소·증권금융·예탁결제원·KOSCOM), 예금보험, 부실자산처리, 구조조정, 정책금융 지원체계 등

-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는 전문형 및 관계형, 국내수요 연계형 전략을 통해 글로벌 창구(gate 혹은 spoke)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아시아 이외 선진시장의 경우 규모 및 노하우 수준을 감안할 때 소규모 혹은 전문형, 지역밀착 형태로 지속될 전망이다.
 - 반면 자산관리 및 투자업무의 국내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선진시장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핵심 선진시장의 경우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자산의 장기 축적을 감안할 때 글로벌시장에서의 인지도 개선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창구역할을 계속 담당해야 할 것임.

나) 금융업종별 글로벌화의 방향

-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은행과 자본시장 부문, 전체 금융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여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 은행부문은 현지화 기조(outbound)를 강화하여 현지 영업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시경제적 효과와 장기적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다만 시스템안정성의 확보, 경쟁의 정도, 해외시장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예: 자산 및 자본력, 역외자산 규모, 지역비중)

※ 산탄데르 은행사례

- 우선 언어·관습 등 문화적 관점에서 시장침투가 용이하고 잠재적 성장성이 높은 남미지역을 대상으로 현지화 전략 추진
- 이를 위해 현지의 중소은행 인수 이후 현지인력 흡수 및 현지 영업 네트워크 구축하여 대형은행 인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 현지법인 경영진의 현지화 및 국가 간 유연한 브랜드 마케팅 실시
-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 대형은행 인수를 통해 시장지배력 확보

- 투자은행 부문 국제화는 우선 해외자금의 조달 및 유치 중개에 주력하되 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아울러 내국인의 해외투자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현지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며 아시아시장에 우선적으로 진출
- 보험산업은 국내시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험산업의 특성상 해외진출시 중장기 자산운용과 판매망의 확보, 수요기반의 발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투자를 필요로 할 것임.
 -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의 국제화는 아시아 내 중소국가를 대상으로 한 현지화와 더불어 거대시장에 대한 전문형 현지화를 도모할 필요

다)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과제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에 대한 감독기준도 선진화할 필요
 - 금융회사의 환위험(multi-currency risk)과 국가위험(country risk)에 대한 감독기준을 재정비하고 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글로벌화 전략은 현지화 전략, 지역전략, 퇴출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화의 조기 정착과 더불어 글로벌화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현지화 전략은 1단계: 정보수집 및 사무소 설립, 글로벌 인재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2단계: 지점 형태의 현지 국내기업과 현지 소형금융회사의 M&A, 국내 임원과 관리자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3단계: 현지 대형금융회사의 M&A, 현지인과의 공동 혹은 단독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함.
 - * 정보수집 및 **pre-M&A** 단계의 경우 신용위험 및 국가위험의 선제적 통제를 위해 **현지 혹은 국내 신용평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
 - 지역전략은 우선 1단계: 인접국가와 신흥국가 중심의 선별적 진출, 2단계: 주요 선진시장의 소규모 진출, 3단계: 선진 및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단계를 통해 지역적 확장을 도모할 필요
 - 글로벌화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하거나 영업이 부진한 사무소 혹은 지점에 대해서는 감독차원에서 영업정지, 통합,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다만, M&A 방식의 진출은 장기간의 현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

- 나아가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원만한 해외진출을 위해 정책당국간 공조를 통하여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정책지원의 초점을 맞출 필요
 - 국내 금융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진입,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이 필요
 - 진출 현지국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 대상국과의 쌍무적 협력도 강화하는 것이 중요

2)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국내 금융자산과 함께 대외자산(foreign assets)을 확충함으로써 민간부문 금융자산의 대내외 균형을 촉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금융자산의 글로벌화에 따른 평가 및 기대효과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미시적 측면에서 대외자산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글로벌 투자역량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개선, 현지화에 대한 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음.
 - 또한 대외자산의 축적은 글로벌 투자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의 개선이나 투자위험의 완화를 통해 투자자의 평생자산 관리(lifetime asset management)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 * 단기투자 성향이 높거나 특정 지역에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글로벌 투자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해외투자의 확대가 투자수익률 악화를 초래할 소지도 있음.

- 아울러 고령화와 관련하여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금융자산의 축적 유인과 금융자산의 활용기회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거시적 측면에서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자산시장의 안정화, 중장기 자본계정의 자유화 여건 조성, 환율관리비용의 완화, 국가위험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자국자산에 대한 편향 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자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국내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투기현상을 확대시킬 경우에 글로벌 자산 확대는 자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음.
 - 선제적인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역외자산의 지속적인 축적을 도모함으로써 중장기에 걸친 자본계정의 자유화 여건 개선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해외자산에 의한 민간부문의 양방향 자금흐름(inflows & outflows)이 효과적으로 유도될 경우 외환보유고 관리비용을 완화시킬 수도 있음.
 - 또한 위기상황(sudden stop)에 대비한 예비적 투자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순해외자산(net foreign asset holdings)의 증가를 통해 국가신용위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국내자산 투자에 대한 유인 축소와 해외로 급격한 자본이탈(sudden outflow) 초래 가능성, 외환시장의 쏠림현상 확대 등을 초래하여 환율변동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음.
 - 급격한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자산시장의 투자수요를 위축시켜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거나 해외자본의 이탈과 연계된 국내 자산의 이탈이 병행될 경우 환율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도 있음.
 - * 1997~8년과 2007~8년 발생한 금융위기는 자본자유화로 국제금융시장과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위기의 확산 가능성이 증대

- 따라서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국내 자산시장의 안정화, 금융산업의 글로벌 투자역량, 해외자산의 관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중장기적으로 연금자산의 축적과 민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 유인을 고려할 때 불가피
- 다만 해외자산 확대는 자칫 국내 자산가격(예: 주식 및 부동산)의 변동성(예: 경기순응성 측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글로벌 투자역량이나 경험을 통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내자본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역량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될 것임.
- 이런 측면에서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해외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체계(예: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보고 및 과세 체계 등)를 필요로 함.

<표>

금융자산 글로벌화 여건과 정책방향

구 분	고려사항	정책 방향
외환시장의 안정성	- 주식 및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을 감안할 때 일시적 이탈 가능성 존재 - 외화유동성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채규모의 지속적인 축소 필요 - 달러캐리의 청산 가능성에 따른 불안요인 잠재 - 반면 약 달러 현상의 지속 시 자본유입을 적절히 조정(fine-tuning)할 필요성 존재	- 점진적인 자유화 확대 필요성 존재 - 자본유입의 수준과 안정화 추이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국내 자산가격의 안정성	-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안정 국면으로 전환 - 반면 경기회복 지연 또는 금리상승 시 자산가격의 하락 가능성 존재	- 자산시장의 추이를 감안하여 범위 및 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
글로벌 자산시장의 안정성	- 선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가격메리트는 존재하나 단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한 측면 존재 - 자원경제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은 여전한 상황	- 투자다변화와 거시경제적 기여도(자원경제, 고성장 국가, 거대시장 등)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아울러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를 통한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자와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함.
-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단기투자자에 비해 중장기 투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거시경제적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자원경제(무역경제 보완)의 위험자산 혹은 선진시장의 채권(유동성)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이외에 환위험의 과다한 헤지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장기형 비헤지(non-hedge) 투자상품을 확대

□ 또한 금융자산의 전략적 해외투자과 관련,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

- 연기금 등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은 고령화 추세와 자산운용의 다각화 추세를 감안할 때 글로벌 투자 확대가 불가피
- 특히 해외사례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투자에 대한 전략적 추진계획(initiatives)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에 따르는 기대효과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임.

4. 금융산업의 경쟁력

가. 은행산업

1) 현황 및 문제점

가) 글로벌 경쟁력 측면

(1) 규모의 영세성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2008년 명목GDP 기준 세계 15위)에 비해 은행의 규모가 작고 은행들이 국내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 2008년 기준 『The Banker』 지 세계 1000대 은행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우리금융이 총자산 기준 81위, 국민은행이 87위, 신한은행이 89위를 기록하여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규모가 작음.
- 총자산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독일 14개, 미국 12개, 중국 8개, 일본 7개, 영국·프랑스 각 6개, 이탈리아·캐나다 각 5개, 스웨덴·스페인·호주 각 4개 등인데 우리나라는 80위권 은행만 3개를 보유
- 2008년 총자산 기준 세계 81위인 우리금융의 총자산 규모는 1위 은행의 6.6%, 10위 은행의 12.2%, 50위 은행의 53.1% 정도에 불과

(2) 글로벌화 미흡

- 국내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해외점포를 급격히 축소했으나 최근 세계화 추세 및 신시장개척 필요성 등으로 해외진출이 증가하는 추세
 - 국내 일반은행의 해외점포수는 1997년 190개에 이르렀으나, 외환위기 이후 부실점포 통폐합 및 철수 등으로 인하여 76개까지 감소
 - 최근 국내은행은 세계화 추세로 증가하는 국제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했으며, 그 결과 일반은행의 해외점포수도 91개로 증가

 -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경우 수익성도 국내점포에 비해 양호한 수준
 -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04년부터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을 상회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점포의 수익률이 급감한 2008년에도 해외점포의 총자산이익률(0.64%)이 국내점포의 총자산이익률(0.47%)을 상회

 - 그러나 국내은행의 국제화는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
 - 다국적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나타내는 TNI(transnationality index)는 국내은행 중에서 외환은행이 11.1%로서 가장 높는데, 이 역시 UBS(76.5%), Citigroup(43.7%) 등 글로벌은행은 물론 일본의 Mitsubishi UFJ(28.9%)보다도 현격히 낮은 수준
- * TNI는 해외자산/총자산, 해외매출/총매출, 해외직원수/총직원수의 산술평균
-
- 규모, 인력, 경영능력, 경험 등에서 글로벌 은행들보다 열위에 있는 상황
 -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09 국가경쟁력연감』에서 우리나라는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면에서 상위권(7위)이었으나, 금융 전문가의 인력풀(availability) 면에서는 하위권(44위)

- 동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경영인 인력풀(46위)과 경영인의 국제적 경험(48위) 면에서도 모두 하위권을 차지
- 진출전략 면에서는 현지화 미흡, 특정국가로의 쏠림현상, 업종선택의 단순성, 지역연구 부족 등이 국내은행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것으로 분석
 - 2006년말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거래처별 여신 현황을 살펴보면 현지 국내기업(47%), 국내 거주자(20%), 교포 및 교포상사(17%)로 나타나는 등 현지화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
 - 국내은행은 단기간에 베트남 등 특정국가에 대한 쏠림현상을 보였으며,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단일 자회사로만 진출하는 경향
 - 목표시장 선정, 시장진입방식의 선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해외사업부문 강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역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국내은행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
- 아울러 국내은행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자국 은행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해당국 정부와의 금융외교가 매우 중요

나) 수익성 측면

- 국내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이익창출능력의 지속적 약화임
 - 명목 순이자마진은 2005년중 2.81%를 기록한 이래 지속하락하여 2009.6월말 현재 1.85%
 - 국내은행의 핵심이익률은 2004년 2.7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6월말 현재 1.80% 수준

- 이는 (수수료이익/총자산)과 (이자이익/총자산)이 2005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이자수익기반과 비이자수익기반이 동시에 약화되었기 때문
- 이와 같은 수익성 저하는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데다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은행 뿐 아니라 타업종과의 수신경쟁이 격화된데 주로 기인

다) 건전성 측면

- 최근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과 손실흡수 여력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 유지
 - 2008년 6월말 0.70%이던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9년 6월말 1.50%까지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동기간 202.7%에서 124.4%로 하락
- 다만, 향후 경기회복 지연, 중기지원 축소, 명목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 악화요인이 상존
 - Fast Track 등 중기지원이 점차 정상화될 경우 중기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 낮은 고용률 수준 및 실질임금 및 소득증가율 등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 금번 금융위기과정에서 국내은행의 유동성 리스크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그 취약성이 노정
 - 우선 원화유동성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은행의 자산확대 경쟁으로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리먼파산이후 신용경색이 발생하자 원화조달여건이 악화되어 은행채 상환 애로에 봉착

- 또한 이러한 자산확대경쟁의 결과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예대율 (예금에서 CD 제외)은 2008년 3/4분기말 139.4%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09년 8월말 현재 133.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아울러 은행 외화유동성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그간 단기 차입금 급증으로 외화차입금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증가

2) 은행산업 SWOT 분석

강점	기회
○ IT 분야의 높은 경쟁력 ○ 외환위기 극복의 노하우 ○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 구조개선 ○ 세계적인 수준의 실물부문 ○ 우수한 인적자원	○ 글로벌 위기 이후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통적 상업은행 역할 강화 ○ 경기회복과 금리상승 ○ 은행민영화 등 M&A 기회 ○ 퇴직연금시장 확대
약점	위협
○ 은행간 비차별적 비즈니스 모델 ○ 금융인력의 전문성 부족 ○ 단기성과 중시 경영행태 ○ 외화 및 원화유동성 문제 ○ 취약한 수익구조 ○ 글로벌화 미흡	○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 ○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 은행 수신기반 위축

3) 발전방향

가) 은행산업 구조의 변화

- ☐ 금융 국제화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선진국의 거대은행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업무 중심의 세계적 규모를 갖춘 대형 은행의 탄생을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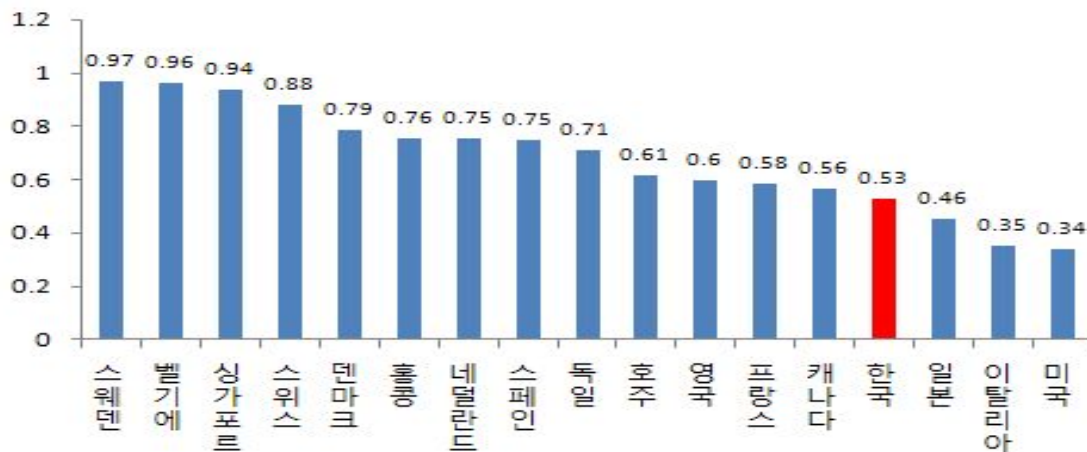
토 해볼 수 있음.

- 2008년 기준 『The Banker』 지 세계 1000대 은행에서 우리금융그룹이 총자산 기준 81위, 국민은행이 87위, 신한은행이 89위로 세계 15위인 우리나라 GDP규모에 비해서는 개별은행의 규모가 작은 편임.
- 대형은행은 규모의 경제효과로 비용효율성 증진, 범위의 경제로 수익원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이 가능함.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이 아닌 점도 중요한 고려요인임

- World Ban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말 현재 은행산업 CR₃가 0.53으로 해외 주요국 중 우리나라 은행산업보다 시장집중도가 낮은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미국 정도임.

<그림 > 주요국 은행산업 CR3 동향



주: CR3는 자산 기준 상위 3개 은행 자산이 전체 상업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World Bank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상위 3개 은행의 자산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2008년 「The Banker」의 데이터를 기초로 했을 때 우리나라 은행산업내 최대 은행의 GDP 대비 총자산 비중은 0.2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임.
 - 우리나라 상위 3개 은행 총자산 합계의 GDP 대비 비중은 0.7로 미국 보다는 높지만 여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을 보았을 때 은행산업내 상위 리딩뱅크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이 불가피

2008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R1/GDP	0.2	1.3	0.8	1.0	0.9	2.1	1.4	1.8	0.5	0.6	0.4	0.2
R1+R2 /GDP	0.3	2.4	1.1	1.8	1.4	3.2	2.0	3.4	0.9	1.0	0.7	0.5
R1+R2+R3 /GDP	0.4	3.3	1.2	2.3	1.6	4.1	2.6	4.4	1.2	1.4	1.0	0.7

자료 : The Banker(2004~2009년),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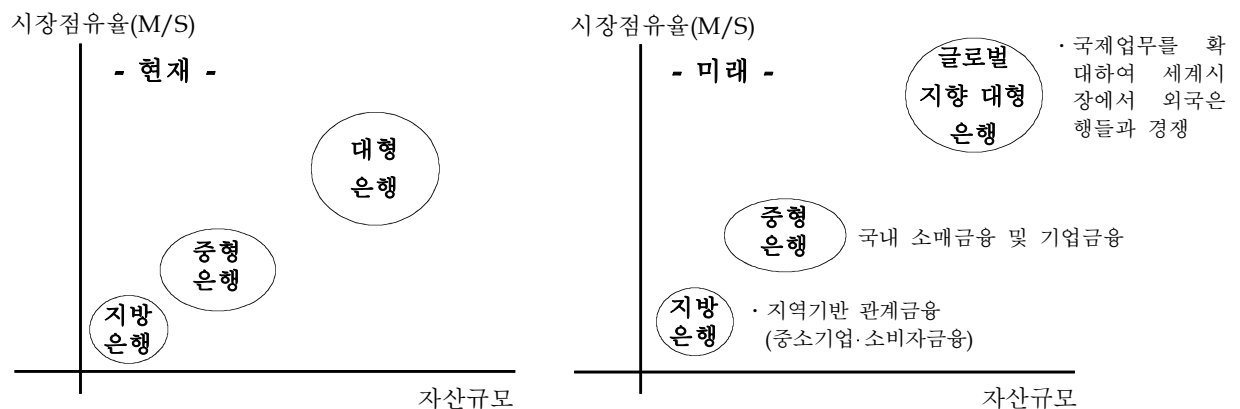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은행산업은 1~2개의 '글로벌 지향형 대형은행', 3~4개의 '국내시장 중심의 중형은행'과 다수의 '지역은행' 그룹으로 재편되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금융시스템 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
- 글로벌 지향형 은행은 주로 국제업무에 집중하며 세계시장에서 외국은행들과 경쟁하고 국내시장에 집중하는 중형은행 및 지역은행

은 관계금융, 소매금융, 지역금융 등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산업이 국제경쟁력도 갖추면서 국내 실물경제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글로벌 지향형 은행의 전략
 - * 국제적 파트너십에 의한 국제적 은행그룹 지향
 - * 역내 또는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업금융 서비스
 - * 국내 대기업의 국제화 지원 서비스
 - * 소매금융 업무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국내시장 중심의 중형은행의 전략
 - * 소매금융 및 국내 기업금융 업무중심의 영업구조
 - * 중장기적으로 대형화 추구
- 지역은행의 전략
 - * 지역기업 및 고객 등을 중심으로 관계지향적 영업 강화
 - * 지역은행 등간 연합 등 전략적 제휴로 다양한 상품/서비스 제공
 - * 중소기업 업무에 특화

<그림>

은행업 구조의 변화



나)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 향후 우리 은행산업은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금융시스템 안정 및 실물경제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 특히 “실질적 국제화”를 실현해나감으로써 이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
 - 아울러 은행별 특성을 감안, 발전경로를 차등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은행”이 탄생하도록 유도

- 국내 은행산업은 안정적 성장, 적정수익성 유지,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 역할 등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불안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안정적 성장기조는 과도한 여수신 중심의 구조 및 여신경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위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핵심 Tier 1 및 Tier 1 자본을 확충하고, 핵심예금기반 구축, 자산유동화 확대, 외형경쟁 억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원화유동성 확보를 도모
 - 또한 외화부채규모 축소, 외화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 최소화, 외화만기구조 장기화를 통해 외화유동성 안정화를 도모하고, LTV, DTI 규제와 함께 불황기 부실 흡수를 위한 완충자본 확보
 - 국내은행의 수익모델은 이자이익의 안정화 기반 위에 판매형·중개형 비이자이익을 보완해가는 수익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 단, 시장 및 신용위험, 매매위험을 수반한 비이자수익 확대는 레버리지 규제 및 자기자본 규제와 연계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실물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역할은 기업부문의 건실화를 유도함으로써 거시건전성을 높여 복합위험 및 시스템위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자금가용성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자금수요 및 가계부문의 부동산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여신기능을 유지·강화하여 가계 및 기업부문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

- 예금수취기능 및 지급결제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창출함으로써 타 금융권과 차별화
 - 예금수취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급결제 하부기반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
 - 은행의 유동성 창출이 중개비용 절감과 금융시장 효율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 중장기적으로 은행은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중심지 육성, 금융산업의 전략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함.
 - 자본시장 육성정책 및 이에 따른 간접금융시장의 비중 축소로 인해 은행산업의 성장기회 축소는 불가피
 - 반면 산업부문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자금조달의 필요성,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등에 대비하여 글로벌화를 추진

4) 정책과제

가) 산업구조의 개편

(단기과제)

-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임시로 지분을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를 조속히 민영화할 필요
 - 민영화 지체시 예보채 이자비용 가중, 은행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한 조기민영화를 추진할 필요
- ☐ 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도 조속히 달성
 - 이를 위해 산금채 위주의 자금조달 구조 개선,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각종 건전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업은행의 재무구조 개편 등 체질개선이 선행될 필요
 - 한편, 산업은행 민영화 이후에도 신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산업은행 민영화 전까지 정책금융공사의 조직 정비, 역량 확충 등이 선행될 필요

나) 안정적 성장

(단기과제)

- ☐ 우선 경영진의 단기실적 지상주의 및 외형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경영진의 평가항목을 개선할 필요
 - 즉 장기실적을 보상체계에 반영하면서 확대경영 인센티브를 낮출 경우 외형경쟁 완화로 순이자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부실채권 급증에 대비하여 부실채권을 원활히 정리해야 하며,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연쇄부도를 예방할 필요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구조조정기금의 효과적 운용으로 부실채권을 원활히 정리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옥석가리기를 통해 살릴 회사를 확실하게 살려야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음.

(중장기과제)

- 국내은행은 신용평가 기준의 개선과 대출심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신용평가 능력을 높일 필요
 - 현재 국내은행의 신용평가 기준은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 심사자의 신용평가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문제점
 - 대출금리 책정을 위한 첫 단계로서 고객별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우 기업이 속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기업의 경쟁력 및 현금흐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
- 한편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편하자는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국제적 추세를 따라갈 필요
 - 가령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보통주로 구성하는 방안, 레버리지비율을 규제하는 방안, 대손충당금은 동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건전성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결과를 잘 반영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
- 은행 및 은행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파악 및 측정을 정교화
 - 위기 상황에서는 유동자산의 종류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과 용이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므로, 현금성이 높은 자산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들이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자산을 위주로 단기자산을 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현재 유동성비율 산정은 보고시점 기말 기준인데 기간 평잔으로 변경
- 자산과 부채는 만기도래 시 청산 가능성이 비대칭적이므로 유동성에 관한 표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 스트레스 검증과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을 국내은행 및 모든 (유사)예금 취급기관과 지급결제망 참가 금융회사에 의무화할 필요
-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충격으로 인한 spillover effect 등 총체적 효과(aggregate effect)를 감안하여 규제
- 또한 현재와 같은 개별 금융회사의 독립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인 VaR과 더불어 금번 금융위기와 같이 타 금융회사도 어려움에 처할 경우를 고려한 CoVaR 기법 등을 검토할 필요

□ 외화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슬람 자금 및 사무라이본드 등으로 기채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해외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강화

□ 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면 국내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신 규제체제로의 유연한 이행을 위해 레버리지 관련 지표의 명시적 규제와 자본의 질 제고를 앞서 시행하는 것을 고려

□ 내부유보의 확대나 보통주 증자 확대를 통해 자본의 질 제고

- 중장기적으로 내부유보의 확대를 위해 배당규모 조정이나 특별충당금 적립 등의 배당 정책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은행에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 보통주 증자는 자율방식, 간접방식, 직접방식으로 구분하여 접근
 - * 간접방식: 보통주로 계산되는 재무비율 규제의 도입, 유인책 부여 등으로 보통주 증자를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
 - * 자율방식: 여러 은행이 동시에 보통주 증자에 나설 경우 은행업 주가의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별 보통주 증자시기를 감독당국과 은행간 대화채널을 통해 사전 조율

* 직접방식: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자본확충펀드를 은행들의 보통주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다) 수익여건 개선

(단기과제)

- ☐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문턱을 하향조정할 필요
 - 즉 높은 가산금리가 책정되는 저신용대출을 대출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출자산의 평균적인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효과
 - 이러한 대출문턱 하향조정은 순이자마진 제고 외에도 경기불황에 따른 금융소외자의 금융수요 만족, 사금융의 폐해 완화, 대출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국내은행의 수수료 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취급펀드 엄선 및 판매펀드에 대한 품질관리,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판매만족도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
 - 즉 불완전판매 및 불만족으로 인한 신뢰상실로 시장지배력이 약해지고 있으므로, 각종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부터 회복
- ☐ 한편 비용 측면에서는 이자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은행의 저원가성 수신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
 - 만기 1년초과 장기예금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 안정적인 수신기반 확보 지원
 - Debit 카드에 대한 세금공제 규모를 신용카드보다 크게 함으로써 Debit 카드 사용을 장려하면 핵심예금이 증가
- ☐ 나아가 국내은행은 지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영업이익경비율

(cost-to-income ratio)을 개선할 필요

- 국내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은 2004년 40.8%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한 뒤 2009년 2/4분기에는 46.3%로 상승
- 국내은행의 지점당 영업이익은 대손상각 효과를 제외한 상태에서 2007년 26.9억원을 기록했는데, 이후 2008년(14.5억원, -46.3%)과 2009년(잠정치 834.2억원, -42.5%)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국내은행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점포 현지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수익기반을 다각화해야 하며, RP시장 활성화 및 복합직군제 도입으로 비용구조를 효율화할 필요

- UBS의 경우 1998년과 2006년 사이 자국 내의 영업이익이 168억 SF에서 130억 SF로 감소하는 와중에 해외부문 영업이익은 55억 SF에서 352억 SF로 증가
-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고객이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객군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RP거래는 채권수익률을 기초로 RP거래 대상 채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
- 국내은행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단일직군제보다는 전문직, 행정직, 판매직 등 다양한 직군으로 직원들을 전문화해 가는 방안 검토

라) 실질적 글로벌화 촉진

(중장기과제)

① 해외진출대상국 정부와의 소통 및 정보제공

- 국내은행 해외진출시 현지 감독당국과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와 해결책을 제공함은 물론 현지 감독당국과의 네트

워킹 및 경제외교를 강화할 필요

- 국내은행이 주로 진출하는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경우 금융규제와 관행이 불투명한데다 예측이 어려우므로, 현지금융 협의회 등의 설립을 통해 정보를 중앙집중 관리하면서 이를 국내은행과 공유할 필요
- 특히 현지 한인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하여 해외진출상 제약뿐 아니라 현지영업상 애로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 감독당국과 협의할 필요
- 또한 정상회의, 장관회의, 실무자급 회의 등을 계기로 각종 진출장벽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정치인들도 경제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금융감독 당국간 MOU 체결 등 금융감독 협력강화를 통해 현재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현지 지점설립 인허가 심사절차의 간소화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일 필요

② 해외진출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 국내은행의 본점과 해외점포를 통합하는 종합적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후관리 비중을 높일 필요
 - 현재 법적으로는 은행지점 설립이 자율화(사전협의)되어 있으나 사실상 감독당국이 사전 협의를 엄격히 운용
 - 따라서 사전 통제보다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해외진출 은행의 종합적 리스크 상태를 관리할 필요
 - 국내은행은 해외부문의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해외점포와 국내 본점을 통합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최근 해외영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

③ 핵심역량의 강화

- 국내은행은 해외진출에 앞서 핵심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특히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
 - 가령 영국과 호주는 각각 FSSC와 AFSTA의 설립을 통해 금융전문인력을 양성
- 국내은행은 연구기능의 글로벌화를 통해 지식경쟁을 선도해야 하며, 지주회사의 경우 수익시너지 창출에 보다 유념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연계영업과 교차판매 등을 통해 수익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단일 금융회사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형편임.

④ 틈새시장의 개척

- 국내은행은 해외진출 대상국 및 진출업종의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을 완화할 필요
- 글로벌 은행들이 밀집한 아시아 시장에서 그들과 동일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글로벌 은행들이 간과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일부 국내은행이 해외진출 주력업종으로 선정한 투자은행 업무의 경우 글로벌 은행들과의 경쟁력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공략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글로벌 은행들이 흡수하지 못한 특정 고객들에게 영업을 집중하는 틈새고객의 공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은행들은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거나 지역색이 강한 고객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고객들에게 집중함으로써 고객층을 확보할 필요
- 틈새고객은 글로벌 은행들에게 서비스를 받지 않는 소외고객이 될 수도 있으나, 특정 고객군에게 집중하여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틈새고객군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음.
- 후자의 경우에는 한정된 자원을 특정고객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 고객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글로벌 은행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임.

⑤ 현지은행과의 공조체계 구축

- 국내은행은 지점설치와 인수·합병 등 해외진출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리스크 대비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과 합자(joint stock) 등을 통해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
- 국내은행은 규모도 작는데다 출자제한이 있어 현지은행의 인수·합병이 쉽지 않은데, 부채비율 부담이 높은 차입인수(LBO) 방식보다는 컨소시엄이나 합자 방식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

⑥ M&A를 통한 적극적 현지화

- 국내은행은 효과적 현지화를 위해 현지의 고급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인수·합병 전략을 사용할 경우 소규모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 국내은행이 현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금융상품 개발, 감독당국과의 소통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문호개방을 통하여 현지의 고급인력을 채용할 필요

- 국내은행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 은행에 대한 인수·합병 및 통합 (PMI)부터 성공한 이후에 인수대상의 규모를 늘릴 필요
- 가령 Santander는 중남미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 ‘지점 설치→ 현지 중소형은행 인수→현지 대형은행 인수’ 등 현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나. 금융투자산업

1) 현황 및 문제점

가) 글로벌 경쟁력 측면

(1) 현황

□ 국내 투자은행 부문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이는 국내 대형증권사까지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로 인하여 초대형 M&A 자문이나 유가증권의 발행·인수 건에 있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에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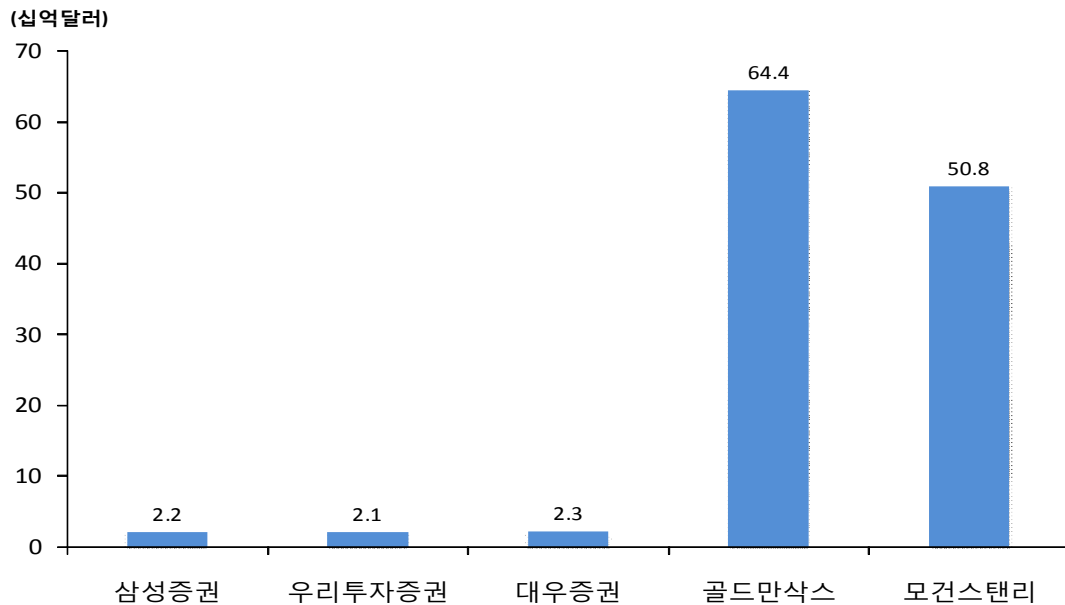
○ 이는 국내에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자본규모가 큰 대형 투자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일본의 경우 노무라, 독일은 도이치 뱅크, 호주는 맥커리, 스위스는 크레디트 스위스와 **UBS**, 프랑스는 소시에트 제네럴과 **BNP파리바** 등이 자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자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한 경우임

□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기준 국내 3대 증권사와 글로벌 IB의 자기자본 규모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자기자본 규모는 각각 660억달러와 730억달러로 우리나라 대형 3사 자기자본 규모의 30배를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음

<그림> 국내 3대 증권사와 글로벌 IB의 자기자본 비교



- 2000년대 걸쳐 국내 증권사의 자본력의 증가 추세는 꾸준히 있었으나, 증권사간 합병을 통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2005년 이후 나타나지 않는 점도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력이 크게 확충되지 않는 원인인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 유수의 선진 투자은행간 경쟁이 아시아 및 국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력은 중요한 경쟁력 요소라는 관점에서도 자본력 확충이 요망
 - 자본력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의 투자은행과 합병할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수익구조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국내 증권사 자본력은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부족한 규모로 여겨짐

- 국내에는 투자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전문화에 성공하거나 독자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IB 모델을 찾기 힘들
 - 현재 국내 증권업계는 증권사 간 경쟁력 차이가 미약하고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평판구축을 통한 서비스 경쟁과 증권사의 전문화 및 특화가 부족하기 때문
- 현재와 같이 증권사들이 유사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증권사 간 합병이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신디케이트 형성이 별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증권산업 발전에 있어 큰 장애가 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증권사의 대형화를 위해서 증권사간 합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증권사들의 무차별한 수익구조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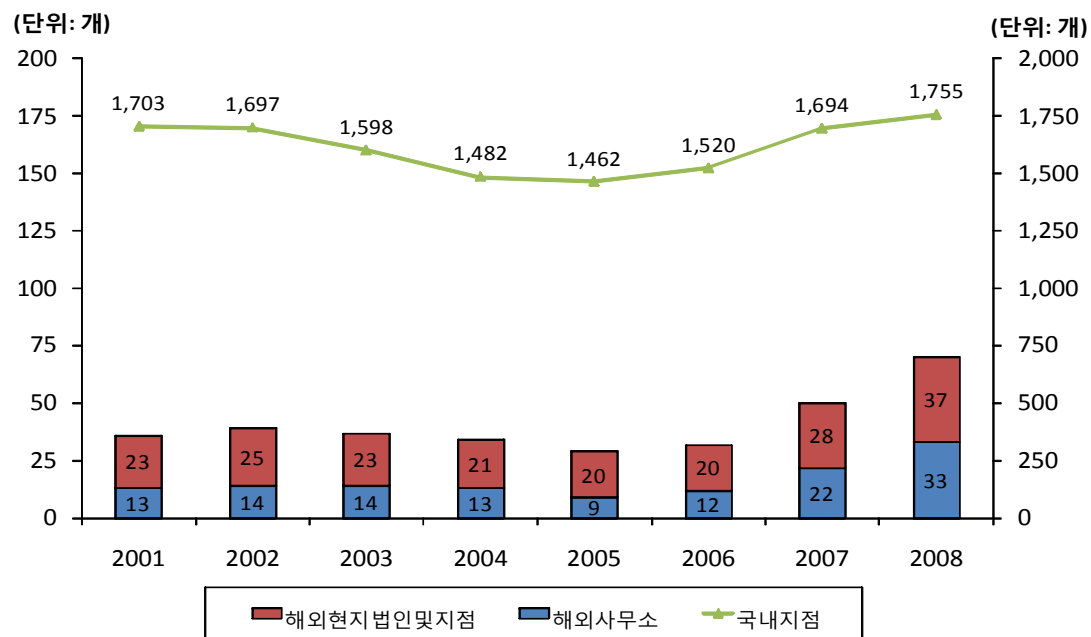
(2) 글로벌 네트워크

- 국내 증권사는 대부분 해외시장 점포를 대폭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경우 자국 내 수익에 버금가는 해외 지역별 수익을 내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권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투자은행 업무의 핵심은 투자자와 기업 간 중개기능으로서 투자은행의 성공여부는 양측의 고객네트워크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음
- 2008년 기준 국내 증권사의 국내지점 수는 1,755개이고 해외현지 법인 및 지점, 해외사무소가 각각 37개와 33개로서,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 현황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기준 해외 지점은 오직 1개이고 현지 법인과 해외사무소가 대부분이며, 업무 영역도 제한적이어서 투자은행 면모를 갖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상태임

<그림> 국내 증권사의 국내지점 및 해외진출 추이



- 국내 증권사의 해외 진출이 미진한 이유는 국내 증권사의 IB업무 경쟁력 부족, 영세한 자본력, 아시아 권역을 비롯한 해외시장 공략에 있어서의 위험노출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여짐

- 반면 글로벌 투자은행의 해외진출로 인한 지역별 수익기반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골드만삭스의 경우 미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무려 46%의 영업수익을 냈으며, UBS와 Deutsche Bank의 경우 자국 내에서의 영업수익이 각각 27%와 25%로서 해외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음

- 국내 증권사들이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점포 구축이나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업무영역이나 사업전략도 다양화되고 있음

* 해외시장 사업영역으로는 부동산**PF**(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등), **Pre-IPO** 투자(중국, 카즈흐스탄, 말레이시아 등), **NPL** 투자(중국), **PEF**(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PI**투자(중국, 라오스 등), 해외 **IB** 제휴(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등) 등이 있음

- 국내 시장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과 자본시장 업무가 점차 해외시장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 증권사의 해외 네트워크는 매우 미진한 상태임

- 증권발행업무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어야 하고 자국기업과 해외기업 간 M&A 시장도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는 점점 중요한 경쟁력 요소가 되고 있음

* 해외 증권발행이나 국경 간 **M&A** 자문 등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에 있어 우월하기 때문임

(3) 금융 전문인력

- 최근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 및 시험제도 대폭 개선('10.2.4일 시행)

-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있던 자격제도를 단순화(자격종류 20개 → 7개, 시험종류 11개 → 6개)
- 영업현실을 반영, 보수교육 강화, 시험과목 개선 등으로 자격제도를 합리화

- 그러나 국내 증권회사의 주된 수익원이 위탁매매라는 점에서 투자은행 업무, 리스크 관리 및 금융상품 개발 등을 위한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의 금융전문인력 구인수준은 금융허브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임
 -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전문인력 구인수준 및 외국인 고급인력 보유 현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매우 취약한 수준임
 - * 금융전문인력 구인수준은 60개국 중 우리나라가 46위, 홍콩이 7위, 싱가포르가 11위였으며, 외국인 고급인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7위, 홍콩이 4위, 싱가포르가 2위로 나타났다
 - 대학 및 금융교육 등 인력공급기관 현황에 있어서도 비교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함
 -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우 61개국 중 50위를 차지하였고, 금융교육은 46위를 차지하여 인력공급기관에 대한 경쟁력도 저조한 수준이었음

나) 수익구조 측면

(1) 높은 위탁매매비중

- 우선위탁매매비중이 너무 높고 투자은행업비중이 낮은 문제 시현
 - 전체 증권사의 부문별 순 영업수익 현황을 보면, 위탁매매가 평균적으로 60% 전후의 수익비중을 차지하고 자기매매가 20%로써 두 번째로 높은 수익비중을 보이고 있음
 - 투자은행 부문은 5~7%로 가장 낮은 수익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펀드판매 및 자산관리가 10~15%의 수익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식시장 변화에 민감한 위탁매매 업무는 주식거래대금이 감소하는 시기에 증권사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크게 줄 소지가 높음
 - 한편 위탁매매 고객의 경우 CMA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 CMA 고객 선점을 위한 증권사의 위탁매매 고객유치에 출혈경쟁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2) 낮은 투자은행업 비중

- 반면 투자은행업, 즉, 인수·주선(주식, 채권, 외화증권)과 M&A 재무자문 수수료 수익규모는 위탁매매 수익에 대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투자은행 부문은 현재 시장규모의 협소함과 고정투자의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지 못함
 - 아울러 국내 투자은행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과거 충분한 자본과 인력, 시스템 및 평판구축 등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 특히 국내 자기매매의 형태는 제한된 유형의 증권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IB부문의 서비스에 파생된 PI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의 자기매매를 통해 상당히 높은 이윤을 구하고 있는 선진투자은행과 차이

(3) 자산관리서비스 기능의 취약성

- 국내 자산관리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수료 수익은 거의 전무하고 발전도 상당히 더딘 상황임
 - 이는 부동산과 은행예금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반인과 기업, 기금 등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큰 원인이겠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 자체에 대한 투자나 전략이 부재한 것도 문제임
- 국내 증권사는 펀드와 신종증권 판매 수수료에서 일정 규모의 수익을 내고는 있으나 파생상품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고객관리 및 계약,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한 것이 현실

- 최근 자산관리를 중요한 수익부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증권사의 입장에서선 랩어카운트, CMA 상품 및 파생상품(ELS/ELW)과 회사채 판매 등 자산관리 부문에서의 과열경쟁도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최근 회사채 상품을 리테일 고객에게 영업함에 있어 자칫 고위험 투자상품을 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할 인센티브와 고위험 회사채의 리테일 고객 전가라는 위험이 내포

2) SWOT 분석

- 현재의 금융투자업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평가하는 SWOT 분석은 향후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략수립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임

<표> 금융투자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온라인 주식거래 관련 IT인프라 경쟁력 - IMF 이후 산업 구조조정 관련 IB 업무의 경험과 know-how 축적 - 펀드산업의 규모증가로 인한 운용전문인력의 성장	- 대형 IB 딜의 track records 부족 - 금융전문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 해외 기업 및 투자자 네트워크 부재 -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 - 경쟁력 있는 초대형 증권회사의 부재 - IB 관련 리스크관리 경험 부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s)
- 국내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 - 자본시장법 시행 -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글로벌 투자은행의 위축 - 아시아 금융시장의 성장	- 해외 금융투자업 규제 논의 - 미국 및 유럽 외의 국가들에서 글로벌/지역 대형투자은행의 출현과 경쟁 심화 - 금융부문의 잠재적 위험이 증폭

- 금융투자업의 SO전략으로는 온라인 관련 IT 인프라, 산업 구조조정 관련 IB업무 및 자산운용 부문에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의 진출이 바람직함
- 금융투자업의 ST전략으로는 금융 IT인프라를 비롯하여 수수료중심의 IB 업무, 자산운용부문이 시스템위험 노출에 있어서 작아 선제적인 추진이 적절하며, 이러한 부문에서 해외 투자은행과 경쟁하는 것이 적절함
- 금융투자업의 WO전략으로는 성공적인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대형 IB track records와 IB 경쟁력 보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국내 증권회사의 약점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투자업의 WT전략으로는 미국 및 유럽 외의 국가들에서 초대형 투자은행이 출현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국내에서도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3) 발전방향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발전양상이 시장규모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국가 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발전방향의 검토기준

-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은 시간적·지역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현재의 금융시장 변화의 인식과 금융산업 시장구조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함

- 첫 번째로 금융투자업의 발전은 개별 증권회사의 경쟁력 강화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
 - 증권회사 고유의 조직문화 마련, 전문인력의 구축, 투자자 네트워크와 평판자본의 형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증권회사의 경쟁력이 나타날 수 있음

- 두 번째로 금융투자업의 발전은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융투자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거리·인종·문화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모색하되 점차 시장영역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임
 - 현재 국내 증권회사들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해왔다는 점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평판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 세 번째로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은 국가 간 금융시장의 통합, 미국·유럽 외 국가들에서의 글로벌/지역(regional) 투자은행의 등장, 금융시장 규모의 꾸준한 성장 등 금융시장의 변화에서 검토가 필요
 - 금융시장의 통합과 글로벌/지역 투자은행의 등장, 금융시장 규모의 확대는 금융투자업의 경쟁을 보다 심화시키고 지역(local) 중소형 증권회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영역을 축소시킬 것임
 - 금융환경의 변화에서 전문화와 특화, 특정산업에서의 평판구축이 중소형 증권회사들에게 오히려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음

-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의 발전은 안정적인 금융산업의 시장구조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방향이 필요함
 - 모든 증권회사들이 중복 과잉투자를 구축하거나 지나친 투자회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화된 증권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대형화의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장논리가 이루어지

는 것이 필요함

- 자본규모가 큰 소수의 투자은행의 시장지배력 형성과 다수의 주변(fringe) 투자은행들의 등장은 장기적으로 시장균형임이 이론적인 관점에서 확인된 바 있음

*** Anand & Galetovic (2001)**은 투자은행의 **2-tier** 시장구조에 대한 연구문헌임

- 다른 한편, 시장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 대형기업들에 의한 과점형태의 시장구조가 이루어진다는 Sutton(1991)의 시장구조 이론에서도 정책적 시사점이 존재

*** Sutton(1991)**의 이론에 따르면 잠재적인 시장규모 증가에 대비한 소수 대형 증권회사 중심의 대규모 투자는 오히려 최적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임

- 금융투자업의 발전이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목표에서 중요한 이유는 선진 금융 국가에 뒤처져 있는 금융인프라와 제도의 발전, 금융강국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이기 때문임

② 단계별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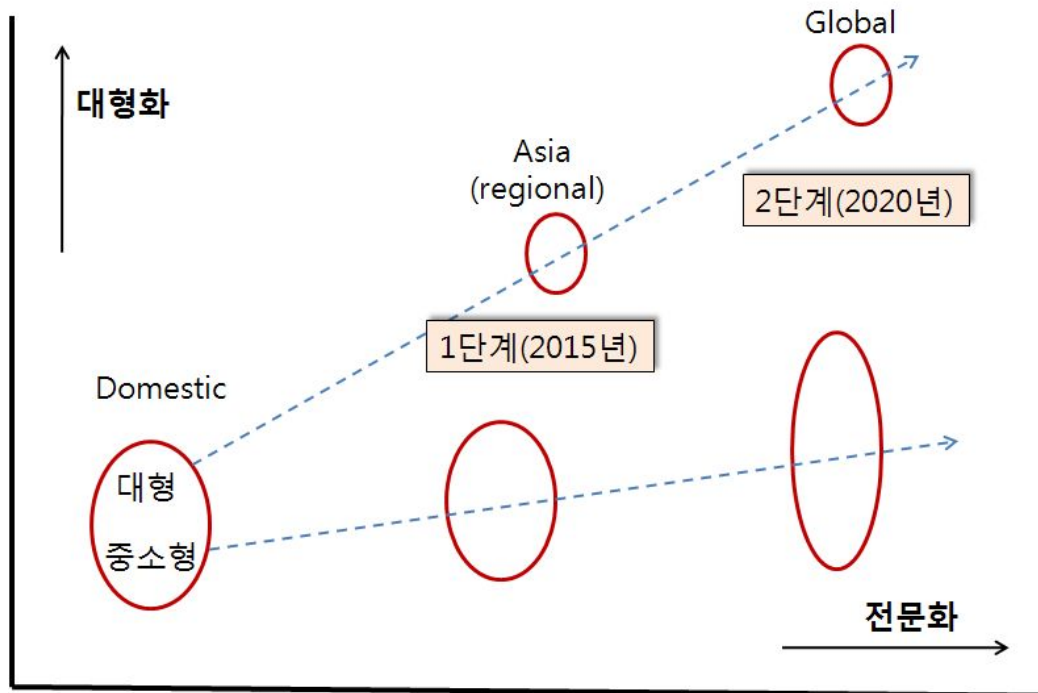
- 금융투자회사의 비전은 '자본력 확충 및 전문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과 고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임.
 - 금융투자회사가 모험자본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 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향후 적극적인 위험인수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규모 확충이 불가피
 - 다양한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가 다수 출현할 필요
- '자본규모확충, 전문화'라는 비전은,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체질 변화, 전략방향 변화, 신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을 통한 시장구조 변혁 움직임이 함께 결합되면서 점진적으로 달성될 전망

- 기존 대형사들의 자본증강 및 내부프로세스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노력
 - 기존 중소형사들의 특정 부문 중심의 전문화 노력
 - 신규 경쟁자의 진입에 의한 변혁 유인 발생
- 대형사는 위험인수 능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함
- 대형사들은 우선 국내 기업 및 투자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국내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필요
 - 이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발판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함
- 중소형사는 특정시장에 초점을 맞춰 전문화함으로써 대형사들과 뚜렷한 차별화를 보여야 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중소형사들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필요
 - 신규 진입자들 역시 자신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부문에 초점을 두어야 함.
- 2015년을 기점으로 국내 대형증권회사 중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투자은행이 나타나고 중소형 증권회사의 특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금융산업의 1단계 발전방향으로 설정
- 1단계의 목표는 현재의 금융투자업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초석을 다지고 최적의 투자와 발전을 꾀하는 데 있음
-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 대형증권회사 중 글로벌 투자은행이 탄생됨과 동시에 특화된 증권회사의 세계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것을 금융산업의 2단계 발전방향으로 설정

- 2단계의 목표는 1단계에서 구축한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금융의 수출강국이 되는 것임

<그림>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과 시장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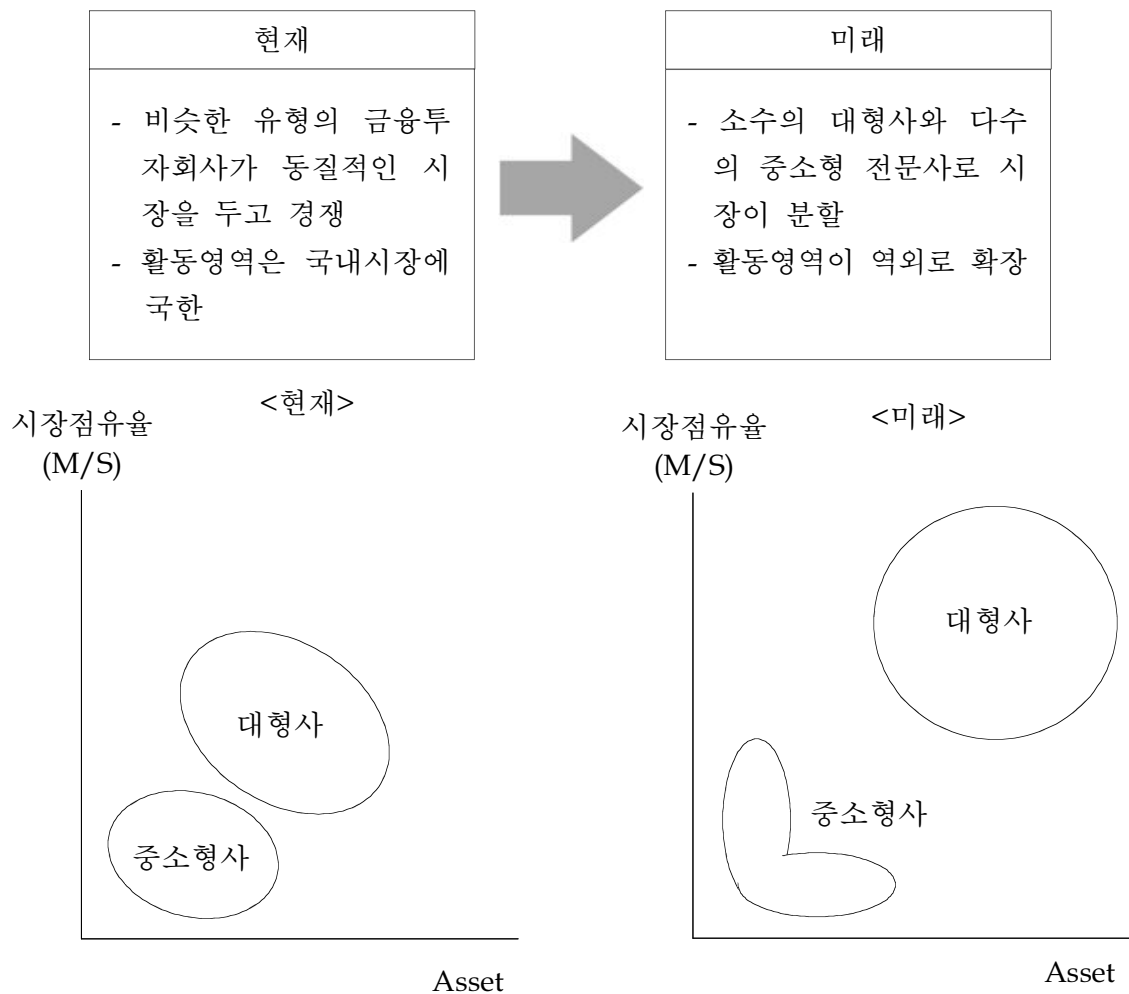


③ 발전방향의 기대효과

- 금융투자업은 현재 자본규모 확충과 중소형사 구분 없이 동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나, 향후 대형사, 중소형사 간에 자본력, 목표시장 등이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보임
 - 그 결과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중소형 전문사들이 양립하는 구조를 형성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측면에서의 격차가 한층 확대될 전망
 - 중소형사들은 업무의 강점 측면에서 다양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지금과 달리 향후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역내외를 포함하는 통합된 시장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전망

<그림> 금융투자업의 구조 변화



- 금융투자업의 발전이 대형화와 전문화·특화라는 측면으로 발전하였을 때, 기업금융의 활성화와 금융투자자의 보호가 증대되며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내재적인 금융시스템 위험노출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증권회사의 경쟁력 강화는 한 단계 높은 기업금융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과 성장성이 높은 중견기업들의 직접자금조달수요를 보다 혁신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됨
 - 금융산업의 발전은 IT 산업은 물론 녹색산업과 같이 신동력 산업부문의 투자를 진척시킴과 동시에 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자본규모확충과 전문화를 통한 금융투자업의 발전은 금융자산의 축적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뿐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평판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투자자 보호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짐
 - 충분한 자본규모와 전문화가 이루어진 금융투자회사는 높은 평판을 가지게 되어 평판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 고객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은 금융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과 함께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공유를 함께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산업이 전문인력 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서 고급인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 발전이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파급력 있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글로벌화된 투자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의 중요한 시장조성자로서 대규모 risk-taking 업무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다양화된 외화 자산 포트폴리오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스템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임

4) 정책과제

① 대형화 및 자본력 확충 유도

(단기과제)

- 향후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전체 IB 시장규모와 투자은행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표> 건별규모로 구분한 IPO 건수 추이

건별규모 구 분	50억 미만	50억 ~100억	100억 ~300억	300억 ~1,000억	1,000억 이상
2001 ~ 2004	138(31%)	163(37%)	109(25%)	22(5%)	7(2%)
2005 ~ 2008	41(16%)	76(29%)	107(41%)	28(11%)	8(3%)

- 국내 IB 시장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업무의 deal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증권사는 충분한 자본력 없이 인수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할 것임
-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인 IPO,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인수, M&A 중개 및 자문과 PI(Principal Investment) 등은 모두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인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
 - 증권사의 자본력 확충은 선진 IB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네트워크, 리서치, 전문인력 등) 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함

- *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점포망 구축, 리서치 부문을 중심으로 한 IB 업무의 시너지 창출, 부서별 전문화를 위한 시스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관리 시스템 마련 등 고정비용 투자에 있어 자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시너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증권사 간 합병 및 자본확충을 적극 유도할 필요

② 전문화와 특화

(단기과제)

□ 국내 증권산업이 주어진 자본력에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문화와 특화임

- 모든 증권사의 자본력 확충과 대형화는 과잉투자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투자은행이 평판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거나 특화 전략을 취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야 함

- * 특화전략은 특정한 부문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작은 규모에도 평판 구축이 가능하며 작은 자본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금융의 글로벌화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에서는 전문성과 평판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특화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필요조건임

□ 중소형 증권사뿐 아니라, 현재의 자본력에서는 몇몇 대형 증권사까지도 특정 분야에서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당수의 글로벌 투자은행이 초창기에 특화와 전문화에 성공하면서 대형 투자은행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 **Goldman Sachs**는 M&A 자문과 PI부문에서, **Merrill Lynch**는 CMA의 개발과 자산관리부문에서, **Morgan Stanley**는 M&A와 LBO 분야에서 전략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의 발판을 마련함

- 증권사의 전문화와 특화는 증권사 고유의 전략적인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특허권 보호로부터 촉진될 수 있음
 - CMA나 ELS 상품의 도입은 이미 국내시장을 개척하여 성공한 경우이고, SPAC 상품의 경우 최근 국내시장에 도입해가는 과정임
 - * 도입과정에서 시장선도에 있었던 증권사는 다양한 특허획득 뿐 아니라 시장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 신 금융상품의 성공사례와 특허권 보호는 증권사들의 신 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개척과 전문화를 촉진할 것임

- 증권사의 업무인가와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및 특화된 사업계획 등 질적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자보호와 전문성 기준에 맞추어 인가함으로써 신설증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업 Boutique 등장은 증권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증권사들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
 - * 증권사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은 증권사들의 R&D 투자나 금융투자상품 개발 등 경쟁력 보강을 촉진하는 메카니즘이 될 것임
 - 다만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경영공시, 경영 건전성 기준 등 건전성 규제와 신의성실의무, 금융상품설명 의무, 손실보전 금지 등 영업행위규제를 엄격하게 시행

③ 글로벌화

(단기과제)

- 증권사가 국내시장에서 지역시장(e.g., 아시아)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전통적인 IB업무의 수익증대 뿐 아니라 새로운 업무의 창출

과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 IB업무가 본질적으로는 투자자와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업고객들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여 자금과 정보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투자비용 지출은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의 원천이 될 수 있음

□ 국내시장에만 국한하는 증권사는 소규모 시장에 맞추어 투자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의 투자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내기 어려움

- 국내 증권사의 인수주선 업무는 5~10%의 수익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증권사가 국내시장에 국한하면서 IB업무 중심의 증권산업을 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증권사가 국내에서 시장을 선도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시장에만 국한한다면 그 투자규모는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음

- 해외 시장개척은 국내 증권사의 특화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중소형 증권사가 전문화와 특화 전략을 추구하기에 국내시장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이들 증권사들도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함

□ 스위스의 UBS가 자국 내 시장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공하였고, 독일의 Deutsche Bank가 독일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IB 전향 후 10년 만에 최고의 CIB로 탄생한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Deutsche Bank는 2005년 ECM과 DCM 전체 실적이 각각 세계3위, M&A 실적이 세계6위에 위치함

- 국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을 전 세계로 정하고 R&D 투자에 박차를 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투자은행은 역사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과정에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업전략은 투자은행의 치열한 경쟁문화에서 후퇴를 의미함

□ 증권회사의 단계적인 진출 방안

-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이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증권회사의 진출을 추진
- 아시아 채권시장의 구축 등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아시아 지역에 특화한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역내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

□ 단계별 진출전략 추진 및 증권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

- 지역별로는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아시아 역내의 진출을 추진
- 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투자은행업무를 주도하는 regional player로 성장

④ 금융전문인력양성

(중장기과제)

□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는 규제 업무의 기능에 맞추어 자격제도의 통합 및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 상호 유사업무임에도 분리된 자격제도인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를 통합하고, 투자상담사와 투자자문상담사의 경우 '판매'라는 공통된 수행 기능에 맞추어 자격시험을 통합
 - * 또한 펀드판매의 경우도 파생상품/부동산/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를 통합함으로써 유사기능의 규제업무를 가능한 통합
- 유사업무의 자격제도 통합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자가 유사한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

- 이를 위해서는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판매부문에서의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보수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리, 증권사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자격증 시험은 일회성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격증 시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협회의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정책당국자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 학계와 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교육시스템의 개발, 협회 산하 연수기관의 단계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충과 금융기관의 협조 및 지원, 보수교육 시스템의 다양화, 금융기관 간 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 현행 자격시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증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투자상품을 맞추어 주고 고객을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평판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판매인력과 판매관리에 충분한 투자는 매우 중요한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음
 - * 최근의 사례로 2008년 우리은행의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의 투자자 손실이 우리은행 평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큼
- 이를 위해서 증권사는 적극적인 인재채용과 연수, 실무 커리어 관리 등 체계적인 인재관리시스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
 - 증권사는 신입 채용부터 우수인력으로 유치하되, 이러한 인력을 교육과 연수, 실전경험 등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요구됨
 - * 금융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력직 스카우트 과열경쟁은 사내 조직문화의 확립과 전문인력 당사자들의 직업 안정성 등에 있어서 부정적이며, 결국 효율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이 될 수 없음
 - 한편 해외 유수의 금융전문인력의 경우, 그들을 적절히 스카우트하고 채용하여 선진 투자은행의 시스템과 전략, 문화 등을 국내

증권사에 융화시킴으로써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마) 건전성 감독 강화

(단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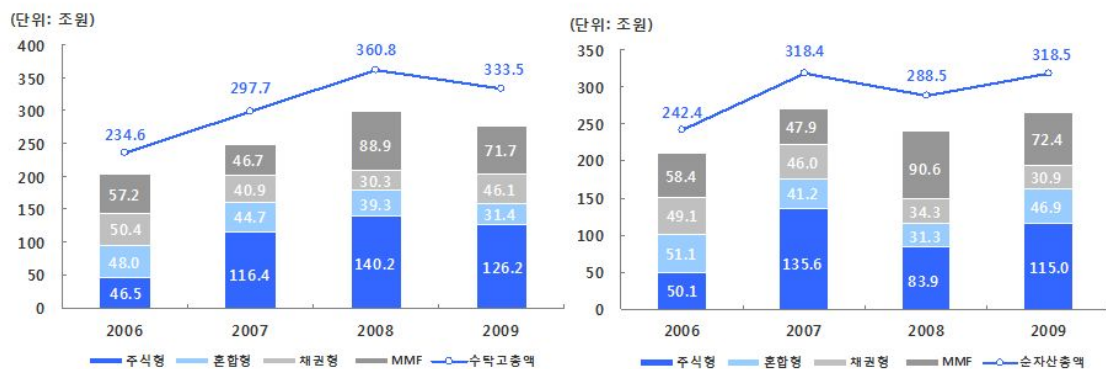
- 향후 투자은행들의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불가피
 - 최근의 위기를 통해 단순 레버리지 자체가 시스템리스크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
 - *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거의 확실
 - 레버리지 규제의 부과대상은 투자은행은 물론,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내 거의 모든 중개기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향후 금융투자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
 - *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자은행들은 고유계정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 향후 투자은행의 모습은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투자은행 모델에 더 가까워질 전망
- 그러나 세계적으로 투자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국내에서 투자은행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증권회사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
 - 국내 증권회사의 평균 레버리지(FY2008 기준)는 40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부 대형사들의 레버리지도 500%미만 수준에 불과
 - 또한 국내 투자은행 산업의 핵심문제가 리스크 추구가 아닌 리스크 회피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대형 투자은행들의 문제를 국내 투자은행 산업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5) 펀드산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년간 전세계로 확산된 금융위기는 국내외 펀드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
 - 미국의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2009년 6월말 기준 전세계 뮤추얼펀드 순자산총액은 20.3조달러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던 지난 2007년말의 26.2조달러에 비해 약 22.5% 감소
 - 국내 펀드시장도 금융위기의 여파로 순자산총액 증가가 정체
 - * 2009년 들어 펀드시장 전체의 순자산총액이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운용 보수가 높은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여전히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 주식형펀드에서 금년 중반 이후 자금이 빠져 나가고 있으나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또는 고점에 펀드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손절매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

<그림> 펀드 유형별 수탁고(좌) 및 순자산(우)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 금융위기 이후 펀드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07년 12월말에 전체 펀드 신탁재산의 44%가 주식에 투자되었으나, 그 이후 주식 투자 비중이 줄어들어 2009년 9월에는 35.9%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반면 채권 및 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동기간 19.4% 및 6.8%에서 26.9% 및 9.1%로 증가했음

□ 2008년 중 모든 분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수익률은 2009년 들어 회복세를 보였음

□ 수탁고 증가율의 정체, 보수율이 낮은 MMF 수탁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급증하던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이 2008년에는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2008회계연도('08.4.1~'09.3.31) 당기순이익은 4,025억원으로 전년동기 5,038억원 대비 20.1% 감소한 것으로 추정

나) 국제적인 규제 강화 논의 방향

□ 금번 금융위기에 MMF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금융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금융개혁안에 MMF 개혁안도 담고 있음

○ 미국 재무부는 MMF 규제개혁안을 통해 가장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안⁴⁾

* 미국의 **MMF** 규제개혁안은 펀드에 편입하는 자산의 건전성을 높여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되, 펀드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규모 환매 및 여타 금융시장으로의 파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

* 다만, 대규모 환매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는 장부가평가 및 안정적인 순자산가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예정

4) 미국의 MMF 규제개혁안은 다음과 같음

- 신용집중 방지 강화: 동일 투자대상에 집중투자 규제 수준 강화

- 신용위험 분석 강화

- 투자가능 자산 제한: 1등급 증권(first tier securities)으로 제한

- 펀드가 보유해야 하는 유동성 버퍼 강화: 즉시(1일 이내 또는 1주일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증권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가중평균만기 축소: 90일에서 75일로 축소

- 위기상황 발생 시 전체 주주(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펀드 이사회에 펀드 환매를 연기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표> 주요 국제기관 펀드 관련 규제개혁안

MMF 관련			
기관	자산건전성	금융시스템 위험 파급 차단	기타
미국 재무부	·신용집중 방지 강화 ·신용위험 분석 강화 ·투자가능 자산 등급 제한	·유동성 버퍼 강화 ·보유자산 가중 평균 만기 축소 ·펀드 이사회에 펀드 환매 연기 권한 부여	·시가평가 의무화로 변동 NAV 인정 논의 중
EU	·펀드가 투자가능한 자산을 더욱 강하 게 규제/법제화		·EU내 MMF 정의 일원화
기타 펀드 관련 일반			
· 독립적인 제3의 수탁기관에 의한 자산보관 (EU) · 기관투자자의 구조화상품(Structured Finance Instruments) 투자에 대한 공시 및 주의의무(due diligence) 강화 (IOSCO)			

자료 : EU, de Larosiere Report, 2009.2

G30, Financial Reform: A Framework for Financial Stability, 2009.1

IOSCO, Report on the Subprime Crisis, 2008.5

US Department of Treasury, 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 EU는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만을 제안
 - * 다만, 이러한 규제개혁안을 EU 역내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MMF 규제개혁 이외의 펀드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제개혁안으로는 독립적인 제3의 수탁기관에 의한 펀드 자산보관(EU), 펀드의 구조화상품 투자에 대한 공시 및 투자자 주의의무(Investor Due Diligence) 강화(IOSCO) 등이 논의되고 있음

다) 글로벌 펀드시장의 흐름 변화

□ 펀드의 안정적 수익률 달성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

- 전통적 펀드의 경우 자산가격 회복 지연, 환매에 대비한 현금보유 증가 등으로 고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움
- 헤지펀드 및 PEF 등 사모펀드들은 여기에 더해 운용방법 규제, 레버리지 규제 등으로 고수익 실현이 더욱 어려울 전망

□ 자산운용회사 수익구조 악화

- 당분간 수탁고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높은 운용보수를 받는 펀드(high fee funds)에서 낮은 운용보수를 받는 펀드(low fee funds)로 자금 이동
 - * 전통적 주식형펀드 → 채권형펀드/MMF, 인덱스펀드/ETF 등
- 자산운용회사 간, 타 금융권역 간 경쟁으로 Fee 하락 압력 증대

□ 자산운용회사 비용 축소 압박 집중

- 규제강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비용 증대로 인해 각종 비용 감축 노력이 미국 및 유럽계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 * 비용감축 노력: 상품 단순화, 펀드통합, 해외 브랜치 철수, 인력감축

□ 국제적으로 펀드산업의 Globalization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회복 후 재개될 가능성도 큼

-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수요 감소, 비용감축을 위한 자산운용회사의 해외 비즈니스 축소 등의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제3시장을 중심으로 Globalization 추세가 재현될 가능성도 큼
 - * 선진국시장 포화, 기존시장의 Fee 하락 추세로 상대적으로 높은 Fee를 받을 수 있는 시장 개발의 필요성, 투자자들의 분산투자 수요 등

□ 펀드상품 구조의 변화

- 인덱스펀드, ETF 등 저비용의 시장추종형 펀드들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전통적펀드와 사모펀드 간의 간극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 전통적펀드: 주식 및 채권 이외 편입 자산의 다양화 추구
 - * 사모펀드: 각종 규제로 운신의 폭 제한

□ 자산운용회사 간 통합 움직임

- 규모의 경제 및 시장장악력 확대 노력, 시장 회복 이후 대비 등의 이유로 운용회사 간 합종연횡 및 소규모 사모펀드 운용회사 흡수 움직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라) 정책과제

□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가 전방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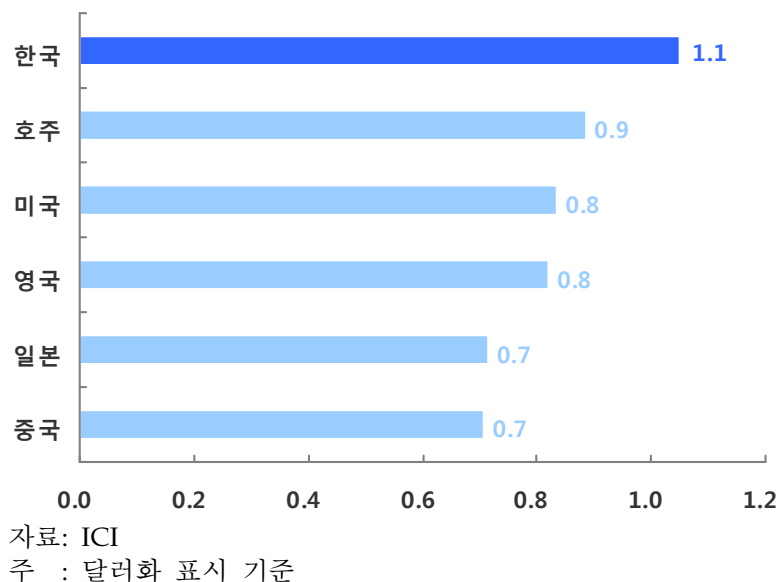
- 특히 공모 펀드시장의 경우 MMF 등 금융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의 규제강화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강화 움직임이 없음
- 따라서 금융시스템 안정 장치 이외 시장의 경쟁구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의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

□ 한국의 펀드시장도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우려했던 펀드시장의 대규모 환매는 없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

- 2008년에는 순자산총액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2009년 들어 주가 상승으로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이 회복되고, 펀드시장 전체의 순자산총액도 2007년말 수준에 근접함
 - * 또한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던 2007~8년에도 펀드자금이 순유출되었던 적이 별로 없으며, 최근의 펀드자금 순유출도 손절매 및 저가 유입자금의 이익실현 등의 의미로 해석해야지 시스템 위험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 특히 한국 펀드시장의 순자산총액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펀드시장의 대규모 환매가 없었던 것은 한국 펀드시장의 폐쇄성에 기인
- * 최근 몇 년간 해외투자 펀드가 증가했으나 아직 국내투자 펀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투자 펀드도 중국 등 몇몇 개도국에 집중⁵⁾
- * 그 결과 국내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펀드들이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이나 부실화된 국제적 IB들이 발행한 증권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그림> 주요국 2007년말 대비 2009년 2/4분기말 펀드 순자산총액 비율



- 이처럼 국내에서는 펀드시장에 의한 금융시스템 위험 가속화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규율강도를 감안할 경우 향후 이러한 위험이 다가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MMF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평가액의 괴리가 크지 않으며, 그 결과 위기 발생 시 환매 유인이 크지 않음
- * 기준가격 산정 시 MMF를 제외한 대부분의 펀드가 시가평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MMF는 장부가평가를 기본으로 장부가평가액이 시가평가액과 비교하여 0.5%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

5) 2009년 7월말 현재 전체 펀드 중 해외투자 펀드(해외 자산에 30% 이상 투자한 펀드 기준) 비중은 설정잔액 기준 21.0%, 순자산총액 기준 17.2%이다.

○ 둘째, 공모펀드의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인해 펀드 자산 전체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각종 공모펀드들은 집중투자 규제, 파생상품 및 유동화증권 편입 규제, 차입규제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엄격한 포트폴리오 공시 등으로 공격적인 운용은 어려움

* 특히 기준가격과 시가평가액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위기 시 환매 유인이 존재할 수 있는 **MMF**의 경우에는 자산건전성에 관해 철저하게 규제

* 자본시장법에서는 **MMF**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신용위험에 노출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가능한 신용등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또한 투자자산별 잔존만기 및 전체 펀드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90일**로 제한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용대상 자산의 분산을 위한 규정도 상세하게 제시

○ 셋째, 자본시장법에는 유사 시 펀드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마련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및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 이사회(회사형) 또는 집합투자업자(신탁형)가 환매연기를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펀드시장 및 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금융시스템 위험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시장의 기능을 살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 **MMF** 시장의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하되, 국제 펀드시장의 환경변화를 활용하여 국내 펀드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① **MMF**의 안정성을 위한 규제강화

(증장기과제)

□ **MMF**가 금융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차단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첫째~~,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것으로 집중투자 규제의 보완, 펀드유동성 관리 강화, 유사시 펀드환매를 중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강구

② 펀드시장의 경쟁구조 정착

(중장기과제)

- ☐ 종합 자산운용회사 신규진입 허용 등 진입규제 활성화
- ☐ 판매보수-운용보수 간 보수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 강구
 - 판매채널 확대, 판매사간 경쟁 확대, 경쟁구조 정착을 통한 일부 판매회사 계열 대형 자산운용회사의 영향력 축소 등
- ☐ 소형 자산운용회사들 간 합병 등
- ☐ 수익률, 보수·수수료 등 펀드정보 공시 강화

(3) 펀드시장 국제화

(중장기과제)

- ☐ 국제적 규모의 자산운용회사를 육성하여 금번 금융위기 이후 국내 펀드시장의 위상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자산의 펀드시장 유도 등을 통해 국내 펀드시장 규모가 커질 경우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의 유입 등 펀드시장의 국제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

- * 호주 사례: 퇴직연금시장 확대를 통해 펀드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그 결과 외국계 자산운용회사가 많이 유입
- 국내 펀드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이전에 외국계 유력 자산운용회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 강구
 - *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의 사례
 - ① 외국계 자산운용회사 및 이들이 등록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 ② 펀드 등록 절차 간소화
 - ③ 외국계 자산운용회사가 자체적인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은 국내 투자자 위주의 영업 방식에서 탈피해 중국 등 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해야 함
 - * 특히 중국 및 인도 등 잠재력이 거대한 시장들은 소수의 부호들이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 투자 성향이 국내 투자자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
 - * 또한 규제 방식 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계 전체 차원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시장 침투를 위한 협조가 필요

마) 헤지펀드 규제

(1) 현황 및 문제점

- 헤지펀드의 투자손실 및 부정거래 등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시장의 신뢰 저하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야기
 - 헤지펀드의 경우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렛대 효과’가 금융위기 시에 투자 손실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헤지펀드 투자전략의 쏠림현상은 단기간에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야기
 - *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텐스가 직접 운영하는 헤지펀드 2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대규모 투자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2008년 6월 모회사인 베어스텐스에 30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결과 초래

- 금융위기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이 감독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헤지펀드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시장·상품으로 규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헤지펀드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강조
 -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상업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와 일반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 아시아 지역 헤지펀드 산업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장 창출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은 헤지펀드 운용에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아시아 각 개별 국가의 특성 중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의 경우 잠재적 시장 규모가 24억달러 규모 수준이므로 향후 헤지펀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활용이 필요

(2) 정책과제

(단기과제)

- 헤지펀드 관련법의 시행령을 이미 마련(09.12월)한 만큼 실질적 사업 영위가 활성화되는 환경 조성
 - 장기적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
 - 글로벌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헤지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 헤지펀드가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 필요

○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안으로 헤지펀드의 차입 규모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 허용 초기에는 차입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차입 비율을 완화하고 감독당국은 정보 집적을 통하여 헤지펀드 차입 규모를 모니터링하며, 헤지펀드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 필요

○ 프라임 브로커 등 일반 금융 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

○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평가의 정확성, 헤지펀드 운용자와 투자자의 이해 상충 문제 방지 차원에서 권고 사항을 규정할 필요

***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펀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정보를 제공**

○ 제 3자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 등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포트폴리오 가치 평가는 공정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

□ 헤지펀드 업무 허용을 대비하여 프라임 브로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금융투자회사의 헤지펀드에 대한 원활한 자금 및 증권 지원 필요: incubation을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헤지펀드에 대한 자금 대여 기능을 허용하고, 현행 증권 대차제도를 활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헤지펀드에 대한 증권대여기능을 활성화할 필요

○ 프라임 브로커간의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 프라임 브로커의 자격 요건 및 의무 사항 설정

(중장기과제)

□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일원화하되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 규제는 강화

다. 보험산업

1) 현황 및 문제점

가) 성장성 약화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성 저하가 크게 나타났는데,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더라도 수요기반이 약화되어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움.
- 성장성 저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은 다소 하향된 수준에서 일정한 성장패턴을 유지하고 있음.
 - 성장성 약화는 거시경제적 성장기반 약화와 함께 획일적인 사업모델, 전문성 미흡, 해외진출 부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수입보험료 규모

(단위: 전년동기대비, 조원, %)

			FY2007	FY2008	FY2008. 1/4	FY2009. 1/4
생명보험	전체 (A+B)	보험료	75.1	73.6	18.3	17.5
		증감	8.7	-1.5	5.5	-0.8
		성장률	13.0	-2.0	5.0	-4.2
	초회 (A)	보험료	10.7	6.7	2.0	1.3
		증감	3.8	-4.0	0.0	-0.7
		성장률	21.8	-37.3	-15.1	-35.4
	계속 (B)	보험료	64.4	66.9	16.3	16.2
		증감	4.9	2.5	5.5	-0.1
		성장률	11.7	3.8	8.1	-0.4
손해보험 전체		보험료	34.0	37.5	9.0	10.0
		증감	4.4	3.5	1.1	1.0
		성장률	14.9	10.3	12.9	11.7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나) 업무영역 제한과 획일적 수익구조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업에서 얻는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에 비해 영업외수익의 비중이 낮아 수익원이 다각화되어 있지 못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영업외수익의 비중은 5%(2008년 기준 생보 4.3%, 손보 0.9%)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내용면에서도 유형자산처분이익, 외환차익 등에 치중되어 있음.

보험회사 총수익 구조

(단위: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명보험	보험영업	477,213	492,808	500,499	520,529	542,343	541,472
	투자영업	118,707	129,822	125,203	130,924	153,452	193,584
	영업외	3,271	5,547	10,080	16,807	23,099	33,276
	소계	599,191	628,178	635,782	668,260	718,894	768,332
손해보험	보험영업	192,749	206,230	229,456	266,306	312,188	356,732
	투자영업	22,975	25,229	26,261	28,560	36,296	41,692
	영업외	1,030	1,229	804	3,927	1,361	3,792
	소계	216,754	232,688	256,521	298,792	349,846	402,215

주: 1) 연간실적은 누계치임.

2)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3) 손해보험 보험영업비용은 발생손해액합계, 순사업비, 계약자배당준비금증가액, 비상 위험준비금증가액을 합한 금액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 보험회사의 수익원이 다각화되어 있지 못한 것은 보험회사의 노력 부족도 있지만, 금융산업이 은행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보험회사의 사업다각화를 규제해왔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해 금융산업 내 보험산업의 비중은 23.1%에 그쳐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음.

은행자산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

(단위: %)

국가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비율	63.3	59.0	42.4	39.9	23.1

○ 2007년부터 금융산업 불균형 발전은 산업발전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아직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

- － 소액자금이체기능 허용, 겸영업무 범위 관련 규제 차이 등 제도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 있음.
- －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등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험산업의 역할이 강조됨을 고려할 때 불균형을 해소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크다 할 수 있음.

□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겸업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경우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모형 발굴이 미흡하고 펀드 판매나 신탁업 부문에서 성과가 미진한 실정임.

○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업무영역에 대한 강한 규제와 자본력의 열위로 인하여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종합금융화가 미흡함.

- －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관리, 자금이체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사업모형 발굴이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금융업권 공통 영역으로 영위하고 있는 펀드판매, 퇴직연금 부문에서 은행에 크게 뒤지고 있음.

금융권역별 간접투자기구 판매 잔액

(단위: 십억원)

금융회사 유형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판매액	141,334.8	13,657.0	173,733.1	563.8	28,347.1

주: 2009년 6월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은행	생보	손보	증권	계
적립금	43,368	25,601	5,083	10,718	84,770
전월 대비 증가율	2.9	1.6	2.5	4.2	2.6
비중	51.0	30.5	6.0	12.5	100.0

주: 2009년 7월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다) 글로벌화 부진

- 보험산업이 지나치게 국내영업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화가 부진한 실정임.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0.28%, 손해보험 0.5%에 불과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사업지역, 규모 면에서 글로벌 보험회사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생명보험의 경우 5대 글로벌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최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수익 규모는 1/16.5 ~ 1/2에 그치고 있음.
 -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글로벌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최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수익 규모는 1/13 ~ 1/5에 달하고 있음.
- 2009.6월말 현재 5개 생명보험회사가 미국 등 8개국에 진출하여 25개 점포를 운영 중이고, 2009.3월말 현재 7개 손해보험회사가 미국 등 8개국에 진출하여 41개 점포를 운영 중임.
 - 25개 점포(현지법인 8, 사무소 17)중 생명보험 영업활동을 하는 점포는 현지법인 3개이며, 해외진출도 대부분 사무소 수준에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야 보험 영업을 위한 해외진출을 함.
 - 손해보험회사는 41개 점포(현지법인 9, 지점 7, 사무소 25)중 14개 점포(현지법인 7개, 지점 7개)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1개 법인이 보험중개업, 나머지 1개 법인이 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음.

라) 보험모집조직 선진화 필요

- 보험모집조직은 과거에는 전속조직인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규제완화, 통신기술의 발달, 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추구 성향 등에 힘입어 모집조직이 다원화되고 있음.
 - 전화, 인터넷, 우편, TV매체 등을 이용한 보험모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대리점 허용 등으로 다양한 경제조직이 보험모집에 참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소규모의 대리점 통합, 대기업의 보험모집사업 진출, 금융기관대리점의 확대 등에 힘입어 모집조직의 대형화 및 독립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모집조직의 다원화와 확충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미흡, 과도한 선지급 수당, 모집조직의 직접적 배상책임 부재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고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모집사용인 등에 대해서 보수교육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판매자 윤리교육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보험회사간 과도한 경쟁 등으로 선지급 수당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현혹된 일부 모집종사자가 보험료 대납, 경유처리 등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
 - 금융기관대리점이나 대형 법인대리점의 경우 배상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배상책임이 없어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보험회사와 모집조직 간 '제판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있고 보험소비자 보호나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허위계약 체결 후 수수료를 챙기는 등 모집조직 사기 행위,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한 매집활동 및 경유계약 성행 등과 같은 모집질서 문란 행위가 유발되고 있음.

마) 경제·사회·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리스크 확대 우려

□ 보험산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저금리 구조의 지속, 수명연장 등으로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금융겸업화,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비재무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음.

- 영업 및 자산운용 부문에서 경기 민감도가 높아지고, 생존 관련 위험률 상승 및 기대여명 증가 등 외부환경 변동으로 보험회사의 재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기존의 정형화된 유가증권과 다른 새로운 리스크에 노출됨.

- － 또한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계약으로 인한 금리부담이 여전히 높아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할 채투자채권을 찾기 어려울 경우 금리리스크로 인한 위기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보험회사가 겸업화 환경에 노출되고,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재무 리스크 외에 비재무적 리스크도 증대됨.

- － 금융그룹 내 위험 전이, 시스템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의 리스크가 확대됨.

□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위험 노출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1998~2007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1조 9,7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경기 침체 시 각종 보증보험 분야에서 리스크 익스포저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조선업 및 부동산 경기에 매우 민감한 선수금 환급보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동산보장가액보상보험 등은 경기 급락에 따라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바) 소비자 신뢰 저하

□ 보험산업은 보험상품의 비결정성, 판매에서 보험금지급에 이르는 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권역에 비해 민원도 많아 소비자 신뢰가 낮음.

○ 보험관련 민원건수 비중은 2002년에는 32.8%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48.0%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

－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완전 판매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권역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험	11,179 (32.8)	13,732 (24.6)	16,886 (26.2)	21,583 (36.3)	27,530 (45.2)	31,991 (49.7)	31,541 (48.0)
증권·자산운용	2,775 (8.1)	2,704 (4.9)	2,451 (3.8)	2,048 (3.4)	3,035 (5.0)	3,568 (5.5)	4,186 (6.4)
은행·비은행	20,145 (59.1)	39,289 (70.5)	45,139 (70.0)	35,879 (60.3)	30,296 (49.8)	28,861 (44.8)	30,031 (45.7)
계	34,099	55,725	64,476	59,510	60,861	64,420	65,758

주: 괄호 안은 전체 건수 대비 구성비

자료: 금융감독원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을 일찍부터 도입했으나, 보험회사간 과당경쟁, 모집조직 등 정규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교육 미흡 등으로 신뢰를 제고하지 못함.

○ 특히 모집인의 경우 자격 취득시 윤리과목이 시험내용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자격취득 후에도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시장원리에 맞게 보험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여러 노력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전용보험 가입률이 0.2%로 생명보험의 개인 별 가입률(61.9%, 2007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장애인전용보험 판매 실적 추이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8	
	계약 건수	수입 보험료	계약 건수	수입 보험료	계약 건수	수입 보험료	계약 건수	수입 보험료	계약 건수	수입 보험료	계약 건수	수입 보험료
생보사	2,778	1,344	2,731	1,395	2,829	1,498	2,755	1,701	3,515	1,810	-	-
손보사	870	576	1,713	493	814	487	609	308	455	-	-	-
전체	3,648	1,920	4,444	1,888	3,643	1,985	3,364	2,009	3,970	-	4,546	2,507

자료: 국정감사자료(2007) 및 금감원 보도자료(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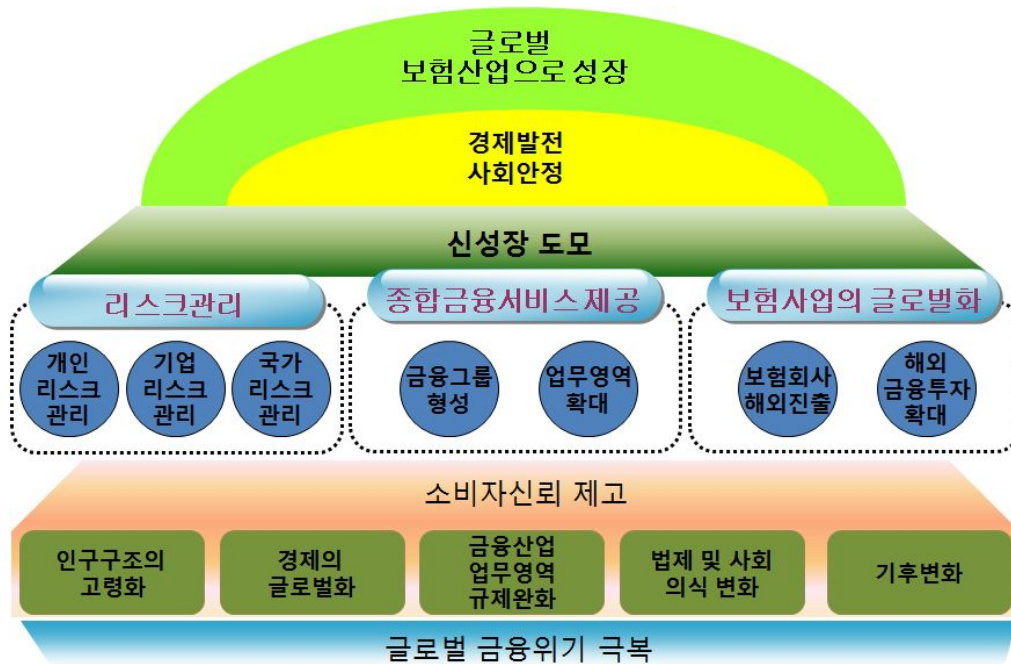
2) SWOT분석

강 점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마케팅의 경험을 축적 - 장기상품 운용 경험 및 장기자산 운용 능력도 확보 - 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타금융권에 비해 우월
약 점	- 신뢰도가 개선되지 못해 신규사업 진출에 여론이 비우호적 - 고비용의 보험판매채널 - 자본력 및 인력 등에서 은행 등 타금융권에 비해 열위 - 글로벌 보험회사에 비해 해외시장 개척 능력 열위
기 회	- 투자형 보험상품의 성장 가능성 - 사회적 리스크, 재난 및 자연적 리스크의 증가에 따른 보험 수요 증가 - 사회의식 및 법제 변화에 따른 보험 수요 증가 -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타금융서비스 영역 진출 가능 - 신흥보험시장 사업기회 확대
위 협	- 신규진입 증가, 새로운 경쟁관계 형성, 시장의 경쟁 강도 강화 - 다양한 리스크 노출 - 세제혜택 축소 가능성

3) 발전방향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은 “사회적 신뢰 기반 위에서 리스크관리자의 역할을 글로벌하게 확대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
- 신성장영역 확대 등에 앞서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소비자신뢰를 제고
 - 기존에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여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화에 기여해온 전통적 역할을 강화
 - 국내보험시장에서 글로벌 보험회사들과의 경쟁 경험을 기초로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보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 금융겸업화 환경 하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험회사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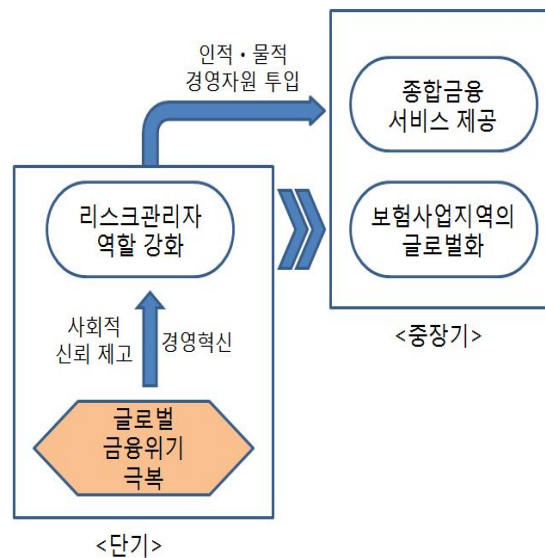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비전



- 보험산업의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 사업지역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함.
 - 각종 환경변화에 의해 개인 또는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양해지면서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 고객의 복합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사업도 해외진출을 통해 사업지역을 다양화 하여 글로벌 보험회사의 출현을 유도
 - －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보험회사(그룹)를 출현시키고, 2030년까지 10대 글로벌 보험회사(그룹)를 출현시킴.
-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화를 기초로 종합금융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발전경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경영혁신을 통해 미래도약을 강화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다양한 조치를 강구
 - － 이와 함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상장 등을 통해 자본능력을 확충하고, 보험지주회사를 활용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준비된 역량과 신뢰도를 기초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확보는 물론 보험사업의 글로벌화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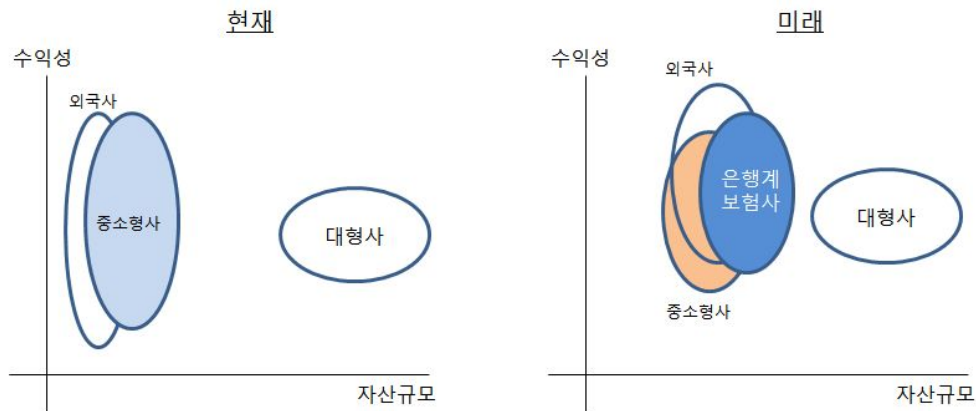
보험산업 발전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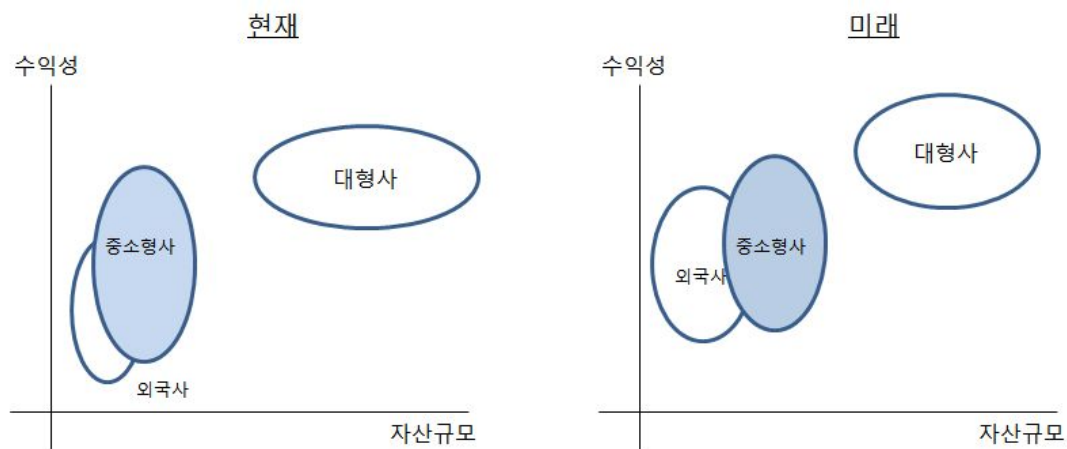
(보험업의 구조변화)

- 향후 국내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약화 되면서 은행계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 국내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형사간 인수·합병을 통한 일부 구조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생명보험업의 구조변화



손해보험업의 구조변화



□ 그러나 해외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꾸준히 강화하여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진전시키고, 2020년까지 아시아 3대(글로벌 15대) 글로벌 보험회사(그룹)⁶⁾를 출현시킴.

○ 대형사가 글로벌 보험회사를 지향하는 반면에 중소형사(은행계 보험회사 포함)는 내국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재무적으로 건전하며 특화된 보험회사로 발전하도록 함.

6) 글로벌 보험회사란 여러 국가에 걸쳐 보험영업을 하면서 세계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을 말함.

- 보험회사가 대형화를 추구하더라도 거시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규제는 강화

4) 보험산업 발전비전의 효과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보험회사(그룹)의 출현은 개인, 기업, 사회 전체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함.
 - 개인의 입장에서 노후소득, 건강 및 간병, 배상책임, 소송비용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발생가능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거래위험, 배상책임, 종업원복지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발생가능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연재해, 재난, 환경오염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발생가능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보험산업의 발전은 금융시장 내 장기투자자산을 형성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외부충격으로 인한 금융불안정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임.
 - 보험산업이 발달하여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기반이 확충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큰 단기성 자본의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을 완화시킬 것임.
- 또한 글로벌 대형보험회사의 출현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국내금융자본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보험산업은 금융권역 중에서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며,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서도 다른 권역을 크게 능가함.

- 상대적으로 국내자본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에 따라 외국금융자본의 영향력 확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임.

금융권역별 종사자 수 비교¹⁾

(단위: 명, 조원)

구분	은행	증권	보험 ²⁾
종사자	139,842	43,959	484,326
자 산	1,875	141	392

주: 1) 2008년 12월말 기준임.

2) 임직원 56,593명, 보험설계사는 321,281명, 대리점 사용인은 106,452명임. 단, 보험 관련 서비스(손해사정법인, 보험계리법인 등) 종사자는 제외

5) 정책과제

① 사회적 신뢰 제고

(단기과제)

- ☐ 보험산업 발전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성장영역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불완전판매 등으로 낮아진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불완전판매 축소를 위해서는 과당경쟁 해소, 보험모집종사자의 자기책임 강화,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 등의 조치가 요구됨.

- 보험회사 및 모집조직간에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규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과당경쟁 발생 가능성 축소
- 대형 독립대리점과 금융회사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발생에 따른 1차 책임을 지고, 모집종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대리점 영

업보증금 차등 도입 등을 검토

- 공시자료나 보험상품정보를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

(중장기과제)

□ 불완전판매 축소를 위해서 보험약관의 지속적 개선, 보험금 지급기준의 객관화 등의 조치 검토

- 보험약관을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함과 아울러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
- 보험금 지급 기준의 객관화를 위해 보험약관상 지급기준 중 전문적이거나 범위가 모호한 부분은 감독당국의 주관 하에 표준해설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검토

□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성보험의 도입, 고령자 등을 위한 간이심사보험 개발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원활하도록 지원

-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보험 풀을 구성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가입자간 상호보조금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 고령자 및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소액급부 위주의 상품설계, 지급총액의 한도 설정, 가입초기 보험사고에 대한 차등지급 등의 보완적 조치를 통해 보험가입의 용이성 확대

② 신성장 영역 확충

(중장기과제)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민영보험의 사회보장기능 강화, 배상책임 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약화되어 있는 성장동력 발굴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보장수준이 높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재정위기가 확대되고 있어 민영보험의 보완적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 표준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5%에 지나지 않아 노후생활 대비가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확대 검토
- － 건강보험 분야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할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평가기능을 도입하며, 보장성보험과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 부여 필요

○ 장기보험 분야에서 경쟁격화와 성장정체가 예상되므로 일반손해보험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 방안 강구

-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따른 손해를 보험으로 해결하도록 인식을 전환시키고,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법률에서 강화하도록 함.
- － 거대리스크를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관리·전가할 수 있도록 거대재해 통계를 집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체적 리스크 전가를 위한 자본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 국내시장의 성장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영전략을 통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자본을 확충하고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노력 강화

○ 성장성이 유망한 지역의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등의 적극적 진출 전략을 통해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

- － 적극적 글로벌화 전략에 앞서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해외진출을 위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장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 － 자본확충 노력과 함께 해외보험시장 조사를 강화하고 경영의

현지화를 위한 인재 육성 및 경영관리기법 개선

-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의 수많은 자회사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 확립

□ 보험회사가 획일적인 수익구조 모델에서 벗어나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 신탁·보험 등이 연계된 복합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율 체계를 재검토
- 진료 및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분야에서 보험회사가 적절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필요

③ 보험제도 및 인프라 확충

(단기과제)

□ 대학과 산업이 연계된 전문가 양성시스템을 체계화 하기 위해 보험학계, 연수기관, 보험업계가 연계된 총체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

□ 모집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 강화

- 대형 독립대리점과 금융기관대리점의 판매자책임 강화를 위해 직접적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배상자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 수준을 인상하며, 선지급 수당제도를 개선

— 이와 함께 자율규제 차원에서 독립 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방지, 모집수당 운영, 법규준수, 윤리강령 등을 규정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모집조직의 내규에 반영

- 보험모집종사자의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고,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모집조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불완전판매율

이 높은 모집조직에 대해서 감독 및 검사 강화

- 자율규제 차원에서 부실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모집경력이 있는 모집종사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모집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

□ 보험사기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죄 신설을 검토하고 보험사기 인지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보험사기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적정한 양형을 통해 보험범죄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을 검토
- 보험사기 인지에 필요한 정보는 민영보험에 국한하지 않고 공제 및 사회보험 관련 정보도 포함하며, 이를 위한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및 유지

□ 보험사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국제적 감독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보험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진출대상국에서 규제의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고 OECD나 IAIS와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규제 개선에 노력
- 보험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보험관련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하는 한편으로 해외진출 정부 유관기관(KOTRA, 수출입은행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중장기과제)

□ 영업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자율규제 능력을 확충하며, 이에 따른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규제와 체계적 역할 분담

- 제한된 영역에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적용할 강제적 제재 수단 강구
-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험전문 자격증 관련 제도를 개편하며, 이와 함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마련
 - 자격증 취득단계를 복수화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
-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를 기능별로 적절한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정립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이용의 효율성이 조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을 보험업법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수행상의 혼란을 없애고 보험정보 관련 규제를 체계화
 - 아울러 신용정보법은 보험권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의 정보를 신용집중기관이 관리하는 근거법으로서만 기능하도록 개편
- 보험모집조직의 선진화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모집조직의 활성화하고 수당체계 개편 및 모집수수료 공시 제도 도입 검토
 -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중심의 보험모집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을 중개할 수 있는 보험중개사 제도를 활성화
 - 수당체계를 자문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보험모집수수료 공시제도의 단계적 도입 검토

라. 비은행산업 및 서민금융

1) 비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신용계층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이들을 주 고객군으로 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성격이 크게 퇴색한 가운데 자산운용이 마땅치 않아 수신의 상당 부분을 중앙회(연합회)에 위탁 운용
 -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건전성, 자산구성 등에 있어 개별 저축은행간 동질성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부동산 부문에 여신이 집중되면서 수익성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변화
 -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래 40여년에 걸친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해 단순 여·수신 중심의 영업구조로는 서민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

나) 여신전문금융기관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자금력 향상,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의 도입취지가 다소 퇴색
 - 일부 여전사의 경우 부수업무인 기업대출, 가계대출 등의 취급을 확대하고 있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업종과의 차별성 약화
 - 카드 결제대상의 제한, 엄격한 대출업무 취급비율 제한 등 현행 법의 규제체계가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점 존재

2) 비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가) 저축은행

① SWOT 분석

강점	기회요인
○ 고유의 고객군 존재 ○ 의사결정의 신속성 ○ 환경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	○ 저금리 기조 ○ 정책당국의 감독차별화 및 규제 완화 의지 ○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보강
약점	위협요인
○ 고객의 높은 신용위험 ○ 제한된 업무영역 ○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저성장 기조 ○ 저신용층의 경제력 약화 ○ 은행과의 경쟁 심화

② 비전 및 정책방향

- ☐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기관”으로 비전을 설정
- 서민과 중소기업을 주 고객군으로 삼아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시장의 주요 축으로 성장
 - 저축은행은 건전성과 지배 및 소유구조를 개선하여 규제완화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
- ☐ 저축은행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하는 가운데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체제”를 구축함에 있음.

- 원칙적으로 은행과의 수신금리차를 활용한 저축은행의 자산확대를 억제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시감독을 대폭 강화
 -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부실여신을 매각 또는 상각함으로써 건전성 개선을 유도
 -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취급한도를 총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거액여신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 소매금융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신규진입을 허용하여 산업전반의 장기적 건전성 제고
- 중·대형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책임 및 권한 확대, 감사인의 독립성 확대, 준법감시체제의 강화 등
 - 저축은행의 자본확충과 시장의 경영감시가 더욱 용이해 지도록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장유도
 -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을 강제하고 자발적 M&A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
 -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M&A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없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진입을 허용
- 중앙회 중심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등 중앙회의 자율규제 및 자원공유 기능 확대

나) 상호금융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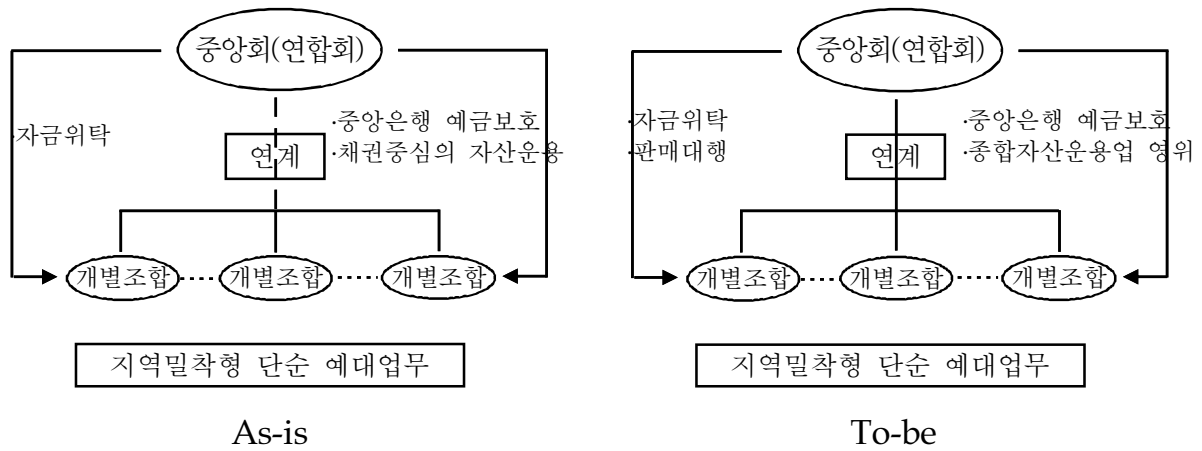
① SWOT 분석

장점	기회요인
○ 고객군의 높은 충성도 ○ 조합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지원	○ 금리경쟁력의 지속 가능성 ○ 저신용계층에 대한 공적 신용보강 ○ 중앙회의 기능 확대 가능성
약점	위협요인
○ 고객군의 높은 신용위험 ○ 제한된 업무영역 ○ 낮은 신인도 및 취약한 인력	○ 신용위험 상승 가능성 ○ 종합금융서비스 수요 증가

② 비전 및 정책방향

- 상호금융회사는 “기초자치단체지역에서 조합원과 서민 대상의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를 지향
 - 각 업권별로 조합 상호간 합병을 통해 최소 수준의 대형화를 추구하되 무리한 자산 확대보다는 성장의 안정성을 확보
 - 중앙회 중심으로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을 보다 강하게 추진하고 이를 대형화의 연결고리로 활용
 -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지배구조에 반영하고 중앙회(연합회)의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합과 중앙회(연합회)의 관계를 설정
- 상호금융회사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새로운 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② 상호금융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조합 운영체제 개선, ③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감독 강화에 있음.
- 연합회 및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상호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 조합의 취약한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중앙회 중심의 자산운용을 확대
 - 단 중앙회의 비대화 방지와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 도입
 - 개별 조합의 경우 자체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하기보다는 중앙회 자회사의 투자 및 자산운용상품 판매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
- 조합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조합 리스크관리 인력의 순환보직 금지하고 중앙회가 중개시장 구축 또는 파생상품 활용을 통해 지역 조합들의 리스크를 상호 분산
- 중장기적으로 1기초자치단체당 1조합의 원칙 하에 건전성 기준 강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조합간 합병을 추진
 - 조합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에서 신용사업부문에 전문성을 지닌 담당 전무 및 상무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로 전환
 - 사업마진 축소에 대비하여 내부잉여금을 확대함으로써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 및 신협 신용사업회계의 재무안정성 제고
- 회원조합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지원·지도·감사·훈련·홍보·연구·조사기능을 대폭 강화
- 개별 조합의 취약한 인력 및 규모를 감안하면 상품개발, 감독,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앙회 및 연합회의 조합 지원기능을 크게 강화될 필요
- 앞으로 개별조합이 기초자치단체의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예대업무에 주력하고, 중앙회(연합회)의 단계적인 업무영역 확대로 중앙회에 대한 개별조합의 자산운용 의존도가 상승하는 경우 중앙회와 개별조합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어 하나의 네트워크형 금융기관을 구성할 전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① SWOT 분석

강점	기회요인
○ 타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비해 넓은 업무영역	○ 취급업무의 포괄주의 규제 도입 ○ 금융업무의 고도화 및 세분화에 따른 틈새시장 확대
약점	위협요인
○ 위기 시 유동성 위험에 쉽게 노출 ○ 취약한 점포망 ○ 카드사를 제외하고 금융권내 역할 모호	○ 취약한 고객기반 ○ 신규진입에 따른 경쟁심화

(2) 비전 및 정책방향

-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는 “자본력 및 신용도에 근거한 종합여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과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기반으로 여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형 종합여신금융회사로 성장경로를 설정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을 4개업종(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으로 구분
 - (제1안)대부분의 여전사가 2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및 소비자 금융업을 묶어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
 - (제2안)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을 현재와 같이 임의등록제로 하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금융업을 강제등록제로 운영하는 등 규제 차등화를 위해 현행 4개의 여신전문금융업종에 소비자 금융업을 신규추가
- 종합여신금융업(소비자금융업)을 등록의무업종으로 하여 소비자금융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 건전성 문제 등을 공적감독을 통해 최소화
 -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마련
 -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업무영역 규제를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대부업체의 여신금융회사 전환은 대부금리 인하와 대부시장 확대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용
- 세제혜택 차별화 등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가계부채 증가 등 신용카드 이용 과다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
 -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여 기능 및 대손위험이 없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결제 범위를 대폭 확대

- 향후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과정에서 전업카드사는 통신사의 카드업 진출로 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구조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종합여신금융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

3) 서민금융 체계 확립 및 서민금융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금융회사가 저신용계층을 중심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여·수신 시장에서 서민금융회사의 비중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소액신용공여를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시장의 초과 수요량은 수요량 추정방식 및 전제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최근 정부의 공급 확대를 감안하면 5조원 수준으로 추정
 - 서민금융은 (1) 금리의 문제, (2) 자금조달의 문제, (3) 건전성규제의 문제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순수 시장원리에만 의존할 경우 활성화가 어려움.
 - 과거 서민금융의 주요 축을 담당했던 저축은행이 부동산부문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등 서민금융회사가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하는 것도 서민금융 위축의 원인
 - 정부는 공공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상당 부분 정부가 메우는 양상
 - 서민대상 무담보 신용대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담보대출 중심의 개별 금융회사 이윤극대화의 결과로서 전형적인 시장실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

- 한편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시중은행이 복합금융그룹의 일원으로 변모하면서 신용이 낮은 고객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틈새시장 금융회사의 부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

나) 정책 과제

- 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이 시장원리에 의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서민금융 체계를 확립

① 금융권별 역할 정립: 금융공급의 계층구조 확립

(단기과제)

- 여신시장에서 금융권별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무담보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 확립
- 시중은행의 경우 평판위험, 고객군의 차이, 비용측면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소비자금융시장에 진출하도록 유도
 - 리스 및 할부금융회사(종합여신금융회사)는 서민층 대상의 소액 신용대출 시장에 직접 진출
 - 소액신용대출은 수요의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서민층의 신용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신용평가 방식의 개선과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별화로 상쇄 가능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는 여신측면에서는 지금도 저신용계층을 주 고객군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무담보 여신서비스를 담당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축은행 중앙회 및 각 상호금융회사 중앙회는 소액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독자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 저축은행 및 지역조합을 지원
- 한편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은행이 동일한 명칭(공동브랜드)의 소액신용대출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마케팅을 위한 광고비를 절감하고 인지도를 제고

□ 한편 중앙회는 자회사를 통해 소비자금융 중심의 종합여신금융업 진출하고 각 저축은행은 총자산의 일부(예를 들어 2%)를 해당 자회사에 위탁운용하는 방안 검토

- 대부시장이 외국계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액신용대출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 저축은행이 소규모로 취급하는 것은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을 수 있음.
- 소액신용대출 취급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저축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회 자회사는 위탁자산을 소액신용대출로 운용

□ 현행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과 창업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소금융사업의 영역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혜자 증대를 도모

<표>

제도권 서민금융 체계(예시)

	현행	개선방안
은행	· IMF 위기이후 위험관리 강화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 은행권 서민금융 부재	→ · 자회사 방식으로 소비자금융에 진출
저축은행	· 외형확대 경쟁 · PF 등 고위험 대출 · 예보제도에 무임승차 →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 위축	→ · 과도한 자산확대 억제 · 소액대출평가시스템 개발 유도 → 지역기반 서민금융에 주력 · 중앙회의 종합여신금융업 진출
상호금융	· 여신심사역량 부재로 낮은 예대출(중앙회 재예치)	→ · 소액 신용대출상품 공동개발 등을 통해 조합원 신용대출 확대
여전	· 자동차리스 등 위주로 영업	→ · 종합여신금융업을 신설하여 서 민금융 확대 유도
대부업	· 서민금융시장 공백을 계기로 규모 확대 및 소비자피해 급증	→ · 시장규모 축소 유도 · 대형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 으로 전환 검토

□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공급 대상에서 경시될 수 있는 저신용층 문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해소

<표>

非 제도적 서민금융 지원체계 (예시)

①	·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집단	→ ·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복지 정책으로 접근
②	· 현재 경제활동능력이 없지만 미래의 경제활동능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집단	→ · 미소금융 등 대안금융
③	· 경제활동능력이 있으나 기존 채무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정상적 금융공급이 어려운 집단	→ · 신용회복 지원제도

② 세제혜택과 소액신용공여 연계

(단기과제)

- ☐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탁금 중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평균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예를 들어 50%)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의무화
 - 기준비율에 못 미치는 부분은 대출 확대 또는 예금 축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함.
- ☐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비과세예금 취급을 허용하고 이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③ 소비자금융업무 도입

- ☐ 종합여신금융회사의 주 업무에 소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도모
 - 소비자금융은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및 무담보대출(어음할인 포함)을 의미
 - 종합여신금융회사의 주 업무에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 외에 소비자금융 포함
 - 종합여신금융회사의 경우 대출업무 취급비중 50% 상한을 폐지하거나 완화

5. 금융시장의 효율화

가. 단기금융시장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자금거래는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CD, CP, RP시장 등이 각각 발전
 - 단기금융시장에서 콜시장은 잔액기준으로 약 17%의 비중(2009년 1분기)을 차지하나 익일물 거래가 집중되는 관계로 거래량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
 - 최근 단기금융시장 선진화정책 등에 힘입어 2008년말 기관간RP 잔액은 전년말 대비 10.3배 증가, CD잔액은 3% 증가, CP잔액은 15% 증가
 - CD는 약 111조원, 기관간 RP는 약 93조원, CP는 약 92조원의 잔액을 기록(2009년 1분기말 잔액기준)
- 단기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금조달기관과 자금운용기관 모두가 콜거래를 선호하여 기관간 단기자금거래가 콜거래에 집중
 - 콜거래 집중으로 지준시장으로서 콜시장의 기능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콜시장에 과도하게 참여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기간물 거래 부진
 -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가 익일물 콜거래에 집중되고 RP, CP 등 기간물 단기자금거래가 부진하여 단기금융시장의 균형적 발전 미흡

- 마지막으로 CP의 모호한 법적지위 등으로 국내 CP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CD 시장도 일부 구조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CP의 경우 CP의 법적지위와 더불어 정보의 투명성 미비, 실물 발행 의무화와 분할양도 금지로 인한 유통시장의 발달이 부진하며, CD 시장도 CD금리의 대표성 부족 등 문제점을 노출

2) 정책과제

- 콜시장, 기관간RP 시장, CP 시장, CD 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세분화된 시장별 발전전략을 추진
 - 시장별로 존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정비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 단기금융시장은 과거 국내 금융시장의 필요에 따라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별 기능 정상화를 통한 발전전략이 바람직
- 단기적으로 CP 시장 및 RP 시장의 제도개선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단기지표금리의 정착 등 시장 효율화 증진을 추구

가) 기관간RP 시장의 활성화

(중장기과제)

- 기관간RP 시장을 비은행금융회사의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수요기반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
 - 기관간RP 시장의 육성은 장단기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기간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 채권시장의 유동성 확대,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단기사채 제도의 도입을 통한 CP시장 개선

(단기과제)

- 또한 기존 CP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검토와 더불어 단기사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
 - 단기사채는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로 기존 CP와 동일한 상품성은 유지하되, 이중적 법적지위나 실물발행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특징
 - 전자화된 단기사채 도입으로 기존 CP시장의 불투명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도를 제고

다) 과도한 콜시장 의존도의 완화 및 유동성 조절시장 기능 회복

(단기과제)

- 콜시장이 금융회사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조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도한 콜시장 편중 현상을 완화
 - 비은행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영업 및 운영자금 수요는 시장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간 RP 시장 등에 의해 충족되도록 유도
 - 또한 일부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콜차입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라) 단기금융상품 유통시장 활성화추진

(단기과제)

- 중장기 관점에서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상품 유통시장 활성화 추진 필요
 - 비교적 만기가 긴 단기금융상품의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금융상품의 유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마) 단기금융시장 지표금리 개발

(중장기과제)

- 금융시장의 시장간 연계 등을 통한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표금리의 개발이 필요
 - 현재 국내 단기금융시장에서는 CD금리 등 다양한 금리지표가 공표·사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을 좌우하는 은행간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금리(Koribor)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상황
 - 따라서 코리보의 신뢰성 증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또는 기존 단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이 신뢰성하는 단기금리지표를 제공이 필요
 - 일본의 단기금융시장 지표금리인 Tibor는 정책적 지원에 의해 공식적인 지표금리로 정착됨.
- 콜시장에 현재처럼 비은행금융기관의 과도한 참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처럼 순수한 지준시장으로 유도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
- 개별은행의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권 기간물 거래시장으로서 은행권 금융시장(inter-bank market) 조성을 검토

나. 주식시장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주식시장의 주요 현황

-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이 약 887조, 코스닥시장이 약 85조, 프리보드가 7400억 수준
- 상장기업수는 2000년 1200개 수준에서 최근 1800여개로 10년간 50%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 증가에 기인함
- 한국주식시장의 월간 거래량은 최근 10년 평균 188억 주, 거래대금은 104조에 이르며, 월간 거래회전율은 21%에 이름
- 한국주식시장의 주식투자인구는 2000년 약 430만 명에서 2008년 57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제도개선과 투자자의 확대 등으로 주식시장은 양적·질적 성장을 하여 왔음

□ 한국주식시장과 해외주요거래소의 주요 현황 비교

- 한국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2009년 8월 현재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 중 17위(아시아지역에서는 7위)를 차지
- 한국시장의 기관투자자비중은 9%~21% 수준으로 해외 주요시장에 비해 낮은 편
- 세계 주요시장 변동성과 비교할 때, 2005년도 후반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기록했으나, 최근 1년간 한국시장의 평균변동성은 30개 주요시장 중 17위로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한국주식시장의 문제점

- 신규 상장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은 신규 상장이 정체되어 있음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시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투자행태가 단기매매에 치중되어 있어 투자자의 투기적 행태, 시장과민반응과 연관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시장붕괴에 취약
-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 단기매매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변동성을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
- 주식시장의 기관투자자 역할이 미비하여 경영감시기능이 취약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불공정거래는 선량한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투자자와 상장기업의 이탈요인으로 작용
- 호가단위가 불합리하여 과도한 거래비용을 초래

2) 정책과제

(중장기과제)

- ☐ 우량기업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부담 완화 정책 수립
 -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기업에 대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시·회계부담을 완화
 -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상장요건 제도의 개선과 상장유지비용의 절감 방안 도입
 - 수시공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시공시관련 서식의 개선 및 하부구조 운영의 일원화 도모
 - 모범적인 공시사례(Best Practice)를 적극 발굴·전파하여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규모에 맞는 적정 공시 유도
- ☐ 유가증권·코스닥·프리보드시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

- 유가증권시장은 전통적 우량기업시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혁신산업 대상 시장으로 발전시키며, 프리보드시장은 코스닥시장과의 연계성을 지니는 신시장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시장별 역할부담을 통해 기업 특성별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
-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체계의 구축

□ 코스닥의 미래 핵심유망산업 지원 기지화

- 신성장동력기업은 소규모, 신생, 신사업 기업으로써 기존의 상장기업과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상장, 공시, 매매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제도를 구축
 - *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질적심사기준 마련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시장의 신뢰성·효율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상장기업에 비해 높은 공시 수준을 유지
- 장기적으로 기술평가 평점이 우수한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신시장 마련 방안 검토
 - * 과거 실적보다는 장래의 높은 성장성을 기초로 상장요건을 마련하는 별개의 신시장 구축
-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실질심사의 강화, 정기적 IR의 의무화, 마일스톤 공시 도입, 단일가매매제도 또는 유동성공급자 제도 개선

□ 상장기업 공시에 대한 기업의 책임강화

- 투자자 신뢰성을 훼손하는 상습적 불성실 공시와 조회공시 허위 답변, 미확정답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시관련 벌점체계 개편
- 상장기업 공시담당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공시교육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공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

□ 코스닥 실질심사제도의 강화

- 최초상장시의 질적요건과 상장실질심사를 강화하여 불건전 행위로 인해 상장폐지되는 기업을 사전적으로 최소화
- 코스닥시장의 성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심사제도 마련 및 시장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퇴출 확대
- 실질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

□ 거래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 보완

- 한국시장의 거래비용은 시장의 규모와 질적 수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의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
- 매매서비스 제공비용에 근거한 매매수수료 결정체계 도입
- 일부 가격대의 호가단위 개선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금융지원시스템 마련
- 기관투자자의 대량매매수요를 충족하고 대량매매로 인한 가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쟁적 대량매매시스템 도입

□ 주식관련 신상품을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제고해야 함

- 우량 비상장 기업의 SPAC을 통한 상장 활성화 추진
- SPAC을 통한 구조조정의 활성화 도모
- 상장요건에 질적요건을 도입하여 SPAC 제도의 탄력적인 제고
- 채권, 다양한 지수 등에 근거한 ETF 도입을 통해 투자상품의 활성화 도모하되 지수의 산출에 엄정성 제고

□ 투자자교육 강화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시장의 불건전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투자, 분산투자, 장기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다. 채권시장

1) 현황과 문제점

- ☐ 국내 채권시장의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이는 국고채와 통안채의 발행 확대에 기인함
- ☐ 무보증회사채 발행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을 저점으로 발행규모가 다소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업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의 회사채시장의 기능은 미흡한 상황
 -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는 2007년 하반기에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축소되고 있음
 - 투자자의 위험선호가 보수적 경향을 보임에 따라 고수익채권 발행이 점차 위축되고 있음
- ☐ 채권유통시장은 국공채 발행증가와 정부의 채권시장 육성노력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였음
 - 2008년도 채권거래량은 1997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
- ☐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신용사건 및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발행시장에서 회사채의 비중은 낮은 상황임
 - 주관증권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채권거래에 있어 자기상품투자(principal investment)의 관점에서 총액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증권회사들은 회사채의 단순 중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분석, 인수 및 중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고수익채권시장은 채권발행이 가능한 중견 중소기업의 수가 적고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저조함
- 채권 유통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며 가격발견의 효율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채권딜러의 경우 시장조성기능 역할에 적극적이지 못함
 - 채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외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낮은 상황
 -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을 2010년 1/4분기중 도입할 예정
 - 채권 중개수수료의 차별화 미흡은 회사채유통시장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2) 정책과제

(중장기과제)

- 펀드의 채권 수요 확대
 - 회사채 수요기반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가 요구됨
 - 일정규모 및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집중투자펀드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채권형펀드의 활성화를 유도
- 국제적 규범에 적합한 채권 발행절차 마련
 - 주관사 업무에 대한 책임부담 강화 및 주관사수수료의 정상화
 -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사업설명서가 작성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주관사의 기업실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제도 개선
- 장외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 (단기과제) : 장외채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권 거래 전용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
- 장외채권 전자거래 도입을 통해 장외시장의 투명성 제고
- 장외채권 전자거래 전문기관의 허가기준의 마련
- 미국의 Reg ATS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장외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의 규제방안 검토

□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안정적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고수익채권 시장 활성화

- 고수익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지닌 채권이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으로 구성하여 부도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의 투자가 요구됨
- 신·기보를 통한 P-CBO의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

*** 미래 핵심산업에 속한 중견기업을 기초로 P-CBO 지원확대**

- 고수익채권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혁신중소기업투자펀드를 설정하고 손실의 일부를 보증기관이 우선적으로 흡수하도록 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한편 세제 지원을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강구

*** 특히 채권, 전환사채 및 기술담보부 채권 등을 기초로 발행**

□ 회사채 만기의 확대를 위해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장기적 정보제공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의 장기화가 유도되어야 함

- 채권의 유통시장 활성화가 장기채권 투자의 선결과제임
- 주간사의 채권 발행기업의 분석능력 강화

□ 채권의 발행 및 매출에 주력하는 인수회사의 기능과 투자자보호에 주력하는 수탁회사의 기능을 분리하여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함

□ 장기과제

-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 유도
- 한국채권시장 발전을 기반으로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 추진
-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의 지속적 추진

라. 파생상품시장

1) 장내파생상품시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세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증가율이 크게 감소
 - 2008년 전세계 파생상품거래소 선물 및 옵션 전체 거래량은 총 176억 5천3백만 계약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
- 국내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2003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선진국 시장과 신흥 시장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장내파생상품 중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 3년 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일부 개별주식선물 이외의 상품에 대한 거래는 부진하며, 일부 상품은 유동성 확보에 실패한 상황
 - 또한, 경제규모와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장내파생상품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주요 곡물 및 원자재 수입국가이면서도 금, 돈육 선물을 제외한 실물상품관련 장내파생상품이 거의 전무한 상황

나) 정책과제

(단기과제)

- ☐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의 경쟁력 유지
 - KRX는 최근 KOSPI200 선물의 거래를 CME의 Globex 시스템과 연계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주요 해외 거래소들과의 KOSPI200 선물·옵션상품의 연계거래 확대를 추진
 - 기존상품의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 장기적인 금리변동위험의 관리를 위해 장기금리 선물인 10년 국채 선물도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 통화선물의 경우 엔, 유로 선물시장의 유동성 확보 필요
 - 엔, 유로선물시장의 유동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현물시장의 부재로 인해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 ☐ 금 선물은 밀수입, 부가가치세 부과 등의 문제로 상장이후 거래가 부진하며, 돈육선물의 경우에도 잠재적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최근 정부는 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금 현물거래소 도입을 검토 중
 - 돈육 선물은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 중장기정책방향
 - 실물상품 선물은 금융상품 중심의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발전이 요구되는 부문임
 -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권관련 선물시장의 개설을 준비할 필요

2) 장외파생상품시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세계시장에 비교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 국내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딜러시장의 미발달은 국내 장외파생상품 취급 기관의 역할이 상품의 개발자 및 공급자가 아닌 유통 및 판매 기능을 담당하거나 최종 사용자(end user)로만 제한됨
- ☐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주요 인프라는 아직 국내에 보급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별도의 파생상품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소와 자동거래플랫폼은 아직 국내에 보급되지 않음
 - 금융당국은 거래정보저장소와 구별되는 별도의 파생상품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 외환전산망: 한국은행 운영 담당, 개별 거래내역 집중
 - *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 취합, 거래내역 일부와 감독정보

나) 국제적 논의 방향

- G20: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강화의 구체적 목표, 이행시한을 적시한 성명서 채택
 -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적절한 경우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거래가 체결되어야 하고,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CCP(central counterparty) 청산소(clearing house)를 통해 청산되어야 함
 - 또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에 보고되어야 함
 - CCP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수준의 자본요구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 G20는 Financial Stability Board(FSB)와 관련 회원기구에게 정기적으로 집행상황과 이러한 조치가 파생시장에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요청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장외파생상품 시장법안인 “Over-the-counter Derivatives Markets Act of 2009” 마련
 - 오바마 행정부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를 위하여 관련 법안을 2009년 8월 11일 의회에 제출
 - 이 법안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규제가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를 4가지로 제시
 - * 장외파생상품으로 인하여 과도한 위험이 금융시스템에 부과되는 것을 방지
 -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
 - * 시장조작, 사기,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행위 방지
 - * 부적절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로부터 비전문투자자를 보호

- EU: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에서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안인 “Ensuring efficient, safe and sound derivatives markets” 제시
 - 강화안에서는 4가지의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목표를 제시
 - *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포지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감독당국이 보유
 - * 장외파생상품시장과 참여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 *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운영프로세스를 효율화
 - * 거래상대방위험을 감소하고 중앙집중화 된 인프라 사용 장려

다) 정책과제

(단기과제)

- 복잡하고 불투명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특성이 감독기관의 감독실패와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하여 금번 금융위기가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음
 - 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간 협조와 관할권의 재조정, 시장의 투명성과 위험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계약이 표준화되고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가 가능해지면 거대 금융회사의 부실예방과 사후처리가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소 설립의 법적근거 확보
 -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에 청산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청산서비스를 위한 개정작업이 필요
- 장외파생상품 CCP 운영주체의 선정 및 서비스 시작
 -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의 법적 근거에 따라 CCP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표준화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을 대상으로 청산서비스를 시작

(중장기과제)

□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서비스 대상의 확대

* **G20** 피츠버그 합의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적용

- 전자거래플랫폼의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
- 거래정보저장소의 기능 확충

□ 한국은 장외파생상품의 주요 인프라 도입 시 국제 공조의 틀 내에서 국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산소, 정보저장소, 전자거래플랫폼 등의 인프라 도입은 규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마.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증권시장

1) 현황 및 문제점

- ☐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화와 유동화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credit risk transfer)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자산유동화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 감독기구들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규제체계 개선작업을 추진
 - 자산유동화증권 위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 특정부문의 집중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유동화와 관련한 자료를 집중화
 -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차단하는 시장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외국과는 다르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가 마련되고 시장이 형성
 -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규모는 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
 - 국내의 경우 카드사태와 같이 자산유동화가 신용위험을 다른 부문으로 이전시켜 금융불안정성이 높아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 최근에는 부동산 부문의 침체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Project Finance(PF)에 대한 부실화 우려도 제기

- ☐ 한국주택금융공사(KHFC)는 2004년 출범한 이래 은행이 실행한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MBS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MBS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음

- 국내에서는 주식연계구조화채권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3년부터 ELS(Equity-Linked Securities)라는 명칭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입 이후 저금리 환경에 힘입어 중요한 투자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
 - 고수익 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 확대로 구조화채권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 금리연계구조화채권시장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은데 비해 주가연계구조화채권은 ELS로 국내에 도입되어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소매시장의 성격으로 발전
 -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

2) 정책 과제

(중장기 과제)

- 한국의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장을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자 확대, 공시제도 개선, 자산관리자 범위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
 - ABCP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사채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장기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판매된 주택담보대출이 신속히 유동화 될 수 있는 효율적 기반 시스템 마련
 - 금융회사들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주택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
 - 모기지예 내재된 위험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실시간 적용 가능한 가격결정 시스템의 확립이 필수적임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

□ 구조화채권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 구조화채권은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므로 전문투자자들도 상품에 내제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위험관리 없이 투자할 여지가 있어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시장감독이 필요
- 특히 구조화채권시장은 저금리 하에서 투기성의 투자행태를 보일 수 있어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
- 구조화채권시장은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소매시장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 예상되는 바 소액투자자의 보호가 필수적

□ 소매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장치 마련

- 기관투자자의 구조화채권에 대한 투자행태에 대한 감독 필요
 - * 특히 은행이나 **MMF**, 연기금은 금융건전성유지를 위해 중요한 기관들이므로 정기적인 구조화채권의 포지션 감독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유동화, covered bond 등 구조화증권 발행 및 공시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증권화 관련 포괄적인 법제를 도입

- 구조화증권은 저금리 기초하에서 투기적 투자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시장감독이 요구되며 공시강화, 투자자교육, 설명의무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 마련을 위해 Covered Bond제도의 도입을 검토
- 자산유동화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다양한 구조의 증권화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됨
- 자산유동화와 신용파생상품 및 자산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증권화를 포괄하는 법제의 도입을 통해 증권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

바. 퇴직연금시장

1) 현황과 문제점

□ 퇴직연금 가입자 및 적립금 추이

-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국내 퇴직연금은 가입자 수와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판매실적은 계약건수 69,181건, 가입자 수 148만명, 적립금 9조 1,047억원을 기록함
- 시장규모면에서는 양적 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나, GDP 대비 퇴직연금 비율을 볼 때 미국은 87.5%, 일본은 1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87%에 그치고 있어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매우 미흡

□ 퇴직연금 유형별 현황

- 2009년 9월말 DB형 적립금 비중이 64.4%로 DB형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퇴직연금 금융권역별 점유율 및 적립금 운용현황

- 퇴직연금 금융권역별 점유율(적립금액 기준)은 은행, 보험, 증권사 순으로 은행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음

* 2009년 9월말 기준 금융권역별 점유율은 은행 52.5%, 보험 35.0%(생보 29.2%, 손보 5.8%), 증권사 12.5%순임

* 9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52개소임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85.1%(7조 4,517억원)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퇴직연금 적립금은 DB형의 93.0%, DC형의 66.0%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돼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음

- 퇴직연금시장의 적립금 및 가입자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 도입초기 시장의 전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9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9조원에 이르지만 아직은 도입초기 전망 기대치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함
 - 기존 퇴직보험 및 신탁의 퇴직연금 전환이 저조한 실정임
 - 퇴직연금 적립금 중 85%이상이 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에 편중되어 있어 안정형 자산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 경향을 보임
-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 퇴직연금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제도적 한계점이 있음
 - 세제상의 혜택 미흡, 투자상품 선택의 제약,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미도입 등은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2) 정책과제

(중장기과제)

- 사외적립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활성화
 - 사외적립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
-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의 이행 촉진
 - 향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연금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신설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예외규정 불인정)하고 퇴직연금 전환 기업에 대한 메리트 부여(법인세 혜택, 신규사업 확대, 저리 대출 등)

- 퇴직금 사내유보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30%)를 매년 10%씩 하향조정하여 궁극적으로 폐지
- 연금소득 공제한도는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제한하여 퇴직연금 재원의 중간 소멸을 방지함
-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한 엄격한 동의절차를 완화하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음
- 퇴직부채 누적액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전환 촉진책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수급권 보호 장치 강화

- 단기적으로 채권자 우선변제제도(3년)를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채불임금 포함)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도입성격에 부합하도록 재조정
- 중장기적으로 DB형의 최저적립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100%까지 상향 조정

□ 퇴직연금 관련 세제 개선

- 확정기여형(DC형) 가입 근로자의 추가납입분과 개인연금 납부액을 분리하여 별도로 소득공제를 허용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 퇴직금제도가 존치되어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간 단계로서 퇴직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축소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의 70%까지 주식투자가 가능하나 확정기여형은 40%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확정기여형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여 가입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관련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대한 규율과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규율 체계를 분리 검토 (예: 근거법령 분리 등)